

# 研究報告書

社會主義體制變化에 따른 對應論理 比較研究

1992. 12. 24

韓國國際政治學會



이 보고서를 통일원 용역과제 “사회주의 체  
제변화에 따른 대응논리 비교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1992. 12. 24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李 範 俊  
연구 책임자 李 範 俊



## 研究 參與者

연구책임자	이범준 (성심여대 교수)
공동연구원	정한구 (세종연구소)
	서규환 (인하대학교)
	김재한 (한림대학교)
	윤덕희 (민족통일연구원)
	김소중 (배제대학교)
	최영관 (전남대학교)



## 目 次

蘇聯의 붕괴와 獨立國家 聯合(CIS)의 방향 .....	鄭 漢 求 ...	1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의 미래 .....	서 규 환.....	17
- 통일독일 2주년에 부쳐 -		
舊蘇聯의 붕괴와 美國의 選擇 .....	金 哉 翰 ...	39
동유럽의 政治·經濟 改革 .....	尹 德 熙 ...	53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		
中國의 變化 .....	金 昭 中 ...	71
- 改革, 開放의 理論과 實踐 -		
北韓社會의 變化와 그 問題 .....	崔 泳 瑄 ...	125





韓國國際政治學會 湖南支會 學術會議

# 蘇聯의 붕괴와 獨立國家 聯合 (CIS) 의 向方

鄭 漢 求  
(세종연구소)

韓國國際政治學會  
1992년 10월 23일-24일 (금. 토)



## 소련의 붕괴와 獨立國家 聯合(CIS)의 향방

鄭漢求  
(세종연구소)

이 글은 1991년 蘇聯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하여 이를 계승한 국가들이 대내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과 이 지역의 정치적 향방을 가늠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련의 붕괴는 기존 社會主義 體制의 와해일 뿐만 아니라 多民族 帝國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는 1991. 8월 보수 세력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終焉을 고하게 되었고 같은 해 말 까지는 蘇聯邦을 구성하던 15개 민족 공화국들이 모두 독립, 그중 11개 공화국이 獨立國家 聯合(CIS)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舊蘇聯 지역은 소련이 붕괴한지 일년이 가까워오는 지금도 여전히 변혁의 過渡期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舊蘇聯 국가의 국내 政情 및 CIS의 장래는 “극히 유동적”이며 “불투명”한 것으로 한 러시아 학자는 관찰하고 있으며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sup>1</sup>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비알러(Seweryn Bialer)는 소련을 계승하는 국가들이 민주화될 가능성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고 모틸(Alexander Motyl)은 이들 국가간에 협조보다는 갈등이 증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고슬라비아 사태와 같은 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1992년 여름 美 議會의 한 보고서는 CIS 마저 해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2</sup>

舊蘇聯 지역은 계속해서 변화의 와중에 놓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조만간 과도기를 벗어나 安定을 찾게 될 것인가? 舊秩序가 와해된 상황에서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정착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舊蘇聯 국가들은 대내적으로 새로운 체제를—그 체제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 상관없이—수립하고 이 지역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새로운 규범과 규칙에 따라 정립해 나갈 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제까지 구체제 (“실제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체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은 대폭적인 엘리트 교체 혹은 주요한 정책 전환의 有無 등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sup>4</sup> 그러나 변혁의 과도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통용되는 이러한 안정 개념 및 이에 기초한 접근 방법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南美와 南유럽 등지에서 체제 變換(regime transformation)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평상시의 體制內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을 이와 같이 급변하는 과도기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無用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sup>5</sup>

## 舊蘇聯 國家들은 정치적 안정을 찾고 있는가?

舊蘇聯 국가중 그루지아(Gruziya)와 타지키스탄(Tadzikistan)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 당시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권좌를 지키고 있다. 그루지아에서는 1992. 1월 최초의 民選 대통령인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의 독재화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를 축출했으며 타지키스탄에서는 9월 나비예프(Rakhmon Nabiev) 대통령이 회교 반대세력의 압력으로 사임했다. 여기에서는 舊蘇聯의 유럽지역 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와 중앙 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의 대내 변화를 살피는 것에 국한하고자 한다. 앞의 세 국가는 CIS 창설국으로서 카자흐스탄과 함께 CIS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 러시아

蘇聯이 붕괴되기 전 러시아의 정치는 소련의 정치와 긴밀히 맞물려 왔다. 러시아는 소련의 중심이자 사실상 이의 계승자였던 것이다. 소련의 해체가 마지막 지도자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혁 실패에 뒤이은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1985년 집권 이후 경제개혁을 추진했으며 1988년 중반부터는 이와 병행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으며 고르바초프의 권위와 체제에 대한 지지는 급속히 약화되어 왔다. 그의 집권 중반 이후 민족 공화국으로 권력의 漏出이 가속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소위 "權力の 亂立" 현상이 현저해 짐으로써 체제 자체가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對應으로서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개혁에서 후퇴하여 개혁과 보수세력 사이에서 中道路線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그가 개혁 정책과 관련한 논쟁에 있어서 "혁명적인" 修辭를 늘어놓아 온 데도 불구하고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당면하면 중도적 입장으로 돌아섰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르바초프는 개혁세력과 보수파 모두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수세력이 쿠데타를 기도한 것은 그들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개혁파 인사들은 쿠데타가 발생하기 오래 전 부터 고르바초프에게 개혁을 본격화하던가 아니면 사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개혁 세력은 더욱 급진화되었으며 1990년 이래 러시아의 지도자로 활약하던 옐친(Boris Yeltsin)이 이들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1991년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보수 쿠데타를 계기로 권력을 蘇聯邦에서 공화국으로 그리고 고르바초프에서 자신에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집권 이후 옐친의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 중심의 통치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蘇聯邦 대통령으로서 고르바초프가 보수세력의 거점인 공산당 장악하의 언방정부에 의존했던 실책을 피하려 노력했다. 옐친은 당선 직후 러시아에서 공산당 활동을 중지시키고 각급 공산당 조직에 대체하여 지방 행정부서의 機關長을 임명하고 이와 함께 대통령 특사를 각지에 파견했다. 그는 쿠데타 직후 공산당을 사실상 불법화함으로써 공산당이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봉쇄했다. 옐친은 또한 쿠데타 이후 소련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위원회(KGB)를 비롯한 權府를 개혁파 인사로 충원했다. 끝으로 그는 1991. 11월 러시아 人民代議員大會(의회)로부터 새로운 市場經濟 개혁의 추진을 위한 비상대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막강한 권한을 모으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옐친의 지위는 1992년 전반으로 들어와 의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회는 그에게 부여했던 비상대권을 회수하려 했던 것이다. 공산당이 아직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당시인 1990년에 선출된 러시아 의회는 옐친이 언방 정부와 대결하는 데에는 그를 지지하고 나섰으나 그의 시장경제 개혁은 원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스불라토프(Ruslan Khasbulatov) 議長을 비롯한 상당수의 대의원들은 대통령 중심제에 반대하고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의 도전에 직면한 옐친의 고민은 원내에 다수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의원 1,000여 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의회는 開院 당초부터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두 집단으로 분열되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대의원의 40 퍼센트를 차지하며 나머지 20 퍼센트 정도가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두 진영이 거의 同數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라 헌법 개정이나 다른 주요한 결정에 필요한 대의원 2/3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옐친은 의회의 도전에 맞서 총선을 실시하고 그의 개혁을 지지하는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의회와 타협해야 하는 선택을 놓고 일단 후자를 택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는 1992. 4월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고 행정예 간여하는 권한이 배제된 弱體 의회의 구성을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의 채택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었으나 5월 이를 취소하고 의회 보수파와의 대결을 지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옐친은 일종의 改革-中道聯合을 결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는 1992년 초 가격 자유화를 주도했던 가이다르(Yegor Gaidar)를 수상 서리에 임명함으로써 급진적 경제개혁을 지속할 결의를 거듭 천명하는 한편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 요직에 소위 "産業 로비"를 기용했던 것이다. 옐친은 아마도 가이다르를 중심으로 하는 少壯 경제개혁 팀에 의한 소위 "충격요법"이 실패로 끝난 뒤 개혁을 위해 보다 광범한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경제개혁 조치인 가격 자유화로 상품 品貴 현상은 잠시 호전되었으나 물가 상승과 생산 저하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데에는 일반 시민의 호응 부족에도 기인하지만 少壯 팀이 경제 관료들에 의해 敬遠당한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까지 소련이 경제개혁에 실패했던 이유의 하나는 중간 엘리트, 특히 국영기업의 관리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이었다. 엘친은 슈메이코(Vladimir Shumeiko)와 히자(Georgii Khizha) 등 산업계 인물을 부수상에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과오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수상이 소속하고 있는 산업 로비는 종전의 공산당 및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들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 좌절하던 현장 생산 관리자 출신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市場化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혁 과정에 자신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언초에 시도되었던 충격요법에는 반대하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지지하고 있다. 산업 로비의 기반은 소련 체제하에서 역대 공산당 書記長의 경제 자문을 담당했던 볼스키(Arkadii Vol'skii)가 이끄는 러시아 공업인 및 기업가 연맹이다.

산업 로비는 그들의 연맹이 6월 생산 관리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한 쏘련시아 혁신동맹(A. Vol'skii 主導)이 유력 정당인 러시아 민주당(Nikolai Travkin 領導) 및 자유러시아 인민당(부통령 Aleksandr Rutskoi 領導)과 제휴하여 中道路線의 市民同盟을 결성함으로써 정치적 비중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과 인민당은 각각 공장 노동자들과 軍部내 개혁 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볼스키의 연맹은 軍.産 複合體와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데 따라 이들의 연합으로 소련의 붕괴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 세력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6</sup> 市民同盟은 정치와 경제의 안정 및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강령으로 제시함으로써 엘친이 中道 路線을 견지할 경우 그가 의회내 다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市民同盟은 의회에서 어느 파벌보다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데 따라 현 의회의 해산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고려가 엘친으로 하여금 의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결정을 번복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市民同盟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루츠코이 부통령은 市民同盟이 독자적인 경제개혁안을 작성할 예정이지만 현 가이다르 경제개혁 팀이 교체되는 것은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엘친은 이와 같이 가이다르와 산업 로비 출신의 슈메이코에게 경제개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정부에 일임한 것은 아니며, 대외관계 및 안보정책은 계속해서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최고의 정책결정 기구로서 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외관계, 안보 및 국방 관련 기관 등 주요 권력 부서를 참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옐친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샤흐라이(Sergei Skakhray)는 몇몇 權府가 아직도 강경 보수의 근거지로 되고 있으며 이들 세력이 安保委에서 옐친의 권력을 篡奪하고 “민족주의적 파시스트 독재”를 강행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아마도 옐친이 산업 로비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중에는 바로 점차 급진화 추세를 보이는 잔존 공산당 세력과 극우 러시아 민족주의 진영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민족주의를 발판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前職 우크라이나 공산당 간부였던 크라프추크(Leonid Kravchuk)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기반 강화를 제창함으로써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크림미아 반도 및 흑해함대의 영유권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분쟁은 그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 크라프추크를 공산당 黨僚로 배척했던 체제밖 민주 운동 루흐(Rukh)는 그와 사실상의 언립 정권을 형성하고 새로이 쟁취한 독립을 고수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크라프추크는 루흐의 지도급 인사들을 각료에 임명한 외에도 1992. 2월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당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키기위해 이들의 협조를 모색함으로써 민족주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大統領制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3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크라프추크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더욱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도의 권력 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되 대통령은 그중 상당한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한다. 지방 정부의 機關長은 의회의 입법 및 大統領令을 집행할 의무를 지니며 중앙 부처 산하의 地方 官署 활동을 조정한다. 지방 정부의 결정은 지방 관서와 企業, 그리고 기타 공공단체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이들은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상의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나 경제 失政에 항의하는 의회의 불신임 위협을 앞두고 크라프추크의 측근인 포킨(Vitold Fokin) 수상이 사임한데서 보듯이 크라프추크도 점차 의회의 압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벨로루시

벨로루시는 독립 이후 여전히 保守 路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벨로루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권위를 구비하고 과감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大統領 職制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벨로루시를 대표하는 슈슈케비치(Stanislau Shushkevich) 議會 議長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의회는 1990년 공산당의 다수 의석 확보가 의도된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결과로 前職 공산당 간부들이 대의원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정부도 역시 전직 黨僚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과도기를 극복할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며 在野 민주 세력은 정치 및 경제개혁을 하지 않는 정부를 공격하는 데 바쁘다. 민주 세력은 早期 總選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를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집권 정치인들은 현 의회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 세력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침체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총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민주 세력은 정치에 경험이 없으며 정당들은 규모가 작고 그들의 정책 강령도 잘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는 기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산당이 권력을 재탈환할 가능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보다는 벨로루시에서 더 큰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 카자흐스탄

舊體制하의 카자흐스탄에서 黨.政 요직을 거친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는 1991.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권한 강화에 부심하고 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在野 후보의 출마를 억제하기 위해 짧은 시일내에 후보의 등록 요건으로 10만 명의 추천 서명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야 세력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전체주의에서 民主政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계몽된 권위주의 정치가 요청된다는 일부 정치 평론가들의 견해에 동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는 자유당(Azat), 12월 당(Joltoksan)과 사회민주당이 자유롭게 야당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독립노조 연합체인 統一(Birlesu) 勞總이 활동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가 가장 경계하는 재야 조직은 알라시(Alash)라는 카자흐스탄 민족주의 회교운동으로서 이 단체는 "파시스트 정당"으로 매도된 가운데 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이 단체는 카자크 민족과 회교의 특권적 지위 확보를 정강으로 내 걸고 있다.

알라시의 불법화에서 시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독립국가로서 살아 남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민족문제이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120여



개의 민족이 있으며 그중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이 각각 인구의 약 4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나쁜 점은 이들 두 민족이 지역적으로 심하게 偏重되고 있다는(러시아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북부 지방)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舊蘇聯 4개 국가가 과도기를 극복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소련이 붕괴될 당시 각 공화국의 권력 엘리트들이 처한 상황 및 市民社會의 成熟 정도가 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蘇聯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 추세를 찾을 수 있는 바, 첫째는 정치 세력의 재편 움직임이다. 보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舊蘇聯 지역의 많은 곳에서 공산당 활동이 금지되고 군부와 비밀경찰이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위해 3개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존의 보수 세력으로서 이들 공산주의자와 군부 및 비밀경찰내 강경파들은 러시아와 다른 舊蘇聯 지역에서 “사회주의 정당”으로 둔갑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도처에 지지자들을 갖고 있으며 장기간의 집권 경험 및 국민들의 의식속에 공산주의적 가치가 여전히 內在하고 있는 데 따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편 民主 陣營으로 지칭될 수 있는 세력은 보수 쿠데타를 좌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日淺한 민주주의 경험 등으로 비교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종전에는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종식하고 民主政을 구현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던 이들 민주 세력은 체제 붕괴 이후 단일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지 못한채 분열되고 있다. 끝으로 民族主義者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민족주의의 기수로 자처하고 있음은 보수세력이 민족주의와 야합하고 있는 좋은 實例의 하나로서 이러한 현상은 아제르바이잔과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중앙(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舊蘇聯 국가에서 강력한 대통령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이고 있다. 대통령제는 당초 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990년 이들 지역에 도입된 것이었으나 소련의 붕괴 이후 大統領制下의 권력집중 추세가 더욱 현저해지고 있음은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舊秩序에 대체하여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으로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가 의거할 規範과 規則들(rules)의 總和로서의 새로운 정치 체제(regime)가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7

이들 추세에 비추어 舊蘇聯 국가들은 조만간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 안정은 새로운 체제의 수립과 연관될 것이다. 그러나 체제 정립은 어떻게 식별될 것인가? 안정은 좁게는 過渡期 管理者(現 執權者)와 대항 세력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에 귀착될 것이며 넓게는 과도기 관리자와 사회(일반 시민)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南美와 南유럽의 體制 變換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民主政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유의할 것은 軍部를 포함한 주요 정치 세력의 利害를 존중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권고가 舊蘇聯 국가들에게도 타당한 것이라고 전제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안정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改革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獨立이라는 이슈를 통해 엘리트간에 일종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엘친의 中道 旋回는 자주 고르바초프가 집권 말기 개혁-보수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한 것과 비교되고 있으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엘친은 고르바초프와 달리 구체제를 고집하는 강경 보수세력이 아니라 시장경제 개혁을 지지하는 中道 산업 로비 및 市民同盟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고르바초프의 保守 선회가 권력의 漏水를 막기위한 것이었다면 엘친은 이와 달리 民選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높은 지지와 정통성을 享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에서 군부의 항배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될 것이다. 군부는 이제까지 정치에 관여한 바 없으며 특히 1991년 후반중 철저한 肅正으로 강경 보수세력이 대폭적으로 제거 내지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여전히 大러시아主義와 권위주의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민족 분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나자르바예프하에 권위주의적 체제가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벨로루시는 그 장래가 가장 불확실하며 아마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에 준하는 사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과도기 관리자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안정에 최대의 걸림들은 여전히 경제 위기일 것이다. 경제적 불만으로 인한 국민의 지지 저하는 쉽사리 과도기를 불안정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舊蘇聯 지역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舊蘇聯 경제는 1990년 GNP 4 퍼센트 감소에 이어 1991년 17 퍼센트의 激減을 기록함으로써 2년 연속 後進을 먼치 못했으며 당분간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방의 한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1992년중 1000 퍼센트의 물가상승과 20 퍼센트의 GNP 저하를 감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9</sup> 러시아 경제는 물가상승의 억제, 豫算赤字의 축소와 생산 증가 및 生必品の 원활한 供給을 최대의 懸案으로 안고 있는 바, 市場化 改革을 강행할 경우 이에 쉽사리 隋伴될 수 있는 經濟 不均衡의 深化 위험과 당장 經濟 安定化를 도모해야 할 필요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소수민족 문제도 과도기의 안정을 쉽사리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인구 147백만 명중 18.5 퍼센트가 소수민족으로서(1989년 인구 조사 결과) 1992년 중반 현재 21개 소수민족 “공화국”이 러시아내에 존재하며, 그중 타타르스탄(Tatarstan) 등이 1992. 3월의 러시아 聯邦 條約의 체결을 거부하고 러시아로 부터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舊蘇聯 국가들이 안고 있는 難題이다.

### 舊蘇聯 國家들은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

獨立國家 聯合(CIS)은 소련의 붕괴에 직면하여 이 지역 국가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첫 시도였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帝國으로서의 소련의 해체는 보수 쿠데타이후 蘇聯邦 공화국들, 특히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촉발되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이탈은 그 전략적, 경제적 비중에 비추어 언방의 장래에 치명적 “충격”이었다.<sup>10</sup> 당시 러시아는 苦肉策으로 CIS를 결성함으로써 帝國의 해체를 막고 일종의 聯邦 내지 共同體를 유지하려던 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이를 독립의 前段階로 간주한데서 나온 便法이었다. CIS는 일부 구성국,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라 또 다른 이름의 “聯邦”이 아니라 11개 독립국가간의 단순한 조정 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CIS는 안정된 組織이라기 보다는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하나의 “過程”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관찰자들은 이를 과도적 조치로서 결국은 해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sup>11</sup>

CIS가 얼마나 오래 존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討論의 場으로서 그리고 구성국들간의 분쟁을 제3국이 중재하는 장소로서의 효용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창설 이후 CIS는 이러한 효용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당초 러시아는 CIS를 舊蘇聯 지역에서 “공통의 軍事.戰略的 空間과 經濟圈”을 유지하고 이들 분야에서 공통의 域內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랐다. 이로써 많은 러시아 인사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舊蘇聯邦에 준하는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다른 구성국들은 이를 단지 소련의 붕괴에 따른 문제점들, 예컨대 언방 資産의 분할, 군대 및 핵무기의 관리, 국경문제의 해결 등을 다루는 정도에 그칠 것을 고집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CIS는 처음부터 거의 모든 구성국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CIS 構成國들은 이제까지 軍事(黑海 艦隊 管轄權, 統合軍 창설, 集團安保 체제 수립), 領土 問題(크리미아 半島 領有權), 經濟(루블貨의 通用 등 개혁 노력의 상호 조정) 등 많은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을 노정하여 왔던

것이다. 우선 군사 부문에서 러시아와 CIS군 최고사령부는 통합군의 유지를 원했으나 독자군 보유를 원한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내에서 핵 유도탄의 발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이들은 또한 흑해함대의 관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으며 이 함대의 주력이 주둔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영유권을 놓고 대립을 보였다. 1954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할양되었던 크림반도에서는 독립 요구가 고조되었으며 한편 러시아에서는 할양의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영토 분쟁, 몰도바와 독립을 선포한 “드네스트르 공화국”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와 다른 CIS 구성국들은 舊蘇聯 자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지연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이 7월부터 루블貨를 다른 CIS 구성국들에게 공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루블圈이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CIS가 성과를 거둔 것은 핵무기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고 있다. CIS 구성국들은 분해를 위해 모든 전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舊蘇聯의 5개 공화국에 배치중인 전략 핵무기의 통합 관리에도 합의하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輸送網 등 비교적 논쟁의 소지가 적은 부문에서는 약간의 합의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함에 비추어 CIS는 점차 有名無實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舊蘇聯 국가들은 특히 경제 협력 및 민족문제(러시아인 14 퍼센트, 우크라이나인 15 퍼센트가 자국의 舊蘇聯 지역에 거주중)의 평화적 해결 등을 헌안으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국들의 민족주의 열망과 CIS의 制度化 미비 등으로 인해 CIS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舊蘇聯 국가들간의 관계는 “國際關係化”(internationalization)를 보다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CIS가 가까운 장래에 역내 정책 조정의 기능을 수행할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舊蘇聯 국가들이 CIS 보다는 국가간의 쌍무적 내지는 소지역적 관계에 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992. 5월 러시아와 4개 중앙아시아 국가,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모방한 방위동맹을 결성했고, 4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지역내 경제협력을 협의했으며 파키스탄, 이란과 터키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기구(ECO)에 가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위 “비제그라트 三角圈”(Visegrad Triangle)과의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舊蘇聯 국가들의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러시아는 지난 300 여년에 걸쳐 유지해 온 帝政러시아-蘇聯帝國에 준하는 영향권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모틸(Alexander Motyl)은 소련의 붕괴가 기정사실로 된 1991년 말 舊蘇聯 국가들간의 관계가 협력 보다는 갈등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에 기초하여 전망한 바 있는 바, 그의 분석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현실주의(realist) 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의 葛藤은 무정부적 국제환경하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전쟁까지도 不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갈등은 覇者가 등장할 때 상당한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러시아의 대내외 어려움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적어도 中.短期的으로 舊蘇聯 지역에서 霸權國으로 浮上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며, 따라서 갈등의 지속 재지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갈등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규범과 제도화의 진전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制度的的(institutional) 접근에 의할 경우 舊蘇聯 국가들의 수립이 극히 日淺하다는 점에서 이들간에 갈등을 抑止하는 요인 보다는 확산 요인이 더 많은 것이다. 끝으로 정치 체제의 성격과 정책 결정자의 認知(perception), 대내 정치의 안정 등 국내 정치(internal politics)가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입장에 따를 경우 이들 舊蘇聯 국가들이 처한 과도기적 여건—全體主義 殘滓의 존속, 민족주의의 팽배, 과도기 관리자의 경험 부족, 대내 정치의 불확실성 등—은 이들간에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협력을 증진하도록 고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sup>13</sup>

### 舊蘇聯 地域의 향방

이제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舊蘇聯 지역의 대내 政情 및 이들간의 관계를 살폈다. 舊蘇聯 국가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치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4개 국가중 벨로루시를 제외한 3개 국가는 비교적 안정화의 도정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국가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의 추세에 비추어 CIS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감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舊蘇聯 국가들간의 관계는 국제정치상의 주권국가간 관계로 이행될 공산이 짙다. 그렇지 않아도 아제르바이잔이 이미 CIS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國際關係化는 특히 러시아의 경제적 능력이 약화될수록 加速될 것이나 이와 함께 과거 宗主國으로서의 러시아의 舊蘇聯 지역에 대한 미련은 자칫 舊蘇聯 국가들간의 관계를 상당한 동안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로 만들 여지를 갖고 있다.

이제까지 “向方”이라는 題下에 舊蘇聯 지역의 과도기 변화를 살폈다. 경제발전론의 泰斗인 루이스(Arthur Lewis)는 “우리는 변화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변화가 있음을 認知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foressee)할 수 없다”고 충고하고 있는 바, 舊蘇聯 지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고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投射해보는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sup>14</sup> 문제는 舊蘇聯 지역의 과도기 변화를 살핌에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과거의 비슷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단지 이 지역에서 진행중인 변화의 向方만이라도 식별할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고 자위한다.

註

1. Lilia Shevtsova, "The August Coup and the Soviet Collapse," Survival, Vol. 34, No. 1 (Spring 1992), pp. 11-12, 16.
2. Seweryn Bialer, "Is Socialism Dead?," in Robert Jervis and Seweryn Bialer (eds.), Soviet-American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1), pp. 103-105; Alexander J. Motyl, "Russian Hegemony and Non-Russian Insecurity: Foreign Policy Dilemmas of the USSR's Successor States," The Harriman Institute Forum, Vol. 5, No. 4 (December 1991), pp. 8-10; Steven J. Woehrel,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From Transformation to Collapse?," CRS Review, Vol. 13, No. 8 (August 1992), pp. 4-5.
3. 이 글에서 舊蘇聯 國家들은 소련의 15개 민족 공화국중 CIS에 가입한 11개 공화국(현재 독립국가)을 지칭한다.
4. 예컨대 William A. Welsh, "Understanding Stability in East European Political Systems," Berichte des Bundesinstituts fue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2-1980 참조.
5.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Prospects for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art IV, p. 4.
6. Elizabeth Teague and Vera Tolz, "The Civic Union: The Birth of a New Opposition in Russia?," RFE/RL Research Report, Vol. 1, No. 30 (July 24, 1992), pp. 1-11.
7. 여기서 體制라 함은 한 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권력의 중추를 지칭한다. 체제는 누가 권력을 차지하며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규정한다.
8. 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 part IV, pp. 68-69.
9. John P. Hardt and Phillip J. Kaiser, "Russia's Economic Program," CRS Review, Vol. 13, No. 3 ((August 1992), p. 9.
1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관해서는 Roman Solchanyk, "Ukraine, The (Former) Center, Russia and 'Russi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X, No. 1 (March 1992), pp. 31-45.
11. Shevtsova, p. 16.
12. Motyl, pp. 8-9.
13. 특히 민족주의는 러시아의 경우 파시즘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회교 정통주의로, 그리고 코카서스 등지에서는 발칸化(balkanization)로 과격화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Jeremy R. Azrael, "The Soviet 'Nationality

Front': Some Implications for 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RAND Monograph, No. P-7701 (January 1991), pp. 6-8.

14. Robert Gilpin,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Pacific Rim Era," Annals, AAPSS, Vol. 505 (September 1989), p. 58에서 인용.





韓國國際政治學會 湖南支會 學術會議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의 미래  
- 통일독일 2주년에 부쳐 -

서 규 환  
(인하대)

韓國國際政治學會

1992. 10. 23~24일 (금·토)



#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의 미래

— 통일독일 2주년에 부쳐 —

서 규 환

(인 하 대)

I. 독일통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따라서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나는 여기에서 독일통일이 '사회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몇가지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 방금 나는 사회주의라 하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음표를 붙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 까닭은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재를 균형지워 설명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한계 때문이다. 주로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미래를 독일통일과 관련시켜 살펴 보려는 것이다.

독일통일에서 주목해볼 가장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예견하지 못한 급속한 통일이었고 이 뒤에는 끝과 그 정당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989년 까지만해도 독일통일을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1960년 야스퍼스(K. Jaspers)는 그의 저서 『자유와 재통일』 Freiheit und Wieder vereinigung (München, 1960) p. 53 에서 다음과 같이 통일가능성에 대해 회의였다.

“독일민족국가가는 중언되었다. 진정 위대한 민족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날 민족국가사상은 유럽과 대륙전체의 악이라는 세계상황을 통찰하는 것이다.” J. Habermas, Die nachholende Revolution Frankfurt am Main 1990) p. 260에서 재인용.

1983년. 뮌첸(W. Mommsen)은 「독일인들의 민족정체성 변동」이라는 논술에서 그 이유를 좀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기본법의 아버지들”로 불리우는 제1세대 정치가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족국가적 전통 또한 비스마르크 시절의 소독일 제국의

전통을 큰 문제로 느끼지 않고서 믿을 수 있었던 반면에 60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50년대 실용주의인 세계관을 받아들여 민족적 동일성 문제를 철회시켰다는 해석이다. 몸젠은 서독인들의 자기정체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요인을 다음 세가지로 구별했다. i)얼마지나지 않은 과거를 다루지 않고 자신의 현단계를 비역사적으로 규정하는 태도, ii)동유럽 특히 동독 제제에 대해 공격적인 경계설정, 즉 역사적으로 뿌리를 내린 반공산주의를 더욱 확대시키는 태도, iii)서구 문명, 특히 '보호 세력'인 USA의 가치와 소탕형태를 정향점으로 삼는 태도, iv)자신의 경제성공에 대한 자부심 등이다.

1990년에 출간된 『민족과 역사』(Munchen 1990) p.76에서 70년대에 제기된 국민 의식형성에서 서독이나 전체 독일이라는 쟁점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 .....독일 문제가 역사는 이제 그 정상상태에로 되돌아 왔다 ..... ”

즉 유럽 한가운데 독일 문화민족이 있게 된것이다. .... ”

(Habermas 90:207에서 재인용)

하지만 독일통일은 이러한 시대진단과는 달리 '급작스러운' 사건이었다. 하버마스 는 바로 이러한 급속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는 '독일인의 동일성에 대한 재론'에서 독일통일의 급작스러움을 지적한다.

“ 불과 얼마전에 [독일 사회학자:역자첨가] 렉시우스(Lepsius)같은 이도 서독은 '포스트-민족국가적인 , 정치공동체'라고 주장했던 그 서독이 민족국가적인 과거 시민들에 의해 극복되었다고 믿었던 그 과거에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II. 독일통일은 동구의 변동과 더불어 일어난 사건이다. 따라서 우선 동구의 변동을 해석하는 모델들을 식별하 볼 필요가 있다. ( 위르겐 하버마스, 「동구의 혁명과 좌파의 자기 수정」, 『세계문학』 [1991년 여름호] pp.124-150)

③스틸린부치. 이는 통구의 변화를 간헐성이다 규정하면서, 중구 내륙역의 수체를 몇몇 소수의 선봉가도 본다.

②레닌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장기적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주의의 자기수정으로 본다.

③개혁공산주의: 사회국가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사이의 제3길을 모색한다. 여기에서도 러시아의 10월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제3의 길을 해석하는 입장이 크게 보아 둘로 다시 세분된다. 그 하나는 프라하의 봄을 주도한 이들이 제시한 것보다 낙관론적인 것으로서 국가사회주의를 급진민주주의를 통해서 변형시키면 서구의 사회국가적 대중민주주의를 <능가하는> uberlegende 사회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비관론적인 입장으로서 이른바 제3의 길이 최상의 경우 국가사회주의의 급진민주주의적 개혁을 의미할 뿐이라 본다. 이 때 급진민주주의적 개혁은 세계2차대전이후 발전해온 선진자본주의의 사회국가의 발전수준에 비급하며, 서구 유형의 사회를 모방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법치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모델이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동구변혁을 보는 입장들도 물론 있다. 이들 입장도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④탈현대주의(Post-modernism) : 혁명시대 S.184f를 종결시키는 혁명으로 본다. 탈현대주의는 이성을 비판하려는 시각에서 동구대변동을 "이성에서 태어나는 태러를 그 뿌리에서 극복하려는" 시도로 본다.

⑤반공주의(antikommunismus) : 1917년 볼셰비키들에 의해 선포된 세계적 내란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킨 것으로 본다.

⑥자유주의 : 국가사회주의와 더불어 유럽에서 전체주의 지배의 최후의 형태들이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보면서 민주주의적 법국가, 시장경제, 서구적 다원주의 등으로 구성된 자유주의 질서관이 관철되었다고 평가한다. D.Bell, R.Dahrendorf 등이 이 입장을 대변한다.

독일통일 2년을 넘기면서 여전히 그 평가에 대한 논쟁도 식지 않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 (1) 부정적 시각

독일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모두 독일역사 “특수행로(Sonderweg)”를 논증하려 한다. 독일의 내부 분식은 항상 유럽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삼아 독일통일에서 새로운 팽창주의의 위험을 읽고 있다.

부정적 시각은 다시 둘로 나뉜다. 그 하나는 역사적 발상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발상이다.

1) 역사적 발상 : 이는 독일 역사에서 독일 내부의 통합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대외적으로 경제나 군사의 면에서 팽창하는 경향이 짙다는 해석이다. (특히 1차대전에서 J.Kohl이 특히 폴란드 국경문제에 대한 발언은 이런 반응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는 연보가 영토확장에서 얻어진다는 클라우제비츠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족주의적 팽창정책이 사국의 안보를 확고히 보증한다는 이 낡은 견해에 대해 D.Bell은 비판하고 있다.

① 오늘날의 독일은 옹커 계급 [일본의 사무리이와 유사한 집단으로서, 무사도와 흡사한 군인정신을 가진 집단] 이 주도하는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다. 독일은 19세기에 시도는 했으나 달성할 수 없었던 '부르조아혁명'을 마침내 완성했다. 오늘날 독일에는 귀족계급도, 군사적 특권계급도 없다. 독일은 중간계급의 나라가 되었다.

② 이러한 불안감증 많은 부분이 국력과 국가경쟁에 대한 전통이론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 이론은 국가안보의 기반으로 서, 또한 공업생산력을 위한 원자재 공급 확보의 기반으로서 영토를 삼켰다. ... 그리니 새로운 탈공업사회이 성격상 그런 분석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 (디자 인하우스, 1991)

2) 문화적 발상 : 유경한 Gunter Grass의 두려움이 이것이다.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문화, 특히 낭만주의의 부활 — 예컨대 그 구체적 예는 탈현대주의(포스트모더니즘) — 에 주목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 입장은 비판이

론의 위력때문에 사회실제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2) 긍정적인 시각

1)기능적 발상 : ① 현재의 유럽의 국제관계에서 독일과 그 이웃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EC와 NATO 같은 국제조직이나 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발상은 역사적으로 그 타당성을 어느 정도 남독시킨 사례를 가지고 있다. 50년대 초반 미국이 독불협정을 지원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논리가 있었다. 이 발상은 국제관계의 네트워크속에 독일을 편입시킴으로써 독일을 "유순하게 길들일 수 있었던"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N.Y,1975, p.107) 전후 미국이 취한 전략은 이런 식으로 소련과 독일 "모두를 유순하게 길들이려는"것이였음을 분석한 것으로는 Wolfran Haurieder, Germany, Ameerica, Europe: Forty Years of German Policy, New Haven : Yale, Uni, Pr, 1989, pp5-7.

②또 하나의 국가가 추구하려는 이득은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발상이다.(Joseph Grieco, Cooperration Among Nations, Cornell Uni, Pr, 1990, p.10) 이 발상과 연관지워 독일을 EG같은 국제조직불속에 묶을 때 독일의 경제력을, 유럽전체의 발전 맥락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절제'시키는 효과를 일차적으로 얻는다는 것이다. Helmut Kohl이 공식적으로 앞세우는 담화도 이런 종류의 것이다.(Helmut Kohl, "The Voice of Harmony that Stills Nation/Rivalry", Financia Times Survey, Financial Times, 29. OKT. 1990, p. II)

2) 독일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하나의 맥락은 전후 서독의 정치제도의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다. 전후 서독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권력을 탈집중화시켜 독일의 권력성향은 "유순하다는" 것이다. (Peter J.Katzeustein, Policy and Politics in West Germany : The Growth of a Semi-Sovereign State, Temple Uni, Pr, 1987, 또한 이 저서의 논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Josef Joffe, "Reunification II: This Time, No Hobnail Boots" New York Times Sept. 1990) 이는 동독을 "흡수한" 서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부드러운 독일이미지"를 강

조하는 이 발상은 물론 대외정책에 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편다. 제국주의의 위협은 다음 두 관점에서 극복되었다고 본다. 그 하나는 독일의 국내정치적 제도개혁은 대외정책도 절제있도록 만들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사회계급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독일 제국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토대였던 용커(Junker)계급이 '소련 탱크'에 의해 소멸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벨도 『2000년대의 신세계질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한다. 또한 Alexander Gerscheukron, Bread and Democracy in Germany, Cornell Uni, Pr. 1989)

3) 독일 엘리트의 성향에 주목하여, 그들의 민주주의적 책임윤리에 호소하는 발상이다. 경제, 정치, 정신 등에서 엘리트들은 군사적/반민주적/국수주의적 경향이 부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강한 책임윤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전후 독일에서 엘리트층원의 변동에 대한 인식이 있다. 1945년 이전 제국주의와 공격적인 전통의 성향을 지녔던 '용커'계급대신에 시민적 '정치문화'를 지닌 새로운 시민계급에서 엘리트가 충원되었다는 분석이다. 필자는 역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열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보다 호소력 있다고 믿는다.

### Ⅲ. 제도정치의 위기

1991년 가을, 콘란트 아데나워 재단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물었다. (홍윤기 "통일독일 2년 ...위기와 도전④", 「한겨레신문」, 92년 9월 30일자.)

문 : 현재의 대중정당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반쪽할 만하게 대변하느냐?

답 : 긍정적 답변 — 59%

부정적 답변 — 41%

이 가운데 긍정적 답변을 동/서지역을 기준으로 처리하여 보면

서독 지역의 긍정적 답 — 64%



동독지역의 긍정적 달 — 36%으로 나타난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은 첫째,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 제도정치의 위기이며, 둘째는 동독지역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통계에는 60년대 중반 이후의 제도정치에 대한 APO의 도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일이 주는 효과만을 읽어낼 수는 없다.

의회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만은 선거의 참여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선거참여 저하에서 곧바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급상승을 읽어내는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험한 해석으로 보인다. 오히려, 60년대 이래의 외회주의의 위기를 여전히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올리히 알브레히트(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평화 및 갈등 연구소 소장)는 「통독 2년의 허상」이라는 컬럼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동독지역의 편입으로 국내정치를 조직력이 좋은 좌파가 주도하지 않을까,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세력균형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 그랬다. 설령 동독인들이 소수임을 인정한다해도 그들의 과거가 설득력이 아닌 주입식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가 좌파로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동독에서 실시됐던 첫 민주적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압도적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우려의 모순점을 지적해 주고있다.

독일인들은 지금 독일정치지도에 공산주의 또는 좌파의 「붉은점」 대신에 흐릿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갈색의 점」들을 당황스런 시선으로 보고있다. 특히 동독지역에서 그렇다.

외국난민들의 임시거처가 불타고 돌이 남아드는 것을 반드시 新나치주의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통일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과정에 극단주의자들이 편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회주의의 한계를 진단하고 비제도정치를 호소했던 주도세력은 60년대의 신좌파였고, 그 후 이 세력은 다양한 신사회운동을 주도해나가려 한다.

독일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Claus Offe 90 :232-5 R. J. Dalton M. Kuechler(ed. :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Polity Pr.1990)

첫째, 전후 사회운동과 비교해서 기존 정당들의 지원에 의해 생성되지도 않았고 50년대 평화운동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으며 기존 정당들에 흡수당하지도 않는다. (60년대 학생운동) '구' 정당과 그 선거정치 세계 밖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강한 만큼이나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둘째, 정치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문학, 예술, 종교 등 문화 형태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보다는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원용하려는 운동을 보이나.

셋째, 기존의 기술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합리성의 제도화된 패턴에 도전하면서 보편적인 비판을 발전시킨다.

가족, 종교적 가치, 소유, 국가권위, 민족 같은 전통적인 제도나 편제 arrangement에 호소하는 반동적인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신사회운동의 저항이나 비판이 대안사회를 엄밀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다. 근대화 과정을 사회정책, 경제, 테크놀로지, 평화 등의 면에서 '부정적'으로 저항할 때 신사회운동들이 통합된 전략을 펴고 있지 못하다.

(신사회운동들의 세부차이에 관해서는

(Dieter Rucht, "The Strategies and Action Repertoires of New Movement", in : Russell J. Dalton and Manfred Kuechler(ed.),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Polity Pr, 1990, pp.156-175와 줄고, "서구좌파의 위기"『월간 옴서버』 (1990년 11월호) pp.472-485를 참고할것)

1990년 12월 2일 총선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C D U · C S U	43.8 %	319석
S P D	33.5 %	239석
F D P	11.0 %	79석
P D S	2.4 %	17석
G + B S O	1.2 %	8석
계		662석

이 선거결과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진적 통일안을 주장한 시민당이나 서독 녹색당보다는 급속한 통일안을 제시한 기민·기사 동맹을 선택했다.

둘째, 정당을 선택했던 기본 범주가 통일의 내용보다는 통일 그 자체였다. 물론 이것은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선거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하노버 대학교 사회학자 오스카 넥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인상적이다. (홍윤기, "동일독일 2년 .....위기와 도전 ⑤" 에서 재인용)

“독일의 재통일이 시장경제체제와 보수·자유주의 연방정부에 의해 실현된 방식을 보면, 산업문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해진다. 정치란 일종의 속도 경기가 되어버려 빨리 결단하는 자가 짬싸게 정당의 이익을 가로챌으로써 심사속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되어버린다.”

좌파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은 1) 신사회운동들의 도전이다.

좌파세력의 실질적인 중추인 시민당은 신사회운동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변화시켜왔다. 이 대응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SPD는 녹색당에 대해 도호한 이중적 입장을 취했다. 브란트(Brandt)를 중심으로 '신정치' 파가 '구정치' 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단계였다. 브란트는 정책의 녹색화를 통하여 SPD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찾고 녹색당과의 협력정도를 높일 것을 호소하였으나 '구정치파'는 SPD의 역사적 뿌리가 산업사회의 산업갈등에 두고 있다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녹색주의자들을 책임없는 유토피아주의자라 공격했다.

② 1984년부터 녹색이 있는 국민정당을 주창했던 브란트의 노선이 약화되면서 녹색당과의 거리를 취하고서는 어떠한 협력도 거부한다.

③ 하지만 1987년 선거결과는 SPD만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이르면서 SPD내부에서 다시 녹색당과의 협력을 대안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세력인 '공화파'(Republikaner)가 고개를 내밀고 있어서 협력가능성이 더 높아 지고 있다. (Padgett/Paterson, pp. 63-4)

“당 조직에서 신중간계급이 헤게모니를 쥐고서 신좌파 정치의 사회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는 녹색당과의 연립 가능성이 강하다.”

이 명제는 다음 두 사실을 가리키거나 배경으로 한다. 그 하나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신사회운동의 주된 주제와 하나가 신중간계급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서독의 계급구조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중간계급이 주도하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SPD신당원의 '계급구조'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직업별로 본 SPD 신당원 1958-1982 (%)

사회집단	1958	1966	1972	1982
사무직/서비스업	21.0	27.5	34.0	33.1
육체노동자	55.0	49.4	27.6	21.1
주 부	11.2	9.0	9.0	13.7
연금 수혜자	5.4	4.1	3.7	9.2
학 생	—	—	15.9	12.8

IV.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바상들도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입장으로 식별할 수 있다.

1) (정통)마르크스주의 2) 신 보수주의, 3) 합리적 선택이론(Wolfgang Merkel, "Niedergang der Sozialdemokratie", Leviathan, (1990. Marz, pp. 106-133, 여기서 는 pp.108-112)

1)에 대하여 : 현존사회주의의 대개혁 이래 이 입장을 지켜가려는 학자들은 더욱 줄어들어 거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를 사회조정 의 핵심으로 삼는 이 입장은 신보수주의 발상과는 정반대로 사회민주주의가 '시장을 너무 많이' 허용했다고 비판한다는 점이다. 이 입장은 70년대의 (경제)위기는 사회민주주의의 케인즈주의와 신조합주의가 '진정한'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을 포기하고 옆길

로 접어든 필연적인 자기피멸로 해석하면서 사회민주주의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노스텔지어의 한모습”일 뿐이라고 전망한다.

2)에 대하여 : 사실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을 미리부터 강력하게 예언해온 입장은 사회민주주의의 ‘사회국가(sozialstaat)’ 모델이 사회조정매체로서 “너무많은 국가”를 허용한다고 논평한다. 이 입장의 이른바 “과부하된 국가”라는 부정적인 명제적 표현은, 시장의 자기 조정력과 기업가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악화 시켜 왔다고 사회민주주의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3)에 대하여 : 합리적 선택이론의 르네상스는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론적으로 진단하려한다. 요컨대, 세보르스키(Przeworski)의 ‘선거로 본 사회주의의 딜레마(Dilemma of electoral socialism)’라는 명제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주의의 위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이 수직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원래의 목표가 노동자들 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고, 이에 따라 좌파정당의 지도자들은 다른 계급들의 지지도 얻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강요를 당한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선거에서 성공하려면 계급을 넘어서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 실천에 옮기면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며, ‘순수한 계급전략’만을 취하면 다수를 차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는 후기 산업사회적 정우가 짙어지면서 더욱 첨예화 한다고 부기한다. 이 분석 밝시즘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물론 최근의 선거에서 저조한 성과와 ‘포괄정당’으로의 변모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측면은, 선거사회주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해도 이문제(선거 사회주의의 하강:역주)는 상대적으로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 황금시대의 종말의 증언’을 예언하는 이들 세 입장에 공통된 점은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을 지나치게 정태적으로, 또 비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10년내 이래 변화해온 경제적이고 사

회적인 환경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사회민주주의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능동적 변동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사회민주주의의 동학을 미리 전제로 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달리 비판하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 황금시대'(R. Dahrendorf)를 움직여 온 머버니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정당 민주주의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이라고 판단한다.

#### ① 경쟁정당 민주주의

경쟁정당 민주주의이론은 시민적 민주주의의 이론으로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을 역시 지지한다. 특히 조직 사회학의 지평에서 현대 계급정당은 심각한 변형을 겪음을, 이미 금세기 초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분석과 관련하여 R. 미첼스, R. 룩셈부르크, 막스 베버등이 통찰한 바 있다. 계급정당에서 국민 정당으로 변형되는 이 과정에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특징을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쾰히하이머(Otto Kirchheimer)의 유명한 표현, '포괄정당'(catch-all party)에서 극명히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현대사회의 기능적 복잡성, 계급구성의 다양화, 분화적 이질성등을 정당히 고려해야 하므로 당의 집합적 동일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 경쟁하는 정당들이 다수로 나타나 있고 따라서 경쟁하면서도 정당들은 서로 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명백히 말하면, 정치시장에서 최대한의 정치구매를 얻어내기 위해 정당은 스스로 원래의 집합적 동일성을 국소화해야 하는 이외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당과 연정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강요도 받고 있다.

㉢ 조직 규모에서 이미 거대한 조직체로 등장한 현대정당은 당내 민주주의에서도 심각한 제한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과두제의 철폐'(R. Michels)명제는 이를 극단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대로 특징지워지는 정치시장의 환경변화는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 전문가들의 비중을 더욱 높게 한다. 당정책의 이 전문화는 당내 민주주의

에 위협을 준다. 경쟁정당제도 아래 서로 경쟁을 벌이는 정당들은 경쟁정당제도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경쟁정당들은 자본주의의 안정에 필요한 정치과정 에 관해, 자본주의의 내용과 형식에 관해 '비결정'(P. Bachrach)의 전략을 펴고 있 다. 재현시키는 과정에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이나 의사가 선택된다. 다시말해 기존의 생산및 분배구조가 발생시키는 정치적 제한 조건에 본질 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에서 '대표'될 수 있다.

## ②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제 2차대전 후 서구 자본주의에서 발전해온 것인 데, 선진자본주의 체제를 급속히 신장 시켰고 산업갈등이나 계급갈등의 양상을 탐급 진화 시켰다. 경제성장과 '평화로운' 계급관계의 성숙은, 서도 모란하는 양생적 관계 아래 추진되어온 것이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은, 정치적 급진주의를 떠나서, 보다 경제주의적이며 분배에 집중하고 '갈등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의 한계를 세분화시켜 논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요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공급분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거시경제 적 수요안정화 문제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모델은 생산및 착취문제에서 어긋아나는 비판이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의 한계는 이 렇게 문제의 범주를 제한된 시야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있다.

㉡ 노동자들의 이익관계를 복지국가는 구조적으로 일관되게 탈상품의 범주로 변 형시켜가고, 경제성장의 문제 역시 정치적 구상의 문제로 변형시키면서도 자본의 쪽 에서는 이것이 사건적으러 예외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경제부문은 국가개입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병리학'으로 보 는것이다. 오페(Offe)는 이를 '기대의 병리학'으로 날카롭게 표현했다. 경제부문 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되면 국가는 그에 대해 다시 개입을 변형시켜야 하는 순 환을 말한다.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은 학교, 병원, 감옥, 사회보장부문 등 인격을 취급 하는 영역들에서 취약하다. 개입양식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



다. 수혜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개입양식에 의해 오히려 저하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은 자기 부정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데, 이 자기부정메카니즘을 조절하여 어떤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모순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징후들이 특히 70년대 중엽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첫째로 선거에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정당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 변화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반복지국가관이 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지출비가 일관되게 할당되지 않았었다. 셋째, 복지국가 서비스나 지출이 실업이나 경제성장둔화에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넷째, 새로운 정치감동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증가했다. 다섯째, 좌파이론에서도 반국가주의 견해를 짙게 펴는 세력이 크게 성장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유화 가능성을 지지했던 경쟁정당민주주의모델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이 위기를 경험하면서부터 새로운 보수주의의 사조, 반복지국가적,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나 (신)조합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후자의 발상이 지닌 반민주주의적, 권위주의적 요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익과 의사의 매개과정을 의회라는 현실론적으로 중요한 대표 매체 옆에서 취하고 있다는 비개방성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이 폐쇄적 매개 때문에 협상의 주체들과 대상 그리고 그 결과를 정당하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이 사회민주주의의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미래는 이 기존 사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재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맥락에서 Pierre Rosanvallon은 자신의 논술 『사회적 투명성의 쇠퇴』(『The

Decline of Social Visibility』, in John Keane(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Verso, 1988, pp. 199-220. 에서 대안은 “케인즈주의의 모델이나 ‘순수’ 신자유주의나”가 아니라 “준 자유주의 모델이나 내가 ‘포스트사회민주주의’ 라고 부르는 모델이나”이라고 말한다. (p. 218)

포스트 사회민주주의는 다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가지 전략(compromise)을 전개한다. 첫째, 임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으로서 노동시간의 축소 및 재조정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둘째, 복지국가의 안전성 회복/고정적 의미에서 국가개입주의를 완화하고 시민권을 확대하려한다. 셋째, 보다 개방적인 사회를 목표로 하고서 협상과 관용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 포스트 사회민주주의는 필자가 "서구 좌파의 위기" 같은 글에서 제3의 연대가능성으로 제시해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시점에서 서구에서 사회주의가 거둔 성공이 '민간기업'인 것이다. 이 맥락에 대해 요약해 보고 싶다.

첫째, 68년을 정점으로 하는 서구말시대의 저항적동은, 자기변형을 거듭하여 형식 사회주의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Tilman Fichter, "Political Generations in Federal Germany", NLR 186 (March/April 1991) pp. 78-88)

서독의 경우 '68 세대'는 정치문화를 변동시켜왔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무릎을 굽지 않으면서도 현실사회주의와 그 이론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또 다른 사회주의를 탐색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70년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줄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제3제국의 파시즘과 동독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종의 저항에서 계급정치의 경직성을 부드럽게 하는 탄력있는 좌파정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ii) CDU-CSU가 기독교 전통을 재구축하여 정치세력을 확장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중간계층을 넘어 서게 하자, SPD도 '국민정당'(Volkspartei)으로 전환하여 연대가능성을 높여 왔다는 점이다. iii) SPD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계급정치에서 출발한 그 시원성에 비추어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iv) SPD에는 노동운동과의 전통적인 연대관계도 있지만 '노동'의 사회화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다. ... 등등이어서 SPD가 비교적 빠른 높은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1989년 10월에서야 동독에서 SPD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0년 12월 2일 총선에서의 결과는 결코 낮다고만 평가될 수는 없다.

셋째, 여러 형태와 내용의 신사회운동이 활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신사회운동의 신정치세력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친화력을 갖는 토대민주주의 혹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적극 긍정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넷째, 현단계의 단기적 안목에서 볼 때 통일을 계기로 일어난 풀정부의 위기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 위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i)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이를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첫째, 동독인구는 통일독일의 28%를 차지하지만 GNP에의 기여는 7%에 불과하다. ii) 그렇지만 동독출신들의 소비성향은 서독인구들의 2배에 달하고 있다. iii) 동독출신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기업정신결여, 현존 사회주의의 관료주의에 대한 수동성, 숙련성 부족 등으로 서독노동자의 1/3에 불과하다. iv) 이른바 '통일비용'이 예상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 1992년 10월 20일자)

“독일정부는 동독지역에 지금까지 우리의 근 10년 예산에 해당되는 3백조원을 퍼부었으나, 경제회복은 요원하다. 통일직후만 해도 2천년엔 동-서독 지역간에 격차가 없는 경제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 전망은 이제 불투명해졌다. 2천년까지 동독지역이 서독 수준으로 되려면 동독지역이 연평균 15%의 성장률 해야하는데 그런 기록은 서독에서도 없었던 기적일 뿐이다.”

v) 불과 그 정부는 동독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약속했으나, 통일 이후 지금까지 이 약속을 현실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1991년초 동독 실업자 수는 거의 80만에 가깝고 이는 동독 노동력의 8.9%에 달하는 수치이다. vi) 급속한 통일을 선택하면서 불과 그 정부는 서독에 대해서도 심각한 변동이나 조세인상을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통일이후 보다 높아진 통일비용 때문에 이 약속 역시 지키지 못하고 있다. vii) 노조가 성장했다. 예컨대 철노조의 경우 동독에서 조합원이 새로 가입함으로써 250만명에서 350만명으로 성장했다. 이 점 역시 노동운동과 깊은 연대관

계를 맺고 성장해온 좌파정당의 발전에 유리한 측면이다.

독일통일을 달성시킨 요인을 요약하면서 이 논술을 매듭 지우려 한다.

- i) 현존 사회주의의 대개혁, 특히
- ii)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래의 동서독 긴장완화 정책의 지속
- iii) 유럽공동체
- iv) 서독의 탈파시즘화 (시민문화의 정착화)
- v) 동독 시민사회
- vi) 정치지도자들의 협상력

① 독일통일은 현존사회주의 체제의 대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배제하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 물결은 동구권 국가 가운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가장 강하게 의존했던 동독 체제위기를 자극했으며, 냉전의 종식을 가속화 시키는 영향을 미쳤다.

②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1982년 Kohl 정부에 와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Kohl 정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브란트·쉬미트 시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대외정책상 소련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높여 감에 따라 그 기반이 보다 튼튼해 지기 까지 했다. (박사명, "동서독 관계 변화와 미소의 정책" 성대사회과학연구소 <편> 『전환기의 분단국 문제』 (성대출판부, 1991), pp.185-215, 여기서는 p.191)

③ 유럽공동체를 향한 서유럽의 정치무드가 성숙되고 있어서 독일의 위업을 유럽공동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속에서 묶어둘 수 있다는 판단이 적극적인 강한 반대를 제기하지 않도록 자극했다. (줄고,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선택", 윤근식 <편>, 『현대국제정치론』 (대왕사, 1991), pp.269-293 참조)

④ 독일이 전후 정치제도와 정치문화를 민주화시켜온 수준을 높게 평가하여 통일이 타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는 세력이 강했다.

#### ⑤ 시민사회의 정치

시민사회는 그 표피적 수준의 의식만으로서는 장당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동독의 사례에서 뚜렷하게 예증되었다. 1989년 10월 7일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일을 정점으로 시민사회의 운동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으나, 그 잠재력은 이미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일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의 정치이다.

㉠ 동독의 젊은이들이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1989년 9월 초순) 일어나고, 이를 보도하는 서독 TV를 많은 동독인들(80%가량)이 시청하여, ㉡ 동독시민들의 저항은 가열되고, ㉢ 마침내,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자유총선거에 이르게 된다.

㉣ Kohl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또한 돌지 않을 수 없겠다. Kohl정부는 "고르바초프가 독일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이었던, 통일독일의 NATO가입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이른바 '런던선언'을 얻어낸 점이다. (상세한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박사명, 1991, 앞의 글을 참조함)

소련이 통일독일이 NATO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아니 찬성하는 이유 혹은 그 배경은 무엇일까? 즉 Kohl정부는 어떻게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했는가?

㉤ 소련의 경제개혁에 독일의 막강한 경제력이 강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 이전의 동서독은 소련의 최대 교역파트너 였다는 점도 여기에 작용했지만, Kohl이 소련의 경제개혁을 위해 경제·정치·군사·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 냉전의 종식으로 상징되는 동서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런던선언'은 이런 맥락에서 단 하나의 진전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소련 역시 독일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정치문화를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가로 놓여 있었기는 하다.



韓國國際政治學會 湖南支會 學術會議

## 舊蘇聯의 붕괴와 美國의 選擇

金 哉 翰

(한림대학교)

韓國國際政治學會

1992년 10월 23일-24일 (금. 토)





## 舊蘇聯의 崩壞와 美國의 選擇

金 哉 翰  
한림대학교

脫冷戰시대의 美國의 對外政策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졌다. 시사적 국제 정치잡지들은 거의 이를 다루었다. 그러나 서술적이거나 시사적이지 않은 이론적 잡지들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미국외교정책에 대해 별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탈냉전시대의 미국 외교정책의 양식이 냉전시대의 것과 인과론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또는 국제체제와 미국외교정책 간의 인과관계가 그만큼 분명하지 않아 학술적 접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차제에 인과론적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는 이미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전부터 對서방 또는 對 제3세계외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련붕괴 후의 미국선택의 큰 변화는 對外安保의 면에서 발견된다. 대외안보정책의 조건은 能力과 意圖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주의권 변화에 따른 미국의 선택이란 사회주의진영 또는 소련의 능력과 의도의 변화에 따른 미국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도만으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국제정치적이지 못하다. 미국은 늘 소련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관심을 두었다. 즉 의도란 고정되어 기회가 있으면 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군비경쟁을 하였다. 이는 신사고로 약간은 수정되었지만 아직도 미국의 대외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힘의 변화를 외부적 요인으로 본다. 힘분포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國際體制의 힘 分布의 변화와, 競爭國의 등장과 쇠퇴, 그리고 自國의 등장과 쇠퇴 등이다. 美國安保政策을 決定하는 要因 가운데 힘분포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社會主義圈의 變化가 美國의 選擇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하고자 한다.

### 1. 國際體制의 힘 分布와 美國의 選擇

이차대전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를 냉전적 兩極체제로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얻는 것은 자국이 잃는 것이고, 상대방이 잃는 것은 자국이 얻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었다. 이 상황에서는 공동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주도적 외교정책도 자국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화해는 불가능하다. 이른바 냉전의 외교정책이다.<sup>1)</sup> 이러한 조건에서는 勢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同盟形成을 추구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새로운 동맹국 획득과 옛동맹국의 상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소국들에게 무상원조와 같은 정책들이 많이 나온 반면, 상대편 진영에 대해서는 보복정책이 잦았으며 현존하는 지리적 경계선을 두고 대치하였다.

6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의 군사적 위상과 그에 대한 약소국

1 김재한, 「탈냉전과 남북한협조」, 『국제정치논총』, 제30집 (1990), pp.1-14.

의 의존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약소국에도 비동맹과 같은 선택의 여지는 있었으며, 대륙간단도의 출현은 海外基地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동맹을 맺고 미군을 그곳에 주둔시키는 것을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무상원조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경쟁적 협력 시기라고 불리우기도 한다.<sup>2)</sup>

70년대에 와서는 三極體制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때에는 나머지 두 극이 자국에게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과제였다. 協商과 外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외교적 고립을 막고, 이데올로기는 주변적으로만 고려하게 된다. 반공주의자 닉슨이 만리장성 위에 서있는 것이 삼권체제에서의 외교정책을 상징한다. 미국과 소련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같은 제3국이 이기고 실제 전쟁하는 국가는 둘다 패망한다는 인식하에 극단적인 적대정책을 회피했다. 양극과 달리 삼권체제에서는 국가들이 어느 일극의 힘 증가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동맹결속이 와해되고 제3의 극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교정책도 봉쇄에만 국한하던 것은 지양하고 힘이 아닌 외교 위주의 정책에 주안을 둔다. 더욱 더 느슨해진 체제에서는 경쟁적인 동맹형성과 무상원조의 필요성은 없어졌다. 군사경제원조가 無償援助에서 武器販賣, 防衛費分擔, 通商開放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소련의 붕괴는 국제질서의 규정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의 호조조건이라 民主主義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sup>3)</sup> 나이(Nye)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규정을 시도하면서 몇 가지 잘못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sup>4)</sup> 시사잡지들은 오늘날 국제체계를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등의 多極체제로 보는데, 나이는 강대국들간의 힘의 분포가 전혀 균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經濟的 三極체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또한 아시아지역국가들이 일본과의 경제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핵무기 등의 안보적 요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 냉전 이후에도 유럽과 일본은 미군의 계속주둔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무기확산을 막고 미국 중심의 질서이기 때문에 單極체제라고 한다.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도 소련의 붕괴 후 미국이 유일하게 남은 초강대국이라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으나 이미 1970년대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이 패권적이지 못하며, 국경이 애매해진 오늘날에 패권의 개념도 애매해졌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이는 오늘날의 세계를 多次元的 相互依存체제라고 부른다. 즉 군사영역에서는 단극이고, 경제영역에서는 삼극이고, 초국가적 상호의존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이다. 비군사적 이슈들이 중요해졌고, 걸프전쟁이 석유와 전쟁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힘분포를 가진 군사안보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상호관련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명명은 적실한 면이 있다.

한편 로제크랜스(Rosecrance)<sup>5)</sup>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強大國協議體(concert

2Kegley and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9)

3Larry Diamond, "Promoting Democracy," *Foreign Policy*, 87 (Summer, 1992), pp. 25-46.

4Joseph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71 (Spring, 1992), pp. 83-96.

of powers)로 명명한다. 19세기와 20세기전반의 勢力均衡체제도 아니고, 이차대전이후의 抑止체제도 아닌, 1815년 비엔나조약이후 7년정도 존재했던 강대국들간의 합의체라는 것이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연합체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물론 세력균형체제 또는 다극적 억지체제로 곧 변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 국제질서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든 세계적 지배국은 미국 말고는 없다고 봐야 하겠지만, 각 개별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行爲者들의 數는 늘어났다. 이는 군사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확산과도 관련있다. 미국 CIA의 추정에 의하면 금세기말까지 적어도 15개국의 개도국들이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8개국가가 핵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sup>6)</sup>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자의 증가로 미국이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직면할 不確實性은 아주 많다.<sup>7)</sup>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미국의 선택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미국의 행동양식이 모험주의적이냐 모험회피적이냐에 따라 미국의 선택은 크게 달라진다. 즉 國際體制의 변화만이 미국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國家選好에 있어서의 성향이 그 선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체계의 구조가 외교정책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한 때 戰後 국제정치학의 주류였다.<sup>8)</sup> 갑자기 변화해 버린 국제관계를 대략적으로 윤곽이라도 잡으려면 거시적 접근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를 두고도 일군의 학자들은 양극체제로, 다른 학자들은 다극체제로 분류하기도 했다. 작금의 국제체제도 미국 주도하의 단극이냐, 아직 양극이냐, 아니면 다극체제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략적 이해를 위한 국제체제적 접근방법은 어느 일정한 국제체계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일률적인 외교정책을 한다는 암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이는 적실성이 없었으며 단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각국은 흡수적인 힘 또는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점뿐이었다.<sup>9)</sup> 체제의 표면적 성격으로만 새로운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국가들의 관점을 고려한 체계적 진단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이론 그리고 방법론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개별적 접근이 유용하게 되었다.<sup>10)</sup> 그래서 오늘날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외교정책 선택의 외부적 요인으로 말할 때는 단순히 국제체계의 구조가 아니라 타국과의 힘 우열과 타국의 정책을 말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패권의 쇠퇴성”이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가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미국패권의 유일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변

5Richard Rosecrance, "A New Concert of Powers," *Foreign Affairs*, 71 (Spring, 1992), pp.64-82.

6Alberto Coll, "America as the Grand Facilitator," *Foreign Policy*, 87 (Summer, 1992), pp.46-66.

7다극체제가 양극체제보다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다극체제론자와 양극체제론자가 일치하는 점이다. 후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체제도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자는 불확실하여 각국이 조심하기 때문에 체제가 안정된다고 한다.

8Morton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Wiley, 1957)

9Kenneth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10Bruce Bueno de Mesquita and David Lalman, "Systemic and Dyadic Explanations of War," *World Politics*, 41 (October, 1988), pp.1-20.

화가 체제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상대적 힘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規模의 原理 - 唯一強大國政策

競爭國의 政策이 미국의 고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레이건의 군비증강정책은 소련의 군비증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으며, 부시의 국방비삭감도 고르바초프의 군축으로 가능했다. 1970년대의 미국과 중국의 수교도 중소분쟁으로 인해 가능했다. 경쟁국의 정책 뿐만 아니라 衰退도 미국의 고정책에 영향을 준다.

라이커(Riker) 교수는 競爭國 衰退 이후의 선택을 규모의 원리 (size principle)라는 것으로 설명한다.<sup>11)</sup> 즉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각국들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편을 짜되 이길수 있는 최소의 연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巨大한 戰勝聯合은 조개져서 서로 이길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길게 즉 나누어 먹을게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행위자를 포함하는 거대 연합은 곧 깨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에 대항하여 형성된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의 거대 연합은 전쟁후 깨어진다. 오스트리아와 영국은 오랜 적대국이었던 프랑스를 다시 세계정치에 포함시키고 같은 동맹국이었던 프러시아와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맹을 프랑스와 체결하기도 한다. 일차대전후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도 깨진다. 미국은 국제연맹에 참가하지도 않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문제 처리에 이견을 보이다가 프랑스가 더 큰 배상요구를 하면서 독일을 점령하기도 한다. 이차대전에서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연합은 전쟁 당시에는 겨우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연합이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거대 연합으로 된다. 미소의 냉전도 거대연합의 분할로서 이해된다. 서로 조개지지 않으면 나눠 먹을게 없기 때문이다. 즉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소련이 등장했으며, 여기에 이데올로기와 핵무기가 가미됨으로써 직접 전쟁은 하지 않으나 편이 분명해지고 관계는 아주 적대적인 냉전이 탄생했다. 단순히 이념의 대립으로만 냉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소분쟁과 미중수교도 소련의 패권적 등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蘇聯이 해체되는 등 社會主義圈의 沒落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巨大聯合化하였다. 그렇다면 사이즈의 원칙은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구성된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연합이 깨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의 미국의 선택은 과거에 적대국이었던 社會主義圈과의 協力이 예상된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만 해도 소련의 평화지향적 정책을 일종의 속임수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主였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걸프전쟁에서 소련이 미국에게 소련 미사일컴퓨터프로그램 기밀을 제공했는데, 이전에 미국이 이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 분명히 많이 변한 것이다. 소련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미국을 전멸시킬

<sup>11</sup>William Riker,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수 있는 유일한 군사강국이며, 민주화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제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견제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련이 와해되고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상대적으로 中國이 급부상하여 미국과 부딪치는 양상이 보인다. 중국은 미얀마에 해군기지건설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인도양진출의 의도를 엿보이고, 러시아로부터 S-27전투기와 우크라이나로부터 항공모함을 구입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이 최신예전투기인 F-16 150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카드로도 분석된다. 미국이 천안문사태 등의 중국의 인권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것도 중국의 국제사회입지 약화를 노려 중국을 견제하는 일환이다. 현재 미국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대상국에 북한,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묶어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경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냉전과 같은 대립은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理念대립은 사회주의의 붕괴로 소멸하기 시작하고, 자본주의진영내의 軍事的 同盟관계가 市場經濟的 競爭관계로 바뀌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제적 분쟁은 이미 소련의 붕괴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그러한 마찰은 이제 경제적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나 정치화되었다. 美國의 封鎖정책의 대상이 冷戰시대에는 蘇聯의 팽창이었다면 脫冷戰시대에는 經濟的 超強大國들간의 분쟁이다. 예컨대 태평양지역주둔 미군의 사명도 공산주의의 붕괴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 군사적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국가들간의 분쟁으로 인한 악영향을 봉쇄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의 미국외교는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18일 미국국방부차관 월포위츠(Paul Wolfowitz)의 감독하에 작성하다 3월 뉴욕타임즈에 의해 공개된 “防衛計劃指針(Defense Planning Guidance for the 1994-99 fiscal years)”<sup>12)</sup>에서 미국의 1차목표는 구소련이나 기타지역에서 새로운 군사강국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경쟁세력이 지역 또는 세계무대로 올라서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즉 소련붕괴이후 국제질서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체제로 만들기 위해 여타 競爭國家의 登場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방력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獨逸과 日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할 만한 국가 또는 동맹의 등장은 미국과의 라이벌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부분에서 선진산업국가들이 미국에게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들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自國利益을 보호하기 위해 世界的 役割이나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잠재적 경쟁국에게 확신시키는 신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로 하여금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미국-독일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과 모순되지 않는 미국-일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sup>13)</sup>

---

12국방성 내부의 방위계획지침서인데 매2년마다 작성되는 것으로, 대통령, 국방장관, 군본부에서 예산과 전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하는 지침이다.

13미국내에서도 일본을 견제하는데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안보라는 것은 없다는 주장과, 일본을 괴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같이 존재한다. Edward Olson, "Target Japan as America's Economic Foe,"; Edward Hudgins, "Japan's Prosperity is not a Danger,"; Robert Elegant, "Educate Japan, Don't Attack Her,"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역안보도 現體制로 유지하려 한다. 세계강국의 발판이 되는 지역이 적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새로운 지역방어전략의 우선고려 사항이다. 기왕의 NATO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구축하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견제하는 기능을 해 왔다. 미국은 유럽질서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NATO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유럽同盟의 형성에는 반대한다.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해 형성된 다국적군처럼 동맹체는 사후적 연합군이어서 하며, 그 합의된 구체적 목적만을 수행하고, 위기해결 후에는 소멸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이 수정된 안이 나왔다.<sup>14)</sup> 4월 16일부터 국방성에서 검토되다 5월 22일 체니 (Cheney) 미 국방장관이 승인한 새로운 문서는 多國籍 集團軍事行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력균형을 위해 군사비 감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새 문서는 독일과 일본의 지역패권을 봉쇄해야 한다는 구상을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에서의 인도의 지역패권추구를 막을 필요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지역이 비민주적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막는 지역동맹에서 미국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유럽과 태평양지역은 미국의 무역, 투자 및 군사협력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중동도 적대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경제적 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안보에 중요한 지역이다.

새 문서의 목표에서도 戰略的 抑止에서의 指導力과, 잠재적 적국을 억지시킬 강력한 방어능력은 탈냉전 후의 미국대외정책에서 변함없는 요소이다. 미국이 世界警察 (globo-cop)은 될 수가 없고 모든 국제안보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없으나, 미국국익을 위협하는 안보문제를 해결할 군사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익, 동맹국의 이익, 또는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책임은 있다고 했다.

그 대응시 적은 비용과 모험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단으로 기왕의 동맹국 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여러 국가들과의 軍事協力の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쿠웨이트가 걸프전 이후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러시아와도 안보조약 체결을 협의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冷戰시대의 미국의 역할이 (對蘇)封鎖者였다면, 脫冷戰시대에는 調停者라고 볼 수 있다. 그 조정자 역할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세력균형이 되도록 하는 均衡者 역할과, 미국이익에 중요한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는 仲介者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전자는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의 역할과 비슷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동맹의 유동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나토와 미일동맹을 보다 유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큰 신임을 얻어야 가능하다. 후자의 역할은 최근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에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두 나라 접경에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양국이 합의한 것을 보면 미국의 중개자 역할은 중동지역에서도 기능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또 유럽주둔미군은 독일을 여타 유럽국가들과 통합시키며, 서유럽과 동유럽도 연

*Orbis*, 36 (Fall, 1992), pp.491-516.

14"Superpower Notion Gives Way to Collective Approach," *New York Times*, (May 24, 1992)

15Coll (1992)

16물론 시리아는 러시아군이 배치되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시킨다. 아시아주둔 미군도 동북아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을 무마시키는 측면도 있다. 미국군사력 없이는 그러한 지역들은 금세기 전반에서 보았듯이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실지로 이러한 역할은 미국경제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고, 미국의 지도력이 군사력과 경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동맹국과의 교섭에서 얻은 외교협상능력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조정자 또는 균형자 역할이 아닌 영원한 唯一強大國으로 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제무대에서 이를 대체할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잠정적이고 예외적인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영구화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이라든지 또는 국제질서관의 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실지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미국국내여론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도 결국 費用의 문제이다. “유일초강대국”정책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결국 경제적 파멸이 올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너무 개입하지도 않고 그러나 너무 고립하지도 않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다. 즉 미국 동맹국의 이해가 중요한 地域의 安保는 同盟國들도 책임을 分擔하게 하면서 개입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경제적 순이익을 남긴 걸프전쟁에서처럼, 集團安保의 기능을 인정하는 이면에는 費用節減의 목적이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에 직접 깊숙히 개입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국가들이 지역안보기구를 만들어 그들 스스로 안보문제를 협의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비용절감의 측면에서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안보의 효율성도 반감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개입하고 해외원조를 하는 것은 비용이 계속되는 한은 미국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부담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안보체제는 더욱 현실적이다.

미국은 자국이익의 보존을 위해 國際制度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발방지와 군축 그리고 핵확산금지를 통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불안정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대통령 부시는 유엔총회연설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유엔을 좌지우지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시의 이같은 유엔평화유지활동 강화촉구는 미국이 유엔의 위상과 기능을 내세워 미국의 經費負擔을 줄이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걸프전쟁시 유엔결의가 없었더라면 사우디 아라비아 등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참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미국이 그렇게 남는 장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集團安保나 國際機構를 통해 미국이 적은 비용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계속 누리라는 보장은 없다. 일본 등 유엔분담금이 날로 커지는 국가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이 신장되고 있다. 걸프전에서의 미국주도의 신 국제질서도 다국적군에 참가한 국가들이 원유공급의 안정이라는 자국국익 때문이었으며 앞으로의 분쟁에서 미국을 따른다는 보장은 없다.

### 3. 費用과 利得의 原理 - 美國의 衰退와 選擇

타국의 쇠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배국으로 군림했던 美國이 衰退하는 것도 미국의외교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sup>17)</sup> 미국의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군사력이었다. 비록 군사력은 외교에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도 쓰여지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차대전 이후의 미국의외교정책은 군사화와 개입주의화로 상징되었다.

미국이 타국보다 군사력이 압도한 시대에는 強壓(compellence)이라는 말로 상징된다. 1939년 맨하탄계획으로 원자력개발을 추진할 때 “집승을 다룰 때는 그것을 집승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트루만의 말처럼 힘의 우위를 이용한 외교정책의 추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힘이 적을 설득시키거나 적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힘 우위의 시기에는 미국은 핵무기를 싸우는 목적이 아닌, 핵이 없으면 타국이 하지 않을 것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차대전 이후 미국은 핵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으나, 그것을 사용할 의지는 여러번 강조해 왔다. 공산주의 지배지역을 자유화시킴으로써 철의 장막을 걷어올리겠다는 롤백(roll back), 핵파괴의 위협으로 소련을 몰아부친다는 극단정책(brinkmanship), 대량보복정책(massive retaliation) 등의 정책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19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힘의 우월이 평형으로 바뀔에 따라 강압의 정책도 抑止(deterrence)로 바뀌었다. 대량파괴의 무기는 외교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억지의 수단만이 되었다. 즉 타국이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의 시기와 장소는 미국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의 공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력은 군사력 외에 경제력도 중요하다. 미국 經濟力의 衰退는 미국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물론 경제력 쇠퇴로 인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도 소련의 붕괴로 인해 가능하였다. 그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고립주의, 민주주의, 국방비 삭감, 전력구조 개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孤立主義의 모색

유럽의 문제에 불간섭하는 것은 미국독립 이래 금세기초까지 미국외교의 전통적 행태였다.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세계는 너무나 통합되어 있다. 미국공화당의 부카난(Patrick Buchanan)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문제에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도 내지말고 해외원조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많은 국내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의 경쟁력도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國內優先主義(America First) 운동도 상호의존적 국제관계에 대한 좌절감이 민족주의적 목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고립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다.

1992년 2월 3일 파워(Colin Powell) 합참의장의 상원 증언에서, 미국은 세계유

---

17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일의 초강대국이며, 미국 역사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시대는 없었으며, 이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1920년대의 1930년대의 고립이 이차세계대전을 야기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정책실무자와 학자들은 國內정책과 對外정책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초국가적 상호의존의 시대에서는 消費와 投資 간의 우선 순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내에서 孤立主義와 國際主義의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介入의 方式과 程度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군사개입에 반대하나 통상개방과 민주화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면서 군사개입은 찬성할 수도 있다. 요는 介入의 費用이 작다면 개입은 늘 미국국민에 의해 支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2) 美國의 民主化 추구

탈냉전시대 이후 미국의외교정책의 방향에서 강조되는 것은 人權과 民主主義이다. 민주주의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는 별 관찰되지 않으나, 민주주의국가가 다른 체제보다 전쟁을 덜 하는 것도 아니다.<sup>18)</sup> 그러나 최근 미국정부의 입장은 민주주의가 전쟁억지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舊蘇聯을 民主化시키는 것도 美國의 利益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구소련의 국가들이 민주화를 제도화하면 구소련의 대서방위협은 사라지고, 실패하면 양차대전 사이의 중유럽과 동유럽국가들처럼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여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세계는 미국에게 더 안전하고 번영스러운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무상원조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sup>19)</sup>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무상원조를 시행할 의지와 능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위해 더 많은 해외원조를 하자는 주장은 미국국내에서 별 지지를 얻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국방을 위해 더 큰 방위비를 부담하자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지를 얻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외교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지는 않았다. 냉전의 시기에는 권위주의정권을 돕고 민주적 정권의 전복을 도왔던 예는 많았다.

다만 오늘날의 미국의외교는 自由市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이 미국국익에 가장 부합되고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폐쇄된 국가주의적 사회보다는 자유정치경제체제인 개방사회가 그 자체가 안정적일 뿐 만 아니라 미국이익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 3) 國防費 削減

탈냉전시대의 미국국방비삭감에 대한 안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國防部 안이며, 다른 하나는 議會 안이다. 전자는 체니 국방장관과 파월 합참의장에 의해 제기된 것이고, 후자는 하원 국방위 위원장인 위스코신 주 민주당 의원 아스핀(Aspin)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sup>20)</sup> 국방부안은 소련이 존재할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련의 붕

18민주주의와 외교정책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특집호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5 (June, 1991) 를 참조할 것.

19Diamond (1992)

20Patrick Tyler, "U.S. Strategy Plan Calls for Insuring No Rivals Develop," *New York Times*, (March 8, 1992); "Senior U.S. Officials Assail Lone-Super Power Policy," *New York Times*, (March 11, 1992); "Superpower Notion Gives Way to

괴로 적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또한 대폭 감축을 포함하고 있다. 파월 미국 합참의장은<sup>21)</sup> 동서간에 냉전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美軍 兵力數를 25% 감축하고 防衛豫算을 20-25%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국방예산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 아래 1995년까지 현재 병력의 25%가 줄어든 160만 常備軍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1991년 여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감축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1995년까지 병력 160만을 유지한다는 당초의 계획보다 20만 정도 줄어든 14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한국,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추가감축이 불가피해지고, 미국예산감축에 따라 주둔국에 대한 방위비분담 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1992년 10월 1일 끝나는 92회계연도 미국국방예산은 2910억 달러이며 부시대통령은 93회계연도의 국방예산으로 281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1992년 10월 1일 미국 상하원은 유럽주둔 미군을 오는 1996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재외 기지유지비를 현지 정부에 보다 더 부담시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모두 2743억달러 규모의 1993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sup>22)</sup> 냉전체제종식 이후의 미국 國防豫算은 2500억 달러 미만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타임지는 미국이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있지 않으며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및 시리아 등의 6개국의 적국만이 있기 때문에 1950억달러의 예산으로 필요방위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97회계연도까지 85회계연도에 비해 37% 감소하여 GNP의 3.4%만을 군사비로 사용하는 1940년 이래 최소의 국방비를 예상한다. 1987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27%에 해당하던 국방비도 1997년에는 16%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의회는 이보다 더 큰 삭감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삭감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당초 세웠던 戰略目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미국은 구소련이 이끌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위협이 사라진 유럽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주둔시킨 채 두 개의 큰 지역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계속적 유럽주둔은 안정유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을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독일의 병력수가 중유럽주둔 미국과 러시아 군대의 병력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해공군력도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본다. 따라서 一定水準의 軍事力은 維持하려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다. 대폭적인 삭감은 미국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와서 이라크와 같은 적대국들로 하여금 주요 지역의 지배를 시도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4) 戰力構造 改編

Collective Approach," *New York Times*, (May 24, 1992); Les Aspin, "An Approach to Sizing American Conventional Forces for the Post Soviet Era: Four Illustrative Options," February 25, 1992; W.Y. Smith, "U.S. National Security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Quarterly*, 15 (Autumn, 1992), pp.23-34.

<sup>21</sup>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the Budget, United States Senate, (February 3, 1992); Interview by the Washington Post, (May 5, 1992)

<sup>22</sup>*New York Times*, (August 30, 1992)

장래 미군의 4대요소는 대서양을 넘나들며 중간급 내지는 아주 치열한 전투를 담당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갖춘 “중무장군(Atlantic forces)”, 한국 및 하와이 주둔 미군 및 장비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경무장군(Pacific forces)”, 미국본토에서 파나마 등과 같은 세계의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신속 배치군(Contingency forces)”, 초강대국간의 분쟁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핵군(Strategic forces)” 등이다.

군사력을 전략군, 대서양군, 태평양군, 긴급군 등의 네 가지로 나눌 때, 사회주의권 특히 소련의 붕괴로 인한 미국 군사력의 변화는 戰略核軍과 緊急軍이다. 소련의 붕괴는 미국이 근 45년동안 추구해왔던 소련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봉쇄한다는 외교정책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유럽에서 시작되는 소련과의 世界戰爭에서 地域戰爭을 대비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1992년 7월 28일 미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아태지역 미군사력 유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소련의 붕괴후 유럽에서 시작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상전쟁시나리오는 부적절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계전략을 세계적 시나리오에서 걸프전쟁과 같은 지역적 시나리오로 생각하게 되었다. 위협국들도 북한, 이라크, 이란 등과 같은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로 인식한다. 따라서 세계중심의 동맹관계도 地域중심으로 되었다.

미국은 1957년 이래 처음으로 전략폭격기를 한 대도 대기하지 않고 있다. START 조약 등으로 인해, 미국전략핵전력은 1991회계연도와 1999회계연도 기간에 40%감축할 것이다. 최근 1992년 10월 2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93회계연도 에너지관련계획 세출법안을 서명했는데, 그것에는 미국의 지하핵실험을 9개월간 동결하고 오는 1996년 9월 이후에는 핵실험을 전면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핵역지는 보장되고 타국이 핵군비 경쟁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핵은 보유할 예정이다. 탄도미사일의 세계적 확산과 정치혼란으로 인한 위협은 증대되는 것으로 미국은 인식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SDI계획을 GPALS(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Nuclear Strikes)로 변경시켰다. 걸프전쟁의 경험으로 전략적 방어계획도 전장미사일 방어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이 경비질감을 위해 그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할 나토군도 1992년 10월 2일 탈냉전시대의 군사적 현실에 부응키 위해 나토 迅速對應軍을 공식 발족시켰다. 16개 나토회원국 중 12개 국가 군대로 구성될 신속대응군은 주로 나토회원국 영토안에서 작전을 펼 것이고, 아울러 유엔이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요청에 따른 평화유지 및 인도적 차원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갖추어 것으로 되어 있다. 기동성이 뛰어난 소수의 병력으로 다국적부대를 운영하고 위기관리임무에 중점을 둔다는 나토의 새로운 군사 전략에 따라 창설된 신속대응군은 나토역내 위협지역에 2주안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대응부대는 1주일 내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한다. 현재 신속대응군은 300명의 본부 병력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오는 1995년까지 10개사단 8만 병력으로 증강될 예정이다.

아울러 海外駐屯美軍에 대한 개편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 또한 해외주둔이 經濟的이라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새로운 초강대국이 어떤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국가들과 유럽국가들이 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원하고 있다. 특히 주일미군은 일본이 부담을 계속하는 한은 미국으로서는 아주 합리적 선택이다.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미군주둔의

찬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카소네 전일본수상과 같은 일본지도자도 미군주둔이 일본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 경제적 이유로 주둔규모는 감축되어 상징적인 의미로 주둔되지만, 그 역할은 변화하지 않는다. 미군을 해외에 계속 주둔시킨다든지 핵전력군을 유지한다는 것은 탈냉전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국방비 삭감이나 군사력 감축을 얼마큼 하느냐 하는 논쟁만이 있다.

\* \* \* \* \*

이상에서 언급한 소련의 붕괴로 인한 미국 선택의 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既往의 同盟을 새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過去の 敵對國과 새로운 協力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미국외교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둘째, 미국은 영원한 唯一超強大國이 되기를 희망하나 이는 불가능하고, 소련이 아닌 일본과 독일 등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유일강대국이 아닌 主導的 調停者 역할은 당분간 수행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도 결국 費用의 문제이다. “유일초강대국”정책을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결국 경제적 파멸이 오기 때문에 너무 개입하거나 너무 고립하지 않고 비용이 적은 범위에서 개입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다.

넷째, 소련의 붕괴로 대소봉쇄선의 목표는 쇠퇴하였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이 아닌 地域的 차원으로 안보정책을 추진하여, 戰略核軍을 감축하고 緊急軍을 증강하였다. 즉 미국 동맹국의 이해가 중요한 地域의 安保는 同盟國들도 책임을 分擔하게 하면서 개입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쇠퇴하에서 비용절감책의 일환으로서 소련을 봉쇄하는 쌍무방위조약 또는 집단방위조약을 풀고 地域集團安保체제 또는 國際機構의 역할을 용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붕괴 이후의 미국의 선택을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련이 붕괴한 직후에는 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미국외교정책의 방향이 잡혀져 왔다. 그래서 미국안보전략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안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새로운 국제질서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도 과거처럼 어떤 위협에 대비한 정태적 정책이 아니라 국제질서를 미국에 유리한 식으로 변모시키도록 노력하는 동태적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自由市場과 같은 國際制度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韓國國際政治學會 湖南支會 學術會議

동유럽의 政治, 經濟改革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

尹 德 熙  
(민족통일연구원)

韓國國際政治學會  
1992년 10월 23일-24일 (금, 토)



## 동유럽의 정치·경제개혁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

윤 덕 희 (민족통일연구원)

### I. 서론

과거 동구라 불리던 유럽의 소련 위성국들은 이제 「중·동부 유럽」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뀐 것은 1989년 정치변혁이후 이들이 과거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끌려들어 갔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의 '동쪽'(소련진영)으로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sup>1)</sup>을 피하고 있으며 특히 중부유럽에 위치한 나라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은 이미 상당한 단계의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모든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동유럽의 현 변화의 논리를 정리해봄으로써 동유럽 변화의 성격과 특수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문제점을 통해 동유럽의 현 변화의 향방을 조망해보자 한다.

### II. 동유럽 변화의 논리

우리는 현재의 동유럽의 변화를 넓은 의미에서 민주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으로 세계의 민주화는 '물결'의 형태를 띠면서 이루어졌다. 첫번째 물결은 19세기에 일어나서 1914년까지 20개의 민주국가를 형성시켰다. 이 민주화운동은 양차대전중간기와 2차세계대전동안에는 전체주의체제와 권위주의체제의 확산으로 다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연합국의 승리와 전후 식민지해방은 민주화의 두번째 물결을 가져왔다. 60년대에 벌써 40개의 민주국가가 존재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민주화 과정은 제3세계에서의 위기 등으로 늦추어졌다.

1974년 부터 새로운 민주화 물결이 소용돌이 쳤다. 우선 남부유럽에서 포르투갈, 그

1)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 모든 나라에서 다당제와 자유선거 등 민주적 정치개혁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구 공산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가 정착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국민들이 사회주의적인 정치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리스, 스페인의 독재가 무너지고, 남미에서는 대륙의 가장 큰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독재국가에서 정권이 무너진다. 80년대에는 필리핀과 한국 동아시아에서 민주화가 일어났으며, 80년대 말과 90년대초 민주화는 전세계의 놀라움속에서 수십년간 공산정권하에 놓였던 동유럽을 휩쓸고,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의 본산인 소련에도 침투한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장소와 상황속에서 발생한 이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우선 여러가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다당제와 의회제도의 정상화, 이전의 정치엘리트와 새로운 정치엘리트간의 일종의 타협, 강대국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경제의 붕괴와 고도의 인플레이, 극심한 의제 등 심각한 위기를 동반하는 하나 피의 속성 없이 대부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있어서 공산주의체제와 권위주의체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전, 사회민주주의이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된 과정을 보면 1/시장경제가 먼저 수립되고, 이 시장경제가 다원주의적인 사회조직의 수립을 촉진시키므로써 2/시민사회의 형성을 가져오고, 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체제의 기반이 되는 3/정치적 다원주의를 초래했다. 물론 이와 같은 도식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모범형」(Ideal type)에 불과한 것이다.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주로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변화만으로 완결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체제의 경우는 경제, 사회, 정치 세 측면에서의 변화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민주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공산주의 이후의 국가'(Post-Communism)들에서 나타나는 민주화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일반적인 민주화 도식(시장경제의 수립→시민사회의 형성→정치민주화)과는 반대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정치적 변혁으로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수립되었으나, 다원주의적인 시장경제의 기반과 발달된 시민사회의 기본 골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한 민주화 과정은 동유럽국가들이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과정을 살펴보면으로써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은 1950년대이후 나름대로 공산주의체제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해왔다. 우선 50년대와 60년대 개혁공산주의자들은 경제분야에서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즉 경제적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적 전환은 훨씬 후에 장기적인 진명해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 「시장사회주의」를 수립하려는 목적하의 일련의 모든 경제개혁은 실패하고 말았다.」



70년대에 동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주도세력들은 공산국가에서의 다른 형태의 진보를 조망하였다. 권력내부의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루마니아, 헝가리, 동독에서) 지배적인 의견은 서구와의 데탕트하에서의 경제협력만이 경제회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 정치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적 근대화가 국가의 법치성, 사회의 자율성, 서구로의 개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의 경제적 개혁·개방에 의한 체제변화 유도 전략은 결국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70년대 중반에 동유럽의 사회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다른 동구국가들에서도 미약한 형태로 이긴 해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적인 반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 운동의 철학은 1980-81년 「솔리다르노시치」의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명시되었으며 1989년 동유럽체제를 붕괴시킨 혁명에 강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사상운동으로 출발한 동유럽의 반체제운동의 근원에는 전체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사회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존재한다. 조직화된 자율적인 사회만이 경제적 변화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마지막으로 일어날 민주체제의 수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사실상 70-80년대의 반체제세력이 시민사회의 개혁을 최우선시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1956년의 헝가리, 폴란드사건, 1968년의 프라하의 봄)을 통해 소련의 위협이 동유럽에서 어떠한 정치체제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경제개혁에 초점을 둔 이전의 개혁공산주의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대한 이 모든 전망은 현실에 의해 부정되었다. 1989년 이후 동유럽에서의 변화는 예상 밖의 모습을 띠었으며 변화 단계의 순서가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다.<sup>3)</sup> 공산체제는 체제의 가장 견고한 핵심 같이 보였던 정치분야에서 먼저 폭발했다. 정치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빠른 변화가 일어났다. 반면에 시

- 
- 2)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경제개혁의 과정과 실패요인에 관해서는, 자크 루프니(저) 윤덕희(역), 「오늘의 동유럽」, 1990, 문학과 지성사, pp.357-370.을 참조할 것.
  - 3) 이는 폴란드 반체제가 1980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폴란드 정권에 게 한 주장이다. 동유럽의 반체제에 관해서는, Miklos Molnar, *La Democratie se leve à l'Est*, Paris: PUR 참고.
  - 4) 이것은 공산체제하에서 경제개혁의 실패와 시민사회 재건의 한계를 경험한 국민과 권력사이에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존해 있었으며, 이에 소련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가능해졌다. 동유럽변화의 배경 및 요인에 대해서는, 윤덕희, 「동구 정치개혁의 현황과 성격」, 서울대학교 소련·동구 연구소, 1990.4. 참고할 것.

민사회의 재건은 훨씬 어렵다는 것이 점차로 판명되었으며, 경제변화는 극도로 복잡하고 많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면 동유럽의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유럽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정치변화

### 1. 정치변화의 다양성

소련에 대한 외부적 자살과 권력엘리트와 국민들과의 화해라는 내부적 변화의 결과로 더 이상 동유럽에서 공산체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후 정치변화는 각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전통, 변화 가능성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하였다.

정치변화에 있어서 중부유럽과 남동부유럽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구분이 지워진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 동독(독수한 경우에 속함)과 같은 중부유럽에서는 짧은 기간에 과격한 정치변화가 일어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성숙한 시민세력의 자유화·민주화 요구가 정치변혁을 초래하여,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정권이 몰락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공산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남동부유럽의 상황은 다르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고 유고의 가장 큰 세르비아공화국에서는 중부유럽에서의 변혁의 여파로 공산당 일당독재가 폐지되고 자유선거를 치루긴하였지만, 92년 초까지 2년여동안 공산지도자들이 사회당으로 변신하여 집권하거나 옛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구국전선이 권력을 잡고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꾀해왔다.<sup>5)</sup> 92년초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에서는 경제난이 원인이 되어 총선에서 사회당이 패하고 야당이 정권을 잡게됨으로써 이제 경제개혁과 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아직도 구 공산세력이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sup>6)</sup>

- 5) 루마니아의 「구국전선」은 집권후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는 등 과격한 정치변혁을 선언하였으나,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아직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M. Berindei and A. Combes, "Roumanie, une revolution manquee?", in Pierre Kende, *La Grande Secousse: Europe de l'Est 1989-1990*, Paris: Presses du CNRS. M. Calinescu and V. Tismaneanu, "The 1989 Revolution and Romania's Future", *Problems of Communism*, Jan-April, 1991.
- 6) 알바니아에서는 92년 7월 말 실시된 지방의회 및 자치장선거 결과, 구 공산세력이 전제함이 확인되었다. 유권자의 72%가 참여한 이 선거에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 2. 전환기의 정치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전환의 성공여부가 상당부분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유럽에서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전환의 성공여부 역시 전환기를 관리하는 정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동유럽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다양한 형태, 즉 민주정치적의 다양한 변형이 표출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동유럽의 민주화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민주정치적의 어떠한 변형이 현 전환 단계에 가장 적합한가 하는 문제다. 즉, 어떠한 민주제도가 한편으로는 전환기동안의 엄격한 경제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강하고 안정되며 일관성있는 정부를 수립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불평을 의회제도의 틀내에서 완화시키므로써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고 관용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변화 과정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서로 상이한 정치제도를 선호 또는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강한 대통령만이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sup>7)</sup> 반면에 헝가리에서는 이미 의회가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대통령의 실권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사실 폴란드, 체코의 경우와 헝가리의 경우는 정치적 다원주의의 상반되는 두 모델이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 9월비공산 정부출범이후 정권을 잡은 「솔리다르노시치」가 그후 분당을 거듭하여 현재는 「민주연합」, 「자유민주회」, 「자유노조계열 7개 정당이 연정을 이루어 집권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92년 6월 총선까지만해도 하벨이 이끄는 「시민포럼」과 슬로바키아 동맹당인 「반폭력 대중운동」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었다. 헝가리에서는 1990년 4월 자유선거 이후 「민주포럼」의 주도하에 야당인 「자유민주주의자 연맹」, 「소지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해나가고 있다.

유호수표수의 43%를 획득하여 41%를 차지한 사회당을 누르고 1위를 하였으나, 사회당(45%)이 민주당(38%)보다 많은 도·시·군위원을 배출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아울러시장 및 군수 선거에서도 사회당 출신이 56%를 차지한 데 비해 민주당 출신을 40%에 머물렀다.

- 7) 1990년 7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폴란드 국민들의 52%가 국가의 최고 권한이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43%만이 의회가 최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정권의 붕괴를 야기시킨 반공산 시민운동조직이 결국 집권하였고 헝가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세력들이 연합하여 집권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적인 정치변화 과정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이 상이한 민주화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었다. 폴란드에서는 이미 1980-81년에 「솔리다르노시치」하에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공산 연대가 수립되었으며 공산정권이 붕괴하기까지의 투쟁과 탄압은 국민들을 「솔리다르노시치」하에 결속시켰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77헌장」운동 이후 본격화된 반체제운동이 89년의 혁명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결속을 가져왔다.

반면에 헝가리에서는 89년의 정치변화가 권력의 양보에 의해 주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에 등장한 헝가리의 반체제는 한번도 커다란 대중운동으로 발전한 적이 없었다. 1989년 공산권력은 그들의 정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족적·인민주의적인 세력, 민주기독교 세력 등과 협상을 하였으며 이것이 「민주포럼」의 탄생을 가져왔다. 또한 이에 즉각적으로 대항하여 자유주의적 세력과 사회민주주의적 세력들이 규합하여 조직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자동맹」이었다. 즉, 헝가리에서는 현 민주정부와 대중운동 사이의 연계가 매우 약하다.<sup>8)</sup>

고려해야 할 사항 중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서구식 민주적 다원주의로 전환하는 데는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과 혐오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당 개념은 공산당과 일치하며, 정치는 부도덕, 부정·부패와 동일시되었고 그 주체는 공산당이였다. 정치에 대한 거부반응은 과거에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나친 정치화에 대한 역반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럼」, 「전선」, 「협의체」와 같은 용어들이 인기있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새로운 정치조직들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이익, 가치, 전통에 대하여 규정지워진다고 볼 때, 현재 동유럽국가들에서는 빨공산화 과정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과 아직 소련식 경제모델을 청산하지 못한 이유로 다양한 사회그룹들의 이익이 선명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지배적인 갈등은 중앙권력, 즉 국가와의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치 조직들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도 제대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사이에 사회 불평등, 사유재산 문제 등에 관해 미묘한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세력들 스스로에게나

8) Aleksander Smolar, "Les incertitudes de la transition démocratique", in Pierre Kende, op.cit. pp. 176-7 참조.

국민들에게나 그 차이가 아직 선명히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모호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과 사회내의 새로운 분열로 인한 혼란이다. 아직도 공산체제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모든 분열을 뒷전에 미루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투쟁 대상이 사라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적 분화 내지는 분열이 조장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사실상 동유럽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집권한 권력 내부에 새로운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도 반체제운동 내부에 전통과 이념상의 심각한 다양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공산체제라는 공동의 탄압자에 대항하여 단합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은 공산권력과 반체제간('그들'과 '우리')의 큰 갈등 대신에 반체제 내부('우리들사이')의 작은 갈등들이 자리잡고 있다.<sup>9)</sup>

동유럽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슬리다르노시치」의 결속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대신 아담 미흐너, 게메덱과 같은 지식인의 지지를 받는 마조비에츠키 전수상이 결성한 「민주동맹」과 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바웬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동맹」, 그리고 폴란드 경제개혁의 기수 비엘레츠키 전 수상이 이끄는 「자유민주회의」 사이에 사유화 속도, 구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태도 등을 놓고 입장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sup>10)</sup> 이들간의 갈등은 91년 10월 총선 이후 대통령, 내각, 의회간의 잇달은 갈등을 초래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어왔으며, 현재 자유노조 출신 정당간의 정책 연합이 형성되긴 하였으나, 내각 내부 또는 내각과 연정의 정당간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견대립이 상존하고 있어 정치·경제 상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슬로바키아의 분리문제를 경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집권세력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체코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완전한 개혁을 주장하는 하넬의 사회

9) 동유럽의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분열에 대해 서방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기능적 기준에 의해 단순한 이분법적인 설명을 한다. 예컨대 "개혁주의 대 강경파" 또는 "체제와 반체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정치엘리트들 내부의 관측은 더욱 복잡하다. 폴란드의 정치엘리트들이 보는 「슬리다르노시치」 내부분열의 핵심문제는, "다원주의 대 새로운 독점"(바웬사), "입헌의회주의 대 비의회주의적 인민주의"(게메덱), "유럽주의자 대 민족주의자"(미흐너), "소외된 노동자계급 대 파잉집권한 인텔리겐치아" 또는 "드시와 농민의 갈등" 등이며 이것들은 결국 "우파 대 좌파"라는 근본적인 이념논쟁으로 발전한다. Timothy Garton Ash, "Europe central : apres le deluge, nous," Commentaire, Winter 1990-91, pp. 664-5.

10) 1991년 10월 27일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총선거 결과를 보면, 마조비에츠키 전 수상이 이끄는 「민주동맹」이 12%로 선두를 점했으며, 「민주좌파동맹」으로 개명한 구 공산당 세력이 의외로 강세를 보여 11%로 2위, 그리고 바웬사의 「중도동맹」은 8.5%로 5위에 머물렀으며, 비엘레츠키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회의」가 7.1%를 획득하였다.

민주세력과 보다 급격한 자유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클라우스 연방재무장관의 우파세력이 본당으로 결별하였고, 슬로바키아에서도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지도자들이 탈당하여 좌파정당을 결성하였다.

연방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92년 6월 총선에서 체코지역에서는 클라우스 재무장관이 이끄는 우파 「시민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한 반면, 슬로바키아지역에서는 분리독립을 주장한 좌파 민족주의 정당 「민주슬로바키아운동」이 승리함으로써 두 공화국의 분리운동이 가속화되었다.<sup>11)</sup> 끝이어 슬로바키아의회는 주권선언을 채택하고 하벨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발로 공식 사임하였으며, 현재 두 공화국의 합의로 93년 1월 1일 연방을 분리하여 두개의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연방헌법개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분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헝가리에서의 내부부쟁도 치열하다. 헝가리의회와 연립정부내에는 좌파에서 우파까지 다양한 종류의 정치 성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사이의 진정한 구분은 단순한 '좌' '우'의 문제가 아니다. 헝가리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두개의 입장과 시각으로 분열되어 있다. 하나는 범세계적이고 도시적이며 서구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자연맹」의 지식인들이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헝가리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적이고 인민주의적이며 때로는 유대인 혐오주의적이기도 한, 「민주포름」의 지식인들이 대표하는 헝가리이다. 전자의 정책노선은 우선적으로 정치·경제질서를 재건하여 '유럽'에 귀속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이웃 국가(특히 루마니아)에 산재해있는 헝가리 소수민족의 운명에 정치적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권당인 「민주포름」내부에서 최근 유대인, 공산주의자들과의 단절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서방경제전문가들과도 결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헝가리의 경제난을 유대인과 서방의 경제간섭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행편이다. 헝가리의 민족주의는 1920년 이후 루마니아, 체코, 유고 등에 편입되어버린 헝가리 영토와 헝가리인들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자칫 중부유럽에서 민족분규가 야기될 우려마저 있다.

물론 갈등없는 다원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해도 반체제의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집권한 새 권력 내부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개인적이고 감

11) 이처럼 슬로바키아 지역에서 좌파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된 것은 90년 6월부터 클라우스가 주도한 경제개혁에 대한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개혁 결과 체코와 슬로바키아간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었는데 현재 슬로바키아 지역의 실업률은 11%로서 체코지역의 4%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높고 89년 이후 외국인부자의 15% 정도만이 슬로바키아지역으로 유입되었다. 『북방경제』, 1992.7. p.17.

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내부의 정치적 혼란에 사회에서의 민족주의적·인종적 반목과 배타주의가 맞물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열과 혼란속의 동유럽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담당할 정치체제는 어떤 것인가? 이들 동유럽국가들은 (특히 민주화과정에 접어든 중부유럽의 국가들은) 민주화의 현 단계에 있어서 강한 대통령과 보다 넓은 정치연합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끌리고 있는 강한 대통령제는 현재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열망과 이익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대중의 지지와 카리스마를 향유한다 해도 경제적 전환을 성공시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유지시키는 어려움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와 결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상의 공동의 적을 설정해서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동원하는 보다 쉬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족주의에 의거한 권위주의체제를 수립시킬 것이나 경제적 전환에 필요한 서구의 경제원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제개혁은 결국 무산될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1/자유선거의 결과로 출범한 2/강한 3/정치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발칸지역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부유럽의 국가들도 이 세가지 조건 중 두가지만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세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다. 헝가리는 자유선거에서 출범한 연립정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매우 약하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자유선거에서 나온 정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체코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연방정부, 체코정부, 슬로바키아정부)가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폴란드에서는 89년 공산정권 몰락 직후 마조비에츠키정부 하에서는 강한 연립정부가 존재했었다. 이 연립정부는 「슬리다르노시치」의 주도하에 공산주의자들과 공산당의 옛 동맹당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연합이었다. 또한 이 연립정부는 동유럽에서 가장 과격한 경제 충격요법을 국민적 화합으로 견디어내도록 할 만큼 강한 정부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연합정부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약점때문에 바웬사가 대통령직에 도전하여 폴란드의 정세를 쉽게 뒤바꿀 수 있었다. 이제 폴란드도 자유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치열한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는 구 자유노조 출신 정당간의 현 정치연합이 언제까지 정국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이며, 자유노조출신정당과 농민당, 사회당 등과의 정책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부유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헝가리는 정부의 세력을 강화해야 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연방과 관련된 분열을 조속히 해결하고 각 공화국내 또는 두 공화국간의 진정한 정치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폴란드도 비 자유 노조계열 정당과의 협상을 통해 진정한 정치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 IV. 경제적 전환

동유럽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론 거시경제적 안정화 문제다. 이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조적 변화와 소유권 전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급진적인 비독점화(비국유화)와 국내의 시장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과 투자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오랜 시간의 복잡한 과정을 요하는 문제다.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동반해야 할 사유재산의 수립에 있어서 벌써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sup>12)</sup>

여기서는 이와같이 복잡한 경제적 전환의 여러 측면들을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제개혁의 몇가지 정치·사회적 측면만을 강조하려 한다.

##### 1. 경제개혁과 「사회권」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을 위한 전환 과정은 새로이 등장한 엘리트가 사회에 제안하는 일종의 '새로운 사회계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엘리트가 사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약하는 효율적인 경제를 장차 수립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대신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경제적 평등과 다른 사회적 권리(공산체제가 명목상 내걸었던 사회복지, 경제권 등)를 포기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지난 3세기동안 「시민권」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우선 양심의 자유, 생명과 양심의 보호권, 사상 표현의 자유 등(이것들은 시민사회 형성의 기본요건이다)의 「개인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정치생활에 진정한 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체제의 근본이 되는 「정치권」이 수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함유하고 공동체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의료권, 교육권, 최저생존권)이 수립되었다.

12) 경제의 사유화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것들을 참고할 것. Marie-Helene Labbe, "Les Privatisation a l'Est", *Politique Etrangere*, Summer 1991. Irena Grosfeld, "Les incertitudes de la transition democratique," in Pierrre Kende, *op.cit.*



공산주의체제가 이 역사적 구도에 가져온 변화는 우선 곳곳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폐지시키고 개인과 국가간에 종속관계(또는 '채무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었다.

반면에 공산정권은 항상 「사회권」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과시해왔다. 실업을 없애고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무상의료를 보장하므로써 보건위생부분은 발달시켰다. 이는 덜 혜택 받은 개인의 사회적 취약성을 보상해준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사회권」내에 「경제권」(경제적 평등권, 노동권 등)이라는 개념을 수립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주인없는 재산'이 되어 엄청난 낭비와 함께 「노멘클라투라」에 의해 관리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졌다. 모두에게 보장된 노동권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으로 결국 위장된 실업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노동의 권리는 노동의 의무로 전락하였다. 복지부문의 실패 또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로지 완전고용만이 제대로 적용된 유일한 「사회권」이었으며 그것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요구했고 개인에게 탄압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공산체제가 몰락한 지금 동유럽국민들은 민주화과정 속에서 나날이 새로운 자유를 되찾고 있다. 이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 등 18, 19세기까지의 「시민권」과 「정치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권리에 있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동유럽국가에서 현재 전환의 목적은 보다 나은 경제적 달성, 즉, 자원의 효과적 사용의 보장이라는데 의견의 일치할 보고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개혁의 실패와 교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관료주의의 논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장논리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유화의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기업의 사유화를 포함하는 소유권의 재분배야말로 시장경제의 환경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유럽국가의 지도자들은 경제의 사유화에 합의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에서의 경제적 전환이 「사회권」의 측면에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는, 첫째 사유재산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대두와, 둘째 경제적 전환과정에서의 실업의 발생이다.

우선 경제의 사유화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새로운 사회적 구분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체제에서는 '소유주'나 '투권'과 같은 개념이 없었

다(가내수공업자와 소경자인 이외에는). 「노덴콜라투라」의 특권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숨겨졌어야 했다.<sup>13</sup> 그러나 지금은 소유와 특권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차이의 경제적 근거를 만들어내므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40여년간 대규모의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사유재산제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고용문제다. 체제 전환기에 있어서 실업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sup>14</sup> 실업은 동유럽 국민들에게는 새롭고 기이한 현상이다. 이들은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부족과 결핍을 겪어왔지만 고용은 예외였다. 이들에게 실업은 불안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실업자들을 도울 능력이 없고 공짜에 빠진 대다수 국민들의 자발적인 보조에도 의지할 수 없다.

동유럽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과정은 그 비용과 이득의 근본적인 재분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분배과정에서 사회의 상류계층과 중간계층은 새로운 시민권과 정치권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소규모이긴 해도, 자본과 기술, 전문지식, 유용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특권층에 「노덴콜라투라」가 속해 있고 이들은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정치적 특권을 새로운 경제적 권력으로 갈바꿈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생활에의 참여가 보다 제한되고 시민권과 정치권을 덜 혜택받는 사회그룹은 파격적인 경제적 변화에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 즉, 경제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분배에 있어서 그 비용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덜 혜택받은 계층이 많이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이득은 사회의 중·상류계층이 누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기의 동유럽국가들에서의 「사회권」의 퇴조를 타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길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예컨대 스웨덴모델을 본따서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수립할 수는 없는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경제의 장점과 자본주의하에서의 최소한도의 평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제3의길'은 국가가 생산과정과 시장에서의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정한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 분배에는 관여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중동부유럽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13) 폴란드인들은 1980년이후에, 그리고 동독인들은 1989년에야 비토소 그들의 정치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개인재산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 14) 1992년 1월 현재 구동독의 실업률이 11.8%로 가장 높고, 폴란드 11.4%, 불가리아 10%, 헝가리 7.3%, 체코 6.6%, 루마니아 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들어 실업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올해 6월달 12.6%의 실업률을 나타냈으며, 산업도시에서는 실업률이 30%를 돌파했다.

정신적·환경적으로 황폐하고, 막대한 부채에 자본이 모자란 동유럽에서 이런 종류의 국가가 등장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50%의 소득을 거둬들이는 스웨덴에서 처럼 국가가 효과적인 재분배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과 현대적 시장경제의 형태하에 견고한 골격토대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5)</sup>

## 2. 서구의 역할

이제 동유럽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과 다시 합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이들을 서구와 구분시키는 모든 차이가 단지 수십년간 공산체제하에서의 왜곡과 변질에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훨씬 전 이 지역의 역사와 과거에 뿌리박혀 있는 현상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인 '붕구'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은 '서구'가 아닌 현대세계의 주변에서, 저발달과 끊임없는 인플레이, 나날이 증가하는 실업, 외채, 대규모 이민 등에 시달리는 '남쪽' (저개발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동유럽의 장래는 상당부분 서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대륙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또 유럽전체가 통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난 40년간 서구의 동구공산국가들에 대한 정책은 두개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첫째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구는 소련침략과 파르사바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동유럽의 모든 원심적인 경향을 부추겨왔다. 둘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와 인권에 대한 법세계적인 인식을 반영하여 동유럽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왔다. <sup>16)</sup> 동유럽에서의 소련군의 철수와 소련지배의 종식으로 서구의 안보 위협은 사라졌으며 첫번째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러나 두번째 목표인 민주주의는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또한 서구의 도움없이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동유럽 국민들이 서구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충분히 오지않고 있다. 서구의 정부에게 동유럽의 정치적 민주화와 이를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인 경제조건은 동유럽 국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시급하지 않다. 더구나 이들은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지우는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떠맡길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15) 스웨덴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국민총생산의 90%를 차지한다.

16) Charles Gati, "East-Central Europe: The Morning After", *Foreign Affairs*, Winter 1990/91, pp.142-3.

그러나 장기적인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서유럽의 정부는 동유럽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첫째로 서구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 같이 막중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의 부담을 적감시켜 주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는 유럽 공동체에 이미 관회원 자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서구의 정부는 동유럽에서의 개인 기업의 부지를 적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두번째 서구가 해야 할 일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동유럽국가들에서 민주적인 가치가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냉전시대에 그랬듯이 서구는 동유럽의 진정한 민주화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번째로 서구는 동유럽 국가들이 지역협동체제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적려해야 한다. 그것이 「5각의 주도」(Pentagonal Initiative)이건 「헬싱키시대」이건 동유럽국가들 상호간의 협력은 서구의 도움과 병행해야 한다. 즉, 우선 지역국가들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안보적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서구의 관계를 형성·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소련의 영향력 감소로 인한 동유럽에서의 안보공백이 유럽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협력의 성공은 또한 현재 동유럽의 민주화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국가간 민족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명실공히 민주적인 유럽에 다시 참여하도록 도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V. 결론

결국 현재 동유럽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환기의 '과도한 민주주의'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들의 실망과 초조함이다. 이는 불가인상, 실업, 새로운 불평등, 느린 변화 등의 현상에 대한 단순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초조함은 이러한 현상의 책임이 급속한 변화를 저지하는 의회민주주의 과정 자체에 있다고 인식하는데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89-90년의 급

17) 동유럽의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Curt Gasteyger, "The remaking of Eastern Europe's security," March/April 1991, *Survival*, 참고.

속한 혁명적 진보에서 지금의 의회민주주의의 느린 행보에로의 전환에 정신적으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조바심에서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표출되는 것이다.

둘째, 새로이 생성되는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느리고, 무질서하고, 불완전하다. 엄밀한 의미의 정당과 행동법칙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동유럽의 새 지도자들은 일상적으로 복합적인 갈등과 함께하는데 익숙치 않다.

셋째,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는 혼란과 궁핍은 더욱더 지도자들의 분열과 국민들의 실망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의 분열, 국민들의 실망, 경제적 비참, 이 세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변혁기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개혁을 위하여 주요 정치·사회세력들의 충분히 폭넓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솔리다르노시치」, 「시민포럼」 등의 초정치적 단체들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룸과 동시에 광범위한 정치연합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번째 해결책이 실패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두번째 해결책은 권위주의적 정치에로의 회귀다. 이 경우 인민주의적 민족주의에 의거해서 국민을 동원하여 경제적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혼란과 정치적 실패를 의미할 것이다.

---

18) 최근들어 동유럽국민들이 점점 구 체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1992년초 헝가리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2%가 공산체제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韓國國際政治學會 湖南支會 學術會議

中國의 變化  
- 改革, 開放의 理論과 實踐 -

金 昭 中  
(배재대학교)

韓國國際政治學會  
1992년 10월 23일-24일 (금, 토)





# 中國의 變化 : 改革·開放의 理論과 實踐

金昭中(培材大學校 敎授)

## <目次>

- |                                      |                     |
|--------------------------------------|---------------------|
| I. 서론                                | 2. 경제체제 개혁 : 목표와 실천 |
| II.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의<br>中國에 대한 충격과 위기감 | 3. 정치체제 개혁 : 목표와 실천 |
| III.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원인과<br>관련된 中國의 思索  | 4.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
| IV. 改革·開放의 당위성에 관한 최근 理論             | 5. 개방정책 : 목표와 실천    |
| V. 改革·開放의 目標와 實踐                     | 6. 개혁·개방의 효과        |
| 1.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목표                    | VI. 改革·開放에 있어서의 問題點 |
|                                      | VII. 결론             |

## I. 서론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등의 공산당 서기장을 거치면서 군사강국으로 미국과 함께 20C 세계정치를 지배해 왔으나 오랜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누적된 정치적 관료주의, 비능률적이고 불균형적인 경제, 무기력하고 창의성 없는 사회 분위기등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도입, 소련사회의 「人間的인 民主的 社會主義」건설을 위해 공산당 一黨獨裁의 폐지와 그 지도적 역할의 否定 및 多黨制 導入, 公有制(國營經濟)의 부분적인 私所有制(私營經濟)로의 전환, 중앙집권적인 계획·통제경제체제의 個人·企業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 경직된 관료기구의 개편과 民主化, 權力分散, 직접·비밀선거 실시와 複數候補競選의 선거제도로의 개혁, 의회 민주주의 실시, 각 구성 공화국의 권한 확대 등등을 서둘러 채택하는등 세인을 경탄케 하는 획기적인 「新思考」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1.8.19.-21. 이에 불만을 품은 「강경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해 고르바초프와 공산당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는데다가 고르바초프의 점진적인 시장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정책은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온건하다고 불만을 품고있던 엘친을 위시한 급격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소련연방의 근본적인 해체를 지향했던 「급진 개혁파」들의 공격의 틈바구니에서 「온건 개혁파」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절을 겪게 되으며, 드디어 공산당 붕괴, 마르크스주의 포기, 고르바초프의 공산당 서기장직 및 대통령직(소련방 최고회의 의장)해임,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권력승계, 소련연방의 해체, 구성 공화국(15개)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공화국을 제외한 기타 11개 독립 공화국이 12월 21일 카자흐 공화국 수도 「알마아타」에서 모여 느슨한 관계의 「독립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성립을 공식 선언하여 구 소련연방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래 구성 각 공화국들에 독자적인 권한을 강화시켜 주고 소련연방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유지하는 형태로 소련연방을 개혁(개편)하려 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신연방조약」안은 완전히 좌절되었고 각 공화국들은 완전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승인이 잇달았다."

1) 東亞年鑑(1991年), 동아출판사, PP.408-414; 東亞年鑑(1992年), PP.302-304 참조.

이처럼 74년간의 소련 공산당 집권의 흥망성쇠와 서방세계에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되어왔던 소련 연방의 붕괴는 20C 후반의 인류문명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또한 1989년 이후 동구 사회주의 제국의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 및 제도의 몰락도 역시 세계역사 변화에 계속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제 독립국가연합·동구諸國은 사회주의 근본원칙인 生産資料의 公有制 및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私有制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공산당 일당독재도 포기하고 多黨制를 채택, 상호 경쟁을 통한 정권창출을 지향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나감으로서 확실하게 資本主義로 향한 「和平演變」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sup>2)</sup>

2) 東歐諸國의 변화를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東亞年鑑(1991년), PP.414-419; 東亞年鑑(1992년), PP.298-302 참조.

(1) 폴란드 인민 공화국: 1947년 공산정권 수립. 폴란드 통일노동자당(공산당)은 1990.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폴란드 공화국 사회민주당'으로 전환.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선거, 시장경제체제 공식채택, 43년에 걸친 공산당 1당 통치에 종지부를 찍음(1990.12. 레흐 바웬사 대통령 취임). 약 50만개의 민영기업이 성업. 시장경제 채택. 정당으로는 중도동맹, 민주동맹, 폴란드 사회민주주의당이 존재.

(2)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1948년 공산정권 수립. 1990.11. 「시민 포럼정당」이 주도한 시민혁명에 의해 후사크 공산정권 붕괴, 12.29.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취임. 1991. 1. 가격자유화 실시, 무기생산 감축, 1991.6. 전국가산업의 70%를 민영화 계획. 정당으로는 시민포럼, 공산당, 사회당, 인민당등이 존재.

(3) 헝가리 공화국: 1949년 공산정권 수립. 1989.10. 공산당 일당 지배 포기,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추구. 현재 사회당, 사회 민주당(구공산당), 국민당이 존재. 점진적 개혁정책 추구, 동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다. 1990.1. 종교와 양심의 자유허용. 1991.4. 몰수재산 보상법을 제정하여 원 소유주에게 보상 실시. 기업의 민영화, 시장경제 도입.

(4) 루마니아 공화국: 1947년 공산정권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성립. 1964. 탈소 자유화노선 선언, 1965년 루마니아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국호변경, 1989. 혁명으로 루마니아 공화국으로 국명개명, 구국전선(NSF)이 집권당으로 개혁정책 실패, 경제상황 악화일로. 정당으로는 구국전선, 헝거리인 민주동맹, 국민자유당이 존재. 다당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 언론자유, 민간기업 보장, 정치·경제개혁 추진. 89.12.25. 차우세스쿠 대통령(24년간 독재)처형.

(5)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 1947 공산정권 수립. 1989년부터 개혁정책 수행, 1991.2. 전기·석탄을 제외한 90%의 제품에 대해 가격자유화 실시, 1990.1.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포기(공산당 권력 독점 종식), 1991.2. 공산당을 사회당으로 개칭. 6월, 사회당(구공산당)이 다당제하의 자유총선에서 압승. 정당은 사회당, 민주세력 동맹, 농민동맹등이 존재.

(6)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1945년 공산정권 수립. (6개 공화국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1990.1. 공산당 권력독점 종식. 다당제 정치체제 허용. 1983. 8. 시장경제 도입,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 결정하는 경제개혁 단행, 기업은 자주관리제를 채택, 노동자 평의회가 생산계획과 이익배분등 모든 결정에 참가. 1990. 자유총선 결과 집권한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중도 우파정권이 독립코자 하자 연방정치를 지지하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공화국의 강경좌파 정권이 반대, 충돌이 발생. 1991.6.25.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독립선언, 이에 연방군과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사이에 전투 발생. 정당으로는 공산주의자 동맹, 사회민주당, 녹색당이 존재. 1990.7. 세르비아는 공산당을 해체하고 '세르비아 사회당'으로 전환.

(7)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1944년 공산정권 수립. 61년 소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친중국 정책 표방. 1990.5. 외국여행 자유, 종교활동 허용, 11월 민주적 자유화와 법에 의한 통치, 인권존중등 개혁조치 단행, 비밀투표·복수후보 경선허용. 알바니아 노동당이 유일정당. 1967년의 농업집단지에서 1989년 농작물 자유시장 개설, 1990.5. 일

이상의 변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은 종래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승고한」 이상으로 무장하고 억압과 착취속에 신음하는 러시아 人民을 해방시키고 인류의 이상인 「千年王國」 - 共產主義社會를 건설코자 「마르크스-레닌주의 깃발」을 치켜들고 10월 혁명을 통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Tsar전제주의와 소위 노동민권을 착취하는 자산계급을 타도, 「否定」하고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건설했으나 불과 74년이 지난 오늘날 이번에는 바로 볼셰비키 공산당을 적극 지지했던 그 소련 인민에 의해 레닌의 소련 공산당이 붕괴 와해되었고 연방제가 무너졌으며 사회주의 제도와 사상도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중이다. (「否定的 否定」) 그토록 「승고한」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임했지만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否定」하는 「對立物」이 그 자체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 「對立物」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共產黨 自體와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양적인 변화(「量變」)을 거쳐 계속 커가 마침내 질적인 변화(「質變」)을 일으켰으며 이 「對立物」이 우세한 側面을 이루자 소련 共產黨은 마침내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소련 사회주의 체제도 강타당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어떤 高尚한 理想을 표방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自體淨化와 인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지속시키지 않는 한 그 집단은 반드시 자신에 의해 「否定」되기 마련이란 점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운동은 黨과 體制를 위협하는 「대립물」(인민의 불만, 정치·경제체제상의 불합리등 체제를 약화시키는 각종 反黨·反社會主義 요소들)을 제거하여 당을 새로이 하고 사회주의를 계속발전 시키고자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이 「대립물」이 커감에 따라 고르바초프는 개혁운동에 노력했던 것이고, 이에 힘입어 자체정화와 개혁을 시도했던 동구가 오히려 공산당 몰락과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것이 또 다시 소련에도 심각한 반작용을 끼치는 상호작용의 상승효과속에 共滅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권의 일익을 담당하던 중국은 1989년 「6.4」천안문 사태에 의한 후유증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의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우월성」이 어이없이 무너져버렸으니 소련의 운명에 대해 「중국은 소련인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로 논평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그 당혹감은 가히 상상할 수 있겠다.

소련의 붕괴에 즈음하여 中共中央政治局은 긴급회의를 열고 「五個堅持, 五個反對」의 지시령을 내놓은바 있다.<sup>3)</sup>

첫째는 바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중국의 초보적인 대응이라 할수 있는데 이처럼 소련·동구의 사회주의권의 엄청난 변화에 첫째, 중국은 과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자체의 원인분석은 어떠한고, 중국의 장래를 위해 어떤 논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이 추진중인 개혁·개방의 논리는 무엇이고 그 실천의 성과는 어떠한고 넷째, 개혁·개방에서 봉착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검토해 보고 전망해보자는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부기업 사유화 인정, 1990.7. 외국인 투자 및 합작 기업허용, 1991.1. 노동당(공산당)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선언등으로 경제활성화 조치 단행. 1991.3. 알바니아 노동당은 최초의 다당제 자유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항의시위에 굴복, 노동당 정부가 총사퇴하고, 6.11. 야당인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출범. 정당은 노동당·민주당·환경당 등이 존재.

- 3) 葉魯青, 「獨立支撐共產主義, 中共發動反資持久戰」, 當代月刊, 香港, 1991.9.15. P.12. 「五個堅持, 五個反對」는 (1) 堅持黨的領導, 反對多黨制 (2) 堅持對軍隊的絕對領導, 反對軍隊參與政治 (3) 堅持人民民主專政, 反對議會制 (4) 堅持社會主義道路, 反對社會民主主義 (5) 堅持公有制為基礎的經濟體制, 反對私有化 등이다. 張雅君, 「蘇聯變局對中共的衝擊: 危機效應之分析」, 中國大陸研究(台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民國 80年 11月), 34卷 第 11期, pp.6-20 참조.

## II.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의 中國에 대한 충격과 위기감

중국은 어떤 점에서 충격을 받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1. 中國 共產黨의 合法性에 대한 위기 : 특히 소련변혁이 중국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이유는 中·蘇간의 「특수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사회주의 宗主國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건립, 무장봉기, 정권탈취, 사회주의 수립과 공고화, 이데올로기 방면에 깊숙히 참여했고, 이 중국공산당 一黨專政의 정치체제 건립과 공고화에 합법성을 제공한 바 있다.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와 나후한 러시아의 실제환경과의 결합성공은 중국 공산당의 발전에 많은 계기를 준비 있는데 1949년 6월 毛澤東은 「論人民民主專政」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인이 마르크스주의를 찾아낸것은 러시아인의 소개를 통해서이다. 10월 혁명이전 中國人은 레닌, 스탈린도 알지 못했을뿐만아니라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몰랐다. 10월혁명의 포성이 우리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보내 주었다.”<sup>4)</sup> 1981년 中共 11屆 6中全會에서 통과된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에서도 말하길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中國 工人운동이 결합한 산물이며, 러시아 10월혁명과 아국 五四운동의 영향하에, 레닌이 영도하는 공산국제의 도움하에 탄생된 것이다”<sup>5)</sup>라고 한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공산당의 존재는 소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수있다. 이처럼 소련의 중공에 대한 최대공헌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러시아 혁명 및 국가건설 경험의 제공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921년-1949년 중국의 혼란한 국내정세에 사회역량을 모으고 농민·공인·지식인들의 지지를 광범하게 동원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 구사회질서에 도전하고 무장투쟁을 정당화 시키는 이유를 제공해 주었고, 건국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경험은 중국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합법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비록 중·소분쟁으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을때에도 중국의 당조직, 各級 정권조직, 생산 단위조직, 조직의 운영 등등은 대부분 소련의 영향하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인한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도 문제였지만 1989년 하반기 東歐 각국의 경제개혁과 사회주의의 이탈동의 「和平演變」(사회주의가 평화적으로 자본주의화 되는것)과 1990.2. 고트바초프가 헌법에서의 공산당 일당독재 조문폐지, 1991.7.26. 新黨綱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폐기, 이어 공산당의 해산은 소련 공산당 74년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었고 공산당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된것을 뜻하며 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거대한 충격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중국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 사회통제의 위기 : 1978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改革·開放을 실시하고 동시에 「四項基本原則」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改革·開放정책과 더불어 그 관료주의와 부패가 심화해감으로써 「四項基本原則」에 대한 合法性에 회의를 품는 지식인·학생·공인이 늘어났다. 이에 1989년 「6.4」천안문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은 천안문사태에 대해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자행하고 사회 각개영역에 대한 정치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資產階級自由化」운동에 철저히 반대하고, 「和平演變」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黨의 建設」을 강조하고 당과 군중의 밀접한 연계공작을 강화할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구나 1989년 하반기의 東歐의 民主化 운동에 놀란 중국은 反「和平演變」의 사회통제 공작에 더욱 주의를 돌리면서 東歐共產黨이 政權을 상실한 이유의 하나는 사상공작을 홀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中國人民大學教授 陳先達은 江澤民 총서기의 '중국공산당 성립 70주년

4)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選集, 第 4卷(北京:人民出版社, 1960), PP.1475-1476.

5) 人民日報, 1981.7.1. 第 1版.

6) 岩石, 「黨的意識形態建設是預防和平演變的重要基點-從東歐黨 變的歷史教訓談起」, 蘭州學刊, 1991년 1월, P.1 참조. 「資產階級自由化」란 서방 자산계급이 주장하는 「自由」와 「民主」를 따르자는 중국 학생·지식인의 思潮를 가리킨다. 이에대해 鄧小平은 「資產階級自由化」는 실제로 中國을 資本主義化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四項基本原則」의 견지로 극단적인 民主·自由·個人主義와 無政府主義, 多黨制, 反共產黨, 反社會主義 및 사회적

경축대회상의 담화'(「在慶祝共產黨成立七十周年大會上的講話」)에서 행한 발언, “이데올로기 영역은 和平演變과 反和平演變鬭爭의 중요한 영역이다. 資產階級自由化와 四項基本原則의 대립과 투쟁은 실질적으로 共產黨 領導를 견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社會主義道路를 견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政治鬭爭이다. 그러나 이 정치투쟁은 다량으로 늘 이데올로기 영역의 사상이론 투쟁으로 표현된다. 사상선전의 障地를 사회주의 사상이 점령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상이 필연적으로 점령하게 된다. 각급 黨委員會는 이데올로기 工作을 중시해야 하고, 이데올로기 工作에 대한 영도를 강화해야 하며 이데올로기 각 부분의 영도권을 굳세게 장악해야 한다”<sup>7)</sup>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청년들을 교육해서 멀리 바라볼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발생이후 1848년의 유럽혁명과 곧 이는 「잠잠함」을 거쳤다: 그러나 1871년에 이르러 세계무산계급혁명의 제 1차 위대한 시험 - 파리公社가 출현했다. 파리公社실패후 자본주의는 평화로운 발전 국면이 출현했다: 그러나 40년간의 「잠잠함」이후 다시 1917년의 10月 革命이 폭발했다. 본세기 5.60년대부터 시작해서 세계혁명은 저조해졌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니라고 감히 단언할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가운데 우리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가이다」<sup>8)</sup>라는 말을 하면서 사회주의의 도로와,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교체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장구한 세월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는 것인 만큼 일시적인 좌절과 후퇴에 낙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思想으로 지도할것과 대학교는 「反和平演變」의 전초 진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학생과 지식인인데 이들은 民主改革을 요구하되 共產黨의 영도와 사회주의를 「완전 부정」하고 있는데까지 이른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소련군대가 政變時 Boris Yeltsin이 이끄는 군중에 대해 유혈진압을 하지 않은것과 중국의 유혈진압은 현저한 대비가 되며 이 유혈진압에 대해 깊은 상처와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만약 학생·지식인의 정치적 항쟁이 재발한다면 이번에는 공산당 독재에 대한 부정이 필연적이 될것이고 공산당에 대한 신망이 과거와 같이 공고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만큼 사회통제가 어려워져 갈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영도도 제삼 강조하고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을 강화하며 군의 정치참여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 黨員과 軍隊이외에 地方力量의 대두이다. 10년간 改革·開放으로 권력을 하방하자 「지방주의」가 대두되고, 당 중앙의 사회 각 계층·군대·당원·기술관료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sup>9)</sup>

3. 고위층 정치통합 위기 : 중국 공산당 정치체제는 일원화 구조로서 정치체제 핵심의 공산당 고위층은 고도의 단합을 이루어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전 사회는 통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나, 「6.4」천안문 사태의 유혈진압등을 통해 불태 黨內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0년간의 改革·開放에 대해 黨內에 계속 「적극적」인 개혁파와 「보수적」인 개혁파 사이에 정책투쟁과 권력투쟁이 있어왔다.

물론 정책수립과 실천에는 토론과 의견대립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경제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鄧小平 영도하의 중공 영도계층에는 서로 다른 정책상의 선택을 하고있다.

즉 「改革派」(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담대한 개혁파, 그러나 체제 수호파)는 경제개혁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와 이데올로기 투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이며, 정치권력의 직

기풍을 부패케하는 「資產階級自由化」思潮에 굳세게 대항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민주를 수호할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10.20년 계속할것도 주장하고 있다. 李谷城, 中國大陸政治術語(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92), PP.457-461 참조.

7) 人民日報, 1991.7.2. 第2版.

8) 人民日報, 1991.9.23. 第5版, 陳先達, 「堅持用馬列主義毛澤東思想占領高校陣地」.

9) 人民日報, 1991.9.1. 第5版, 陳野平, 「德才兼備,以德爲先-論選拔幹部的標準」.

능분리등을 잘 조정해서 경제효율의 목표를 완성 할것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保守派」(신중·소극적·점진적인 개혁파 또는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인물)는 中國政權의 사회주의性質 및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수성을 비교적 중시하며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순수성을 위해 「資本主義」성질의 경제개혁 조치에 억장을 부리거나 두려움을 품고있다. 鄧小平은 「改革派」이면서도 이 兩派의 투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설에서 「改革派」와 「保守派」 兩派의 관점을 두루 고려하면서 자신의 영도권을 공고히 하고 改革을 관철하는 고도의 「統治藝術」을 보여주고는 있다. 따라서 鄧小平은 어디까지나 改革·開放의 「總設計師」로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改革의 심화와 開放의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다른한편, 정치적인 면에서는 「四項基本原則」堅持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있다. 이에반해 「陳雲司令部」로 일컬어지고 있는 中央顧問委員會主任 陳雲, 王震(國家副主席), 宋任窮과 政府系統의 李鵬總理(政治局常務委員), 姚依林(副總理, 政治局常務委員), 黨務系統의 胡喬木(중앙고문위원, 1992. 9. 사망), 鄧力群(중앙고문위원, 이데올로기 담당), 宋平(政治局委員, 黨조직 총담당), 呂楓(中央紀律檢查委員, 中央組織部 담당), 王忍之(中央宣傳部長, 中央委員), 高狄(人民日報社長, 中央委員), 賀敬之(文化部長, 中央委員), 陳元(陳雲의 子, 「太子黨」員)등을 위시한 「保守派」(“左”)<sup>10)</sup>는 소련 및 동구의 質變을 보고 끊임없이 「反自由化」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개혁·개방정책에서도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治理整頓」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改革·開放의 돌이킬 수 없는 대조류하에 적극적인 「改革派」 鄧小平은 진보적 인물들을 중용했는데 鄧家華(副總理, 국가계획위원회主任, 中央委員), 朱鎔基(副總理, 中央候補委員), 田紀雲(副總理, 中央政治局委員), 丁關根(政治局候補委員)등이 그 예이고, 또 1991년 6월에는 일찌기 「6.4」천안문 사태때 축출되었던 趙紫陽계인 胡啓立, 閻明復, 芮杏文등이 다시 중용되었다. 江澤民이 최고 영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형식상 표면적인 통합을 이루고는 있으나 그 내부에는 여전히 「보수파」와 「개혁파」(진보세력)간의 투쟁이 음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中共黨 13屆 8中全會(1991. 11. 25-29.)는 3년간의 「치리정돈을 끝내고 개혁·개방을 전면 전개할것을 선포한다」(「宣佈結束治理整頓, 全面展開改革開放」)고 함으로써 경제과업을 잘 다스리고 방만한 경제건설을 정돈했다고 판단<sup>11)</sup>하고 다시 改革·開放에 힘쓰고 있는데, 1992. 1. 18-2. 21. 鄧小平의 「南巡講話」는 그간의 改革·開放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改革·開放에 진력해야 할것을 강조함으로써 「改革派」는 적극적 개혁·개방에로의 全中國의 思想統一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鄧의 「南巡講話」를 전후해서 鄧·陳派간의 노선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陳雲은 鄧小平에 대해 “지금 黨內·社會의 주요경향은 右이다. 黨內에 非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압도적이어서 사회에 자본주의의 부패한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있고 黨政기관·공장·기업·시정·학교에 침투해 있다”고 비판하고, “기업은 계획적으로 해야하며, 경제발전과 시장조절작용의 발휘도 오직 계획의 허가범위내에 즉 국가의 거시적 조절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국의 各省·自治區는 모두 경제특구·개발구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국부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허다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中央에서도 통제하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면서 鄧小平의 개혁심화와 개방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經濟特區」등지에 가 볼것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개혁·개방의 「主流」는 보지 못하고 「支流」만 보고 있다고 등소평은 반박하고 있다. 1992. 6. 21. 사망한 李先念前國家主席도 陳雲과 마찬가지로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四項基本原則」을 강조하는 인물로서 鄧小平의 노선이 자본주의의 大海로 빠져들어 가지 않을까 깊이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는데 6월초에는 그를 포함한 65명이 서명해서 鄧小平과 중공중앙 정치국에 편지를 내어 「四項基本原則의 견지를 당의 첫째가는 大事로 꼭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사망은 鄧의 노선을 가로막던

10) 「爭鳴」, 香港, 1992年 5月號, P. 41; 姜華宜主編, 中國共產黨會議概要(沈陽: 沈陽出版社, 1991), PP. 763-770 참조.

11) 人民日報, 1991. 11. 22. 第 1, 2, 4版. 國家統計局, 「成效·問題·啓示」- 對三年來治理整頓的回顧與思考.

주요 장애물이 하나 없어진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으며 보수파에 있어 큰 손실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에앞서 鄧派인 陸定一, 楊得志, 谷 牧 등 元老 3人是 5월하순 증공증양 정치국과 중앙고문위원회에 편지를 내었는데 이 중심내용은 黨內的 “左”의 사조와 의식은 중국사회의 진보를 질식 시키고 있으니 사상노선과 조직건설 면에서 “左”를 비판하고 반대하여 “左”의 危害를 전면적으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개방에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보수세력의 “左”의 사상에 대한 鄧小平을 위시한 「防左」口號는 黨內에 의견대립이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左”의 사상에 대해 물론 江澤民 黨總書記도 “左”의 영향을 축소시키고자 자주 고위 간부급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목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기를 움켜잡고 개혁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하는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鄧小平同志의 중요한 講話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전면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21개 省黨委에서 鄧小平路線을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되는 改革·開放정책에 있어 고위층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며 상당한 정도의 「一致」에 도달해야 할텐데 사상노선상의 不一致로 인한 내부분열은 정치·경제적 부담과 위기를 조성할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6.4」천안문 사태이후 鄧小平은 어떤 黨政職務도 담임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家長式」權威統治를 막후에서 수행함으로써 어느정도 黨內 갈등을 조화시킬수 있으나 일단 鄧小平이 사망한다면 權威의 眞空下에 어떤 권력투쟁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할수 있다.

4. 少數民族統合의 위기 : 55개 소수민족(인구 전체의 6.3%, 전 영토의 60% 점유)과 漢民族 사이에는 平和友好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련연방의 민족분류와 독립의 영향으로 인해 티벳(西藏)의 독립운동이 달라이라마의 고취로 폭력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中國西北 변경지대의 回教民族主義의 대두는 新疆 소수민족의 독립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신강자치구는 47개의 소수민족이 혼재하여 있고 그 중 대부분이 回教와 터키민족이며 과거 일시 「東터키스탄 共和國」이 출현한적도 있는데 진압된바 있었고 1990.4. 에도 2,000여 회교도가 「東터키스탄 共和國」회복을 위한 聖戰을 하다가 또 진압되었다. 서장과 신강 외에도 근년에 外蒙古 역시 소련의 통제가 약화되고 東歐民主운동의 영향하에 민주화 운동을 벌리면서 증공이 통치하고 있는 「內蒙古自治區」에도 지하조직이 출현, 外蒙古와 合作해서 「大蒙古」 만들어 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東南沿海各省의 경계가 改革·開放으로 날로 번영하는 반면 소수민족 자치구를 포함하는 西北內地區域은 경제발전 조건이 열악하여 漢族과 소수민족 사이의 빈부차이가 확대되고 있다.<sup>13)</sup> 이와같은 점들은 일부 소수민족의 중국통치에 대한 이탈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 國際孤立的 위기 : 증공은 정권성립 40년간 줄곧 안전에 대한 위기가 있어왔기 때문에 安全은 시종 中共外交政策의 核心目標였다. 따라서 80년대 末에는 경제발전의 현실적인 고려에서 평화적인 국제환경이 필요 했으므로 소련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소련 동구의 변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쇠퇴는 서방세계로 하여금 전에 없던 안전환경을 조성해주었고 국제 자본주의 역량은 대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감이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게 된 것이다. 한때 소련의 패권주의는 중국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 되긴 했어도 이는 또한 미국에도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증공은 美蘇간의 矛盾을 이용하여 미국과 서방으로 하여금 「중국카드」에 열중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서 소

12) 羅 冰, 「鄧小平承認黨內分歧嚴重」, 「中共三老臣批毛反“左”」, 「李先念臨終吐“左”詞」, 爭鳴, 1992년 7월호(NO.177), PP.6-9, 15-17; 6월 14-15일, 北京市委宣傳部등이 北京市民的 黨 14大에 대한 희망을 조사해 보았는데 65%가 개혁·개방의 계속을 희망하고, “左”에 반대할것을 피력했으며, 32%는 정치에 관심없다, 나와는 관계 없다고 답변, 3%는 무답변. P.71 참조.

13) 「動向」, 香港, 1991.9월호, PP.23-24 ; 劉學銜, 內外蒙古傳聞合併可能性之分析(台北: 蒙藏委員會, 民國 79년 11월), P.118; 青年日報, 1991.8.30. 第 4版.

련의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도 감소 시킬수 있었고 국제적인 고립도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美蘇對峙의 모순을 이용하여 거대한 안전과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미소간의 긴장완화와 소련 및 동구의 「和平演變」으로 「中國 카드」는 서방세계에 별로 매력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6.4」천안문 사태에 대한 유혈진압은 서방국가의 전면적인 경제적 제재에 봉착하게 되어 중국의 경제건설에 대단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1990.8.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시 중국은 이라크의 철군을 요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제재결의에 서방국가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서 서방국가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를 좌우할 유일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이것이 중국에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平和共存五原則」위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건립할것을 부단히 주장하고, 1991.3. 李鵬은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第七屆全國委員會 第 4次會議報告에서 “國際新秩序의 核心은 모든 국가가 大小, 強弱, 貧富를 불문하고 독립 자주적이고 국제사회의 평등한 성원이어야 한다.” “국제 신질서의 기본 내용은 마땅히 각국이 본국의 국정에 근거해서 독립 자주적으로 본국의 사회·정치·경제제도와 발전의 도로를 가질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 어떤 국가든 특히 대국이라해서 다른나라의 內政에 간섭해서는 안되고 자기의 가치관념이나 이데올로기 및 발전모델을 다른나라에 강요해서는 안된다”<sup>14)</sup>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소련과 동구가 「質變」을 한후 중국은 소련을 대신해서 소수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역량이 별것이 아니라서 중국은 고독하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후 보루가 되었고 동시에 서방의 공전의 강대한 「和平演變」의 공세 속에서 중국의 대외관계는 곤란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다섯가지 중심으로 볼때 소련·동구의 역사적인 변혁과 서방 영향력의 강화는 中國에 긴박한 「和平演變」의 위기감과 이에서 벗어나려는 고뇌와 진로의 탐색에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보인다.

### III.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원인과 관련된 中國의 思索

1989-1991년 사이에 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에 대한 중국 대륙의 학술계는 이를 둘러싸고 대단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 1. 社會主義 大失敗 原因

1) 1991.7.11. -12. 中共中央黨校科學社會主義教研部는 「黨代社會主義的新形勢·新課題 : 理論對社會」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저명한 학자 邢賈思등은 현 세계정세를 「화약 연기없는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 「打一場沒有硝煙的世界大戰」고 지적한 바 있고, 江一鵬도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다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사회주의가 소수 낙후한 국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허다한 근본적인 문제와 곤란이 많이 따른다. 즉,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제국주의의 봉쇄와 포위속에 장기간 처함으로서 「和平演變」의 形勢에 직면해 있으며 이 「과도기」에는 투쟁·굴복·퇴보등이 출현할 수 있다.

(2) 제 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는 제 3차 科技革命時代에 진입하여 자본주의 생산력이 대단히 발전한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제 3차 科技革命의 時期를 잘 움켜쥐지 못해 전체 경제가 대내적으로 낙후하게 되었다.

14) 人民日報, 1991.3.27. 第 2版.

15) 宋國誠, 「中國大陸對「蘇東解體」的反思」, 中國大陸研究, 民國 81年 7月, 第 35卷 第 7期, PP. 29-47 참조.



(3) 사회주의 건설과 개혁중에 출현한 곤란과 착오로 말미암아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케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2) 商崇釗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은 상품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계급투쟁을 확대했으며, 혁명을 수출했다. 또 公有化를 지나치게 추진함으로써 公有制爲主의 多種의 경제발전에서 벗어났으며, 平均主義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벗어났고, 간부제도의 종신제를 실시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침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점은 전체 과학적 사회주의의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볼수있는 점인데 그 深層原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新興階級の 미성숙성 때문이다. 전체 인류역사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생산 방식을 대표하는 매 신봉계급은 정권장악시의 초기에는 언제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산계급이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무산계급도 혁명과 건설중 잘못을 범하는것을 역사적인 현상으로 대하여야 한다.

(2) 과학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시간이 맞지를 않고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9C말과 20C초에 형성 되었는데 시간상 오늘날과는 이미 반세기 이상 지나갔고, 공간적으로도 그 이론이 서구에서 생겼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은 동방(소련, 중국)에서 있었다.

(3) 「개인숭배」가 한때 엄중했다. 사회주의 승리후 상당히 긴 기간 黨內民主와 사회생활의 民主化 건설을 중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黨內的 권력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개인독단과 개인숭배 현상이 발생했다.

(4) 공상적 사회주의와 速勝論의 영향이 존재했다. 공산주의의 速勝論이 생산력 발전 규율을 이탈해서 더 높은 단계의 생산관계를 추구했다.」

3) 余鍾波는 다음과 같이 보고있다. 국제 사회주의 운동을 개괄하면 두차례에 걸친 低潮가 있었다. 첫째는 1871년 파리 公社 실패후부터 1905년 러시아 혁명 폭발시까지의 30여년간 자본주의는 「平和發展」시기에 처했고 혁명형세가 없는 「잠잠한」(沈寂)시기였다. 둘째는 본세기 70년대후 제 2차 「잠잠한」시기에 진입했다. 국제역량면에서 자본주의에 유리하고 사회주의에 불리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에 우여곡절과 곤란이 출현했다. 이 제 1.2차시기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경제가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산계급이 사회주의 운동을 「機會主義」적 개량의 길로 유도하는 책략을 채용하고, 社會民主主義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禍害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 四川省萬縣市委副書記 程隆茂는 東歐격변의 교훈은 西方 적대세력의 「和平演變」戰略이 사회주의 국가 변화의 「外因」이고, 社會主義國家內部에 존재하는 反共, 反社會主義 敵對分子와 세력의 존재, 「資產階級自由化」思潮의 범람, 黨內 機會主義思想의 타협, 투항주의 노선 출현, 공산당의 정치·사상·경제등 영역에서의 정책상의 착오, 군중과의 이탈과 부패현상의 출현, 인민 內部矛盾에 대한 처리 부적당등이 사회주의 변화의 內因이며 이것들이 국내의 적대세력에게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세기 사회주의 국가가 보편적인 착오를 범한점은 경제건설에 있어 高指標를 설정하고 급하게 성공하려고 했으며, 장기적으로 商品經濟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개인숭배, 권력의 과도한 집중, 民主法制 건설의 경시, 黨內矛盾과 階級矛盾에 대한 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했고 계급투쟁을 확대 시켰다. 이러한 실책들이 「和平演變」에 길을 열어 준 것이다.」

5) 郎毅懷는 말하길 마르크스주의 創始人이 우선 기대한 서구의 생산력 발전정도가 비

16) 江一濤, 「當代社會主義的新形勢, 新課題理論研討會簡述」, 四川社聯通論, 1991年, 第 4期, PP.16-17.

17) 商崇釗, 「正確認識科學社會主義實踐中的失誤」, 黔南學校學報, 1991年, 第 3期, PP.13-15.

18) 余鍾波, 「論國際社會主義低潮」, 江海學刊, 1991年, 第 4期, PP.60-63.

19) 程隆茂, 「從東歐的劇變看社會主義發展的曲折性和艱巨性」, 探索, 1991年, 第 1期, PP.19-21.

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지금까지도 사회주의에 진입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력이 낙후한 東方國家(소련, 중국)에서 먼저 사회주의에 진입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 발전과정은 소수 자본주의 발달국가의 세계통치 질서를 깨뜨리게 되었고 이로써 제국주의 세력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도처에서 봉쇄와 곤란을 겪게되었으며 격렬하고도 불명등한 경쟁상태에 빠져 사회주의가 「굴곡」을 겪게된 것이다.<sup>20)</sup>

6) 국무원 대변인 袁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16C를 자본주의 시발점으로 삼았는데 자본주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400 여년의 역사를 갖고있지만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 태어난지 70여년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도 역시 그 발전초기에 자체의 우월성을 충분히 과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단한 개혁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그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게 하는것은 몇세대 사람들의 임무이다.

(2)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환이 일어난 교훈을 섭취해서 우리의 사회주의 진지를 더욱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전환의 원인은 첫째, 제국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和平演變」 전략실시 때문이다. 둘째, 국제 사회민주주의 사조가 엄중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공산당 내부에 문제가 생긴데 기인한다. 外因은 內因을 통해 작용하며 內因은 결정적이며 주요한 요소이다. 전환이 발생한 사회주의 국가의 內因도 다소다르다. 어떤 黨은 마르크스주의의 원리를 포기하거나, 사회민주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고, 개인숭배, 족벌통치, 부패, 타락등으로 균중과 심각하게 이탈했거나, 또 장기적으로 개혁 안했거나, 개혁시 사회주의 방향을 이탈하는등 그 內因이 각 黨마다 다양하다. 그러므로 서방 제국주의의 「和平演變」을 막아내자면 사회주의 국가내부의 공고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은 결국 자기자신이 理論과 實踐面에서 科學的社會主義의 原理를 위반한 결과이지 결코 사회주의 자체의 실패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주의 진지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反「和平演變」의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四項基本原則」을 견지하고 「資產階級自由化」에 반대하는 방침을 동요없이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거나와 改革·開放의 사회주의 방향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改革·開放은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의 改革·開放인 것이다. 改革·開放은 사회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를 더욱 잘 건설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사회주의 방향이 동요되면 이 改革·開放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셋째,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사상·조직·이론면에서 당을 잘 건설하고 당의 영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데 유익한 모든 비판, 건의, 감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결함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1)</sup>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굴곡 또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 中國大陸學者들은 일반적으로 內外兩方面에서 설명하고 있다. 어떤이는 「內因」을 더 강조하고 어떤이는 「外因」을 더 강조한다. 그러나 內因을 논할때 어떤이는 사회주의의 굴절은 개혁은 하되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어떤이는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어났다고도 보고있다. 그러나 한가지 또 중요한것은 大陸學術界는 社會主義失敗의 원인을 分析할때 극력 사회주의 제도 자체와는 무관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의 잘못은 왕왕 사회주의 건설중의 구체적인 방

20) 郎毅懷, 「從全球角度看社會主義歷史命運」, 求是, 1991年, 第 3期, P. 215. 「굴곡」이란 말은 중국학자들이 사용하는 「曲折」을 옮긴것인데 이들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실패한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소생하여 자본주의를 대체하리라는 굳은 신념하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굴곡」(좌절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21) 袁木,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의해 교체되는 것은 의연히 세계 역사발전의 대추세이다」, 현시대사조잡시자편, 사회주의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강좌, 연변인민출판사, 1991. PP. 1-64.

법이 좋지 못했거나, 체제상의 구체적인 일부 형식이나 제도상의 결점 또는 미비점 때문에 조성된 것이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제도의 소치는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봉착한 「굴곡」을 사회주의의 근본제도 자체와 연계짓는다면 이는 「資產階級自由化」觀點이라는 것이다.

## 2.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蘇聯·東歐 사회주의 국가는 「資本主義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西方資本主義國家는 어찌하여 「사회주의로의 변화」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中國 大陸學術界가 탐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1) 韋傳家는 그 주요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기초와 상부구조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고 강대하다. 따라서 독점자본계급은 첨예한 사회모순의 해결(군중혁명투쟁의 억제와 진압을 포함)을 위해 비교적 많은 여유와 수단을 가지고 있다.

(2)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독점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아직도 자본주의의 신속한 발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3) 발달 자본주의 국가는 국제무대에서 약소국가를 능멸하는 패권주의를 자행함으로써 국내의 곤란과 위기를 외부에 돌려 본국 국민의 정치적 시선을 돌려놓는 능력이 있다.

(4) 독점자본계급은 통치의 역사가 비교적 길므로 상당히 풍부한 통치경험을 가지고 있다.

(5) 독점자본계급은 工人층의 상층부를 매수해서 그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工人貴族」을 배양하는데 특별히 주의해 왔다.

(6) 독점자본 계급은 강력한 국가기구에 방대한 선전기구와 여론매체를 이용해서 국내 인민에 대해 자본계급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강행하여 어느 정도의 공인과 노동군중을 개조시켜 자본주의 통치에 굴복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7)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 비록 공인계급 정당이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전실한 군중기초와 혁명환경의 영향, 투쟁경험등이 결핍되어 있고, 게다가 장기적으로 第 2國際이 定期的인 영향으로 정치·사상·조직상 모두 성숙해 있지 못하다.

(8) 자본주의의 대립물로서의 사회주의 제도가 경제문화가 낙후한 국가에서 먼저 건립된되다가 탄생된 시간도 길지 않고 또 실천중 부단히 탐색 하는것이 필요하며 또 자본주의 세계의 포위중에 있어 여러가지 곤란과 좌절을 면하기가 어려웠고 그 우월성도 곧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의 공인계급과 노동군중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에 물려들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2) 邢責思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그 자체 자아조절능력을 증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즉, 국가정책을 통해 사회의 총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있으며,

(2) 일정한 계획을 통해 거시적 조절을 한다. 제 2차 세계대전후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스웨덴, 네덜란드등이 모두 국가계획 기구를 설립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독점 자본계급간의 이익관계를 조절했고,

(3) 국민수입 조절을 통해 노동자의 소비기금을 높이고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어느정도 국내 계급모순을 완화하는 작용을 했다.

(4) 국제회의를 통해 서방국가간의 경제이익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3) 曹蔭全 : (1)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을수 없었고 또

22) 韋傳家, 「對發達資本主義國家未發生『社會主義演變』應當怎樣看?」, 經濟日報, 1990. 8. 31.

23) 周錦尉, 「我們的時代與面臨挑戰的社會主義-著名學者, 邢責思訪談錄」, 文匯報, 1990. 8. 25.

당시 자본주의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향하는 동요와 불안으로 조성된 假象 때문에 당시 자본주의 위기를 「과도」하게 평가했다. 이러한 점이 또한 후에 공산주의 운동의 영도자들이 “左”의 지도사상을 갖게되는 하나의 근원이 되었다.

(2) 자본주의는 1세기 이상의 동요후 경험교훈을 얻고 국부적으로 경제관계와 정치관계를 조정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완화할 수 있었다.

(3) 20C 이후 자본주의는 19C 하반기 이래의 자연과학의 새로운 성과를 충분히 소화해서 사회 생산력이 다시 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점이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활력을 갖게 했다.

(4) 발달 자본주의 국가와 낙후 국가의 경제·기술상의 거대한 차이가 발달 자본주의 국가로 하여금 낙후국가의 원재료와 노동력을 영가로 이용케 했고, 또한 불평등 무역으로 낙후국가를 간접적으로 착취, 발달국가로 하여금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액의 자금을 획득케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자본주의는 1C 이상의 동요를 경과한후 다시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전시기에 진입하게 된것이다.

(5) 무산계급 혁명이 발달 자본주의 국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본세기 말에 또다시 상대적인 안정시기로 진입한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아직도 자본주의가 용납할 수 있는 생산력이 완전히 발휘된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24)</sup>

4) 高飛東 : 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당시 예상이 실현되지 않았는가?

독점자본주의 단계 진입이후 발달 자본주의 국가의 내부에는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세계경제 연계의 통합이 이미 이루어져 발달 자본주의 국가는 그 생산력 발전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제 역량의 우세에 의존해서 대규모의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동시에 각종 국제적인 경제독점 조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세계 각 지역에 확산시켜 세계 각국의 경제를 모두 자본주의 경제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관계의 統一體중에 흡수시켜 버렸고, 발달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계급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조절을 할뿐만 아니라 저급국가와 지역에 그들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모순을 이전시킴으로서 발달 자본주의 국가의 국내 계급모순으로 인한 사회주의 혁명의 폭발을 잠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sup>25)</sup>

이상 중국대륙학술계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발생하는것은 결코 사회주의 근본제도가 그 우월성을 잃었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듯이,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것도 결코 자본주의 제도의 우월성 때문인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는데 고심하는 한편, 또 이러한 원인은 단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사회주의는 아직 생명력이 있는가

중국대륙 학술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성찰은 당연히 사회주의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는 일이다.

1) 人民日報社長 高狄 : 사회의 財富은 인류가 창조한 것이고 전인류를 위해 공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착취제도하에서 사회재부는 오직 소수인이 움켜쥐고 향유하는데 이는 극히 不合理한 일이다. 共同富裕를 실현해서 모든사람이 좋은 생활을 하는것은 인류의 위대한 이상이다. 이 思想은 오직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현실화하게 될것이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생명력의 근거이다. 현재 사회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곤란과 좌절울

24) 曹蔭全, 「歷史向世界歷史的轉變與生產的全面社會化-關於社會主義歷史必然性問題」, 哲學研究, 1991年 第 12期, PP.31-32.

25) 高飛東, 「從資本主義向社會主義轉變的歷史跑道的若干思考」, 理論學術月刊, 1991年, 第 3期, PP.24-25.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발전의 총추세를 바꾸어 놓을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현재 발전이 결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모순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주의가 겪고있는 잠시의 곤란은 결코 사회주의 근본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진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문제는 해결 될것이다. 아무리 곤란이 크고 굴곡이 심하다해도 본질적으로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는 출현하게 될 것이다.<sup>26)</sup>

2) 中國人民大學 哲學家 陳先達 : 자본주의의 必亡과 사회주의의 必勝(兩個必然性)은 唯物史觀을 基礎로 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이다. 그런데 社會民主主義(民主社會主義)는 역사발전의 객관 규율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추상적인 도덕원칙위에 세웠으며 사회주의를 단지 일종의 價值目標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唯心史觀으로서 唯物史論을 대체한 것이고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학설을 부정한 것이다. 자산계급 이론가들은 마르크스를 「하나님」(神)에 비유하고 「兩個必然性」을 종교상의 「최후의 심판」으로 풍자하고 있지만 법칙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역사는 순수한 필연성에 의해 만들어진 암담한 그림이 아니라 굴곡이 많고 변화무쌍한 것이다. 현 국제형세중 출현하는 잠시의 국부적인 역전은 단지 「兩個必然性」의 실현을 굴곡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는 있으나 역사의 나아가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수는 없는 것이다.<sup>27)</sup>

3) 北京大學校長 經濟學者 吳樹青 : 오늘날 비록 표면적으로 볼때 몇몇 국가에서 자본주의 세계의 「和平演變」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주의 과학이론 및 그 실천이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0C초에 자산계급 사상은 일찌기 득의양양 했었고 오늘날도 득의양양하여 공산주의가 사망했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역사는 재차 그들의 예언이 틀린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론 자체가 과학적이어서 마지막엔 반드시 사회에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마르크스가 건립한 이론기초는 唯物史觀과 剩餘價值 이론으로 지금까지 이 이론을 대체하거나 반박할만한 이론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자본주의 국가가 계속해서 자기의 私所有制가 좋다는 점을 선전하고 있을때 실제로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사회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마르크스주의가 제기했던 문제, 즉 생산의 사회화에 따라 생산력은 더이상 私人이 통제할 수 없고 社會가 통제하길 요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것이 된다. 사회가 진정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은 마땅히 社會자신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생산력을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는 公有로 인도되지 私有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sup>28)</sup>

4) 馬中柱 :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 「和平演變」이 발생했다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필연추세를 바꿀수는 없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內在矛盾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화 대생산과 私人占有의 모순은 자본주의를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에 의해 대체하게 한다.<sup>29)</sup>

이상의 논조에 의하면 사회주의 생명력은 강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인 추세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것인가.

어떻게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좋다는것을 믿게 할것인가는 대륙의 학

26) 高 狄, 「談社會主義制度的優越性」, 求是, 1991년, 제 8기, P.14.

27) 陳先達, 「論兩個必然性-兼評民主社會主義的哲學基礎」, 中國人民大學學報, 1991年, 第 3 期, PP.8-9.

28) 吳樹青, 「社會主義是烏托邦嗎?」, 中國青年報, 1990.11.8.

29) 馬中柱, 「理論的困惑與形而上學-兼論社會主義理論現實的辯證關係」, 現代哲學, 1991年, 第 2期, PP.8-9.

슬개뿐만 아니라 黨權派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1) 林志, 沙守玲 : (1)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며 생산력 발전을 위해 광활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2) 또 사회제도를 평가할때 그 사회의 경제기초와 상부구조의 제요소에 대해 전면적인 고찰을 해야지 단지 단순히 현 생산력 발전수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종합적인 국력을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말하는것은 역사발전의 긴 과정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 제도가 건립되자마자 그 우월성이 즉각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sup>30</sup>

2) 張 彬 :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수립하자면 관건은 사회주의 제도와 그우월성의 발휘 간에는 일정한 「時間差」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의 건립과 사회주의 우월성의 실현은 결코 보조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월성의 잠재형태와 外在의 현실 형태 사이에는 장기적인 「時間差」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우월성의 충분한 실현과 정의 장기성과 간고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時間差」에 대한 관념의 확립은 사회주의 우월성 문제에 있어서의 速勝論과 悲觀論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sup>31</sup>

3) 軍事理論家 徐銀山 : 과거 장기간 존재해온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8가지 이론 착오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理想을 目前的 現實로 이해 했다는 점이다.

(2)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말할때 왕왕 단지 미국·서구·일본 등 경제가 발달한 국가만을 말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는 마치 모두 경제가 발달한 국가로만 간주해왔다.

(3) 일반적인 표준에 있어, 기본적인 제도의 우월성을 구체적인 제도의 무오류성(결백성)과 혼동하고 있다.

(4) 단순히 현재의 생산력 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열을 가늠하는 표준으로 삼고 있다.

(5) 사회주의를 평가할때 단지 생산력, 물질생활 수준만을 보고 정신적인 측면을 보지 않으며 한면만 보고 그외 나머지는 보지 않는다.

(6) 발전수단에 있어 구사회의 불합리한 수단과 수백년간 축적해온 資本巨富를 혼동하여 資本巨富를 일률적으로 나쁜것으로만 본다.

(7) 발전수단에 있어 사회주의 건설의 自力更生爲主를 마치 자본주의의 착취·약탈과 혼동하고 있다.

(8) 발전과정에 있어 장기간이 필요한 사회주의 우월성의 동태적인 발휘과정을 즉시 완성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이상의 것들이 바로 인식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誤差」라고 보고있는 것이다.<sup>32</sup>

##### 5. 中國社會主義 旗幟는 과연 넘어질 것인가

사회주의 기치가 東歐各國 特히 소련에서 넘어진후, 사회주의 기치가 중국에서는 얼마나 더 존재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大陸學術界가 省察하고 있는 또 하나의 中心問題이다. 당면

30) 林志, 沙守玲, 「從世界觀的高度解決社會主義信念的問題」, 社會科學輯刊, 1991年, 第 4 期, PP. 58-60.

31) 張 彬, 「試論社會主義制度與其優越性之間的時間差」, 社會主義研究, 1991年, 第 4期, PP. 4-8.

32) 徐銀山, 「認識社會主義優越性的八點理論誤差」, 成都市委黨校學報, 1990年, 第 6期, PP. 41-49.

히 이들은 이 문제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기치가 中國에서 넘어가지 않을것임은 물론, 동시에 중국은 반드시 사회주의 도로를 따라 계속 발전해 갈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과거 한때 大陸에 다음과 같은 관점이 유행 했었다. 즉 중국은 半식민지 半봉건사회에서 직접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하고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사회발전 규율을 위반한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길을 걷고 있는것은 「歷史的인 錯誤」이며 「主觀意志의 產物」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大陸은 분명히 자본주의로 變化하게 될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사회주의 기치가 중국에서 넘어지지 않을것이란 것을 논증하자면 필연적으로 우선 이 관점을 논박해야만 할것이다.

1) 張全方 : 사회형태 발전의 普遍性과 特殊性의 相互關係로 부터 중국의 社會主義 道路로의 진행은 결코 사회발전의 객관규율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주의의 사회형태 이론은 생산력의 부단 발전에 의해 인류사회는 저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발전하는 과정, 즉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로의 발전, 다시 봉건사회로의 발전, 또 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을 거쳐 최후로 공산주의 사회에 진입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사회형태 이론은 唯物辯證法과 唯物史觀의 기초위에 뿌리를 두고있다. 그 이론은 唯物的이요 辯證法的이다. 그 이론은 사회형태 발전의 普遍性을 밝혀줄 뿐 아니라 사회형태 발전의 特殊性도 밝혀주고 있다. 세계역사는 사회형태 발전의 보편성이 수많은 다양 각색의 특수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즉 원시사회 해체이후 중화민족, 희랍, 로마등 민족은 노예사회에 진입했으나 다른 몇몇 민족 즉 도이취, 불란서의 氏族社會와 東歐의 불가리아는 원시사회에서 집적 봉건 농노사회로 진입했다. 그들은 결코 노예 사회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계급대항의 사회에 진입한 후 세계 각 민족과 국가의 역사과정도 서로 같지 않다. 예를들어 美國은 봉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주의 사회를 건립했다. 이처럼 중국이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립한 것은 결코 사회발전의 객관적 규율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도약식 발전이라는 特殊性의 體現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2) 中國社會科學院 何新은 사회주의 도로의 중국역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20C 전반기 중국이 직면한 역사형세를 깊이 관찰하면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필연적인 역사선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련과 중국등 경제난국에 대해서 바로 수많은 사회문제와 국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공업혁명을 진행시키며, 현대화를 추동하는 효과적인 지도적 이론이기 때문이다. 何新은 구체적인 예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분할과 망국위기의 중국인민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도하에 비로소 효과적으로 1840년후부터 100년간에 달하는 사회동란중 중국을 건졌고, 독립적인 경제를 건립하고 본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임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

(2)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자본과 자원의 국유화와 계획화 실현을 주장했는데 이 이론은 난후한 국가가 공업화 자본을 빨리 집중시키고 축적하는데 유리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제실력이 강대하고 기술이 앞선 국제독점자본에 대항하는데 유리했다.

(3) 마르크스주의는 공인과 빈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론으로서 사회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兩極分化를 막으며 빈궁한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했다.

(4) 공산당의 조직, 민주집중제의 政體形式, 집체운리를 중시하는 사회원칙은 극히 효과적으로 전통사회 형태하에서 분산상태에 처해있던 사회역량을 집결시켰고, 그리하여 비교적 신속하고 대규모적으로 경제·정치·문화의 현대화 운동을 추동할수가 있었던 것이다.<sup>34)</sup>

3) 江西省 社會科學院 社會主義研究所 : 1991년 9월 「社會主義面臨的挑戰與代策」세미나에

33) 張全方, 「關於社會主義若干問題的哲學思考」, 黨校論談, 1991年, 第 5期, P. 4.

34) 何新, 「社會主義的選擇與歷史評價」, 中國青年報, 1990年 6月 28日.

서 대륙은 다음과 같은 우수한 점을 구비하고 있어 사회주의 기치가 넘어가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우수한 문화전통이 있고, 대단히 강한 응집력이 있어서 서방 적대세력이 가볍게 변화 시킬수가 없다.

(2)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도가 있다.

(3) 黨에 충성하는 강대한 人民解放軍이 존재한다.

(4)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 사상이 인민에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인민은 사회주의 조국을 熱愛한다.

(5) 사회민주주의 사조는 그리 많은 신봉자가 없다.

(6)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도로를 따라 전진할 수 있다.

(7) 改革·開放이 사회주의 방향을 堅持하고 있다. ㉞

4) 李 : 중국공산당은 이미 중국에서 견지할 「四項基本原則」, 「改革·開放」정책을 확립했고, 이를통한 「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건설할 基本路線을 형성했다. ㉞

이상 이론을 보건데 중국 사회주의 기치는 계속 펴러일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어떻게 中國社會主義를 敎할 것인가

이문제 또한 대단히 첨예한 문제이다. 개혁·개방에는 조심스럽고 사회주의 근본원칙만을 주로 강조하는 “左”傾의인 논조를 두루 보이고 있는데 이후 점차 “左”에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쪽으로 논조가 변해갔다. 이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겠다.

1) 改革·開放중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武克全 : 사회주의 개혁과정중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대립과 투쟁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주의 改革은 복잡한 국제환경중 진행되는 것이고, 국제 자본주의 적대세력이 기회를 엿보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和平演變」과 전복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 일부 「資產階級自由化」 입장을 견지하는 연약한 세력이 존재하고, 국제적인 「和平演變」분위기에 고무되어 改革의 명의로 사회주의 개혁과정중 어느정도의 자본주의 세력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私有經濟를 社會主義公有制經濟의 「補充」으로 삼아 일정 범위내에 존재하는것을 허락하여 생산력 발전에 대해 유리하게 하고있다. 그러나 私有經濟의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존재와 발전은 일정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계선을 절대 모호하게 해선 안되고 당연히 생산력 발전의 진행정도에 근거해서 점차 사회주의 경제원칙과 정치원칙을 체현해야만 한다. ㉞

2) 公有制를 견지해야 한다.

高 狄 : 公有制的 견지야말로 사회주의를 구하는 관건으로 보고있다. 즉, 사회주의 최대의 우월성은 공동부유이고 생산자료 공유제는 공동부유의 기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초는 사유제이고 사회주의 기초는 公有制이다. 생산자료 所有制의 성질은 사회의 성질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公有制를 기초로 하느냐, 私有制를 기초로 하느냐는 사회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㉞

35) 王晦美, 「社會主義面臨的挑戰與對策研討會綜述」, 江西社會科學, 1991年, 第 5期, PP.15 7-158.

36) 李 焱, 「堅定地站在反和平演變鬭爭的最前沿-前沿理論問題研討會綜述」, 高校理論戰線, 1991年, 第 5期, PP.52-57.

37) 武克全, 「關於社會主義現實與理想反差的思考」, 社會科學, 1990年, 第 7期, PP.18-21.

38) 高 狄, 「論社會主義制度的優越性」, 求是, 1991年, 第 8期, PP.10-11.



3) 계급투쟁 관념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丁克謀 :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 이론을 잊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계급과 계급투쟁 이론은 무산계급 혁명의 보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사상이 말하고 있는 무산계급의 정권탈취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시기에 있어서의 계급모순과 계급투쟁 이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단단히 움켜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사회에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착취계급이 타도되어 완전한 착취계급으로서는 비록 다시 존재하지는 않지만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승부는 결코 최종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둘째, 台灣과의 통일대업에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국내의 타도되었던 지주계급의 강대한 후견인인 국제 자본세력이 「和平演變」의 기량을 발휘해서 「포탄의 연기없는 전쟁중 승리」를 획득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 영역내의 계급투쟁이 현 단계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직접적이며 은밀하고 위협성이 많다. 다섯째, 비록 사회주의 개조가 이미 완성되어 착취계급의 경제기초는 이미 상실되었으나 신생착취계급의 토양은 결코 철저히 제거되지 않았다. 丁克謀는 이처럼 그의 독특한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계급투쟁관념의 새로운 확립과 사회주의 救援을 연계시키고 있다.<sup>39)</sup>

4) 「和平演變」에 반대하는 투쟁을 重視해야 한다.

李濟華 : 「和平演變」은 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다. 서방 자산계급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에 향해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和平演變」에 반대하는 것이 현재 사회주의의 홍망성쇠에 관계되는 하나의 긴박한 임무이고 사회주의 장기발전에 관계되는 전략임무이다. 그러므로 「和平演變」에 반대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사상적으로나 정치상·조직상 유효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고 反「和平演變」의 전략을 형성해야 한다. 특히 이데올로기 영역상의 공작, 제국주의의 사상적 공세에 대한 反침투조건 조성 노력해야 한다.<sup>40)</sup>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소련·동구 사회주의 붕괴원인과 관련된 중국의 사색」의 내용은 모두 중국대륙의 학자·이론가들이 심사숙고해서 발표한 견해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물론 鄧小平도 입장을 같이하긴 하나 단지 反「和平演變」등 사회주의 원칙론에 대해서만 말하고 「改革·開放」에 대해서는 「크게」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特區」의 姓이 「資」氏이나 「社」氏이나 하는 논쟁도 일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개혁·개방노선을 주창한 鄧으로서서는 비록 3년전 政界를 떠났다고는 하나 가만히 앉아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었고, 드디어 楊尚昆 國家主席의 제의를 받아들여 갑자기 廣東東城등 「經濟特區」를 돌아보고 전국 上下를 진동케하는 소위 「南巡講話」<sup>41)</sup>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39) 丁克謀, 「必須重新確立正確的階級鬥爭觀念」, 湖北大學學報, 1991年, 第 2期, PP. 35-40.

40) 李濟華, 「和平演變, 是社會主義國家的主要威脅」, 求黨, 1990年, 第 11期, PP. 35-36.

41) 鄧小平은 1992. 1. 18. - 2. 21. 武昌, 深圳, 珠海, 廣州, 上海등을 돌아보면서 개혁·개방과 黨의 14大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했다. 이에 3월 1일 中共中央辦公廳秘書處는 「中發(1992)二號」文件으로 「중공중앙의 등소평동지 중요담화학습 전달에 관한 통지」(「中共中央關於傳達學習鄧小平同志重要談話的通知」)를 各省·自治區·直轄市黨委를 위시한 모든 黨·政·軍·人民團體의 黨機構에 하달하여 철저히 학습할것을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하고 있다. 즉,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관건시기에 鄧小平同志는 黨의 「一個中心, 兩個基本點」(경제건설, 개혁·개방의 견지와 4항기본원칙의 견지)의 基本路線 집행을 철저히 관철해서 「中國特色的 社會主義」道路를 걸어갈것을 견지할것과, 특히 현재의 유리한 시기를 움켜쥐고 개혁·개방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할것등의 일련의 중대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담화는 현재의 개혁과 건설 및 黨 14大 개최를 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도적 작용을 할것이며, 전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심원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爭鳴」, 香港, NO. 174. 1992년 4월호, P. 23; 「九十年代」, 香港, 267期, 1992년 4월호, PP. 30-31; 「鄧小平

## IV. 改革·開放의 당위성에 관한 최근理論

### 1. 鄧小平의 「南巡講話」

중국이 당면한 핵심문제는 중국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방법은 黨의 「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의 基本路線 견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위 「鄧小平路線」<sup>42)</sup>이라 불리는 「中國特色的 社會主義」<sup>43)</sup>건설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개혁·개방의 「總設計師」라

『南巡』之政治意義, 中國大陸研究, 民國 81年 3月, 第 35卷, 第 3期, PP.1-2 참조.

- 42) 1992. 2. 12. 中共은 「中央政治局擴大會議」를 열고, 이 자리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개방노선을 「鄧小平路線」이라고 칭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도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됨을 선언하고 있다. 中國大陸研究, 民國 81年 3月, 第 35卷, 第 3期, P.1 참조.
- 4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살아있는 영혼은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마르크스 변증법은 每 특수한 역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毛澤東도 「矛盾論」에서 이론적으로 모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모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사물인식의 기초가 되며, 무산계급 정당이 路線·政策을 제정하는 기본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물질의 每種 운동형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기타 각종 운동형식과의 공통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것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특수성에 주의해야만 한다”고 毛는 지적하면서 사물의 특수성을 인식해야만 실제에서 출발해서 實事求是할 수 있고 客觀과 主觀을 일치시킬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原理에 근거해서 볼때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원리(원칙)가 共通性(共性)이라면, 중국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실천은 特殊性(個性)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문제는 중국의 특수성을 떠나서 연구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반드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원리(共通性)와 결합해야만 비로소 중국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客觀法則을 정확하게 밝힐수 있다고 보고있다. 여기에서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독특한 이론이 도출된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 한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 (1) 사회주의 + 중국특색
- (2)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원리 (또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공통적인 규율)+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상황(또는 실천)
- (3) 사회주의의 공통적인 규정성 + 중국의 특수한 표현형식
- (4) 사물의 보편적인 모순 +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가 반영한 중국사회의 특수한 모순
- (5) 共性(普遍性) + 個性(特殊性)
- (6)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관점·방법 + 중국 국내외 실제상황
- (7)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원리 + 중국의 현대화 건설등이다.

그러면 중국이 장래목표로 하고있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주요내용에는 어떤것이 있다. 12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를통해 그들의 목표를 분명히 이해 할 수 있으며 이 내용 가운데에 「改革·開放」이 포함되어 있다.

- (1) 인민민주專政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의 건설을 강화한다.
- (2) 사회주의의 근본임무는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 (3) 사회주의의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한다.
- (4) 대외개방을 단호하게 확대한다.
- (5) 公有制를 주체로 견지하고 여러종류의 경제적 성분을 발전시킨다.

불리우는 鄧은 현재 88세로 이미 정계에서 물러는 났지만 중국사회주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정신적 영도자이다. 鄧은 금년초 남쪽지방을 순회하면서 개혁·개방의 성과에 크게 만족해 하면서 이를 더욱 독려하는데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이번 「南巡講話」는 주로 개혁·개방정책의 견지와, 개혁·개방의 가일층 심화와 확대(「加深改革, 擴大開放」)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담화는 약 5분지 3정도가 개혁·개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5분지 2정도가 이데올로기 문제와 정치문제에 관한 것이다. 전체의 기본정신은 「經濟反左, 政治反右」임을 알수있다.<sup>44)</sup> 이 내용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다.

1) 이번에 와서보니 深圳, 珠海特區와 기타지방의 발전이 이렇게 빠른줄 몰랐다. 보고나니 자신감이 더욱 생긴다. 사회주의 도로를 걸어가는 것은 원래 국가가 번영·부강해지고 인민의 생활이 날로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유일한 출로이다. 개혁을 하려하지 않는자는 누구이든 물러나야 한다(「誰不搞改革, 就只有下台」). 경제특구의 길이 옳았다. (「特區之路走對了」). 금후 더욱 풀어놓고 더욱 개방해야 한다. (「今後要更放寬, 更開放」).

2)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고, 개혁 또한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 黨 第11屆 3中全會이래의 노선을 견지하자면 관건은 「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의 견지이다.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며,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생활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단지 죽음의 길 하나밖엔 없다. 이 기본노선은 100년간 동요해선 안된다. 이 노선을 견지해야만 인민이 비로소 黨을 믿게 될 것이고 옹호하게 될것이다.

3) 개혁·개방의 성과가 없었다면 「6.4」천안문 사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 국가정권 모두가 이 노선·제도·정책을 지켜야 한다. 겨우 10여년내에 국가가 이처럼 발전하고 인민이 기뻐하며 세계가 주시하게 된것은 3中全會이래의 路線등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변경시킬수는 없다.

4) 개혁·개방에 대해 좀 더 대담해야하고 과감하게 시험해 보아야 하며 전족을 한 여인처럼 행동해선 안된다. 옳다고 보는것은 대담하게 시험해 보고 대담하게 돌파해 나가야 한다. 深 의 중요한 경험은 바로 대담하게 돌파해 나간데에 있다.

5) 개혁·개방의 발걸음을 크게 떼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요소가 많아지고 자본주의 길로 빠져들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姓이 「資」氏이나 아니면 「社」氏이나(「是姓「資」還是姓「社」」)의 문제이다. 이에대한 판단의 표준은 마땅히 주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즉 발전시키는데에 유리하냐 아니냐,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을 증강시키는데 유리하냐 아니냐,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하냐 아니냐를 보아야 한다. 즉 이 3가지에 유리하지만 하면 그 요소가 자본주의것이라 해도 姓은 「社」氏라는 것이다. 特區설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본주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걱정들을 했는데 深圳의 건설성과는

(6)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한다.

(7)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공동으로 부유해가는 길을 걸어간다.

(8) 마르크스주의 지도하에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견지한다.

(9) 평등호혜, 단결합작을 견지하여 각 민족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한다.

(10) 「一國兩制」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한다.

(11) 獨立自主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한다.

(12) 黨의 영도를 개선하고 黨자체 건설을 강화 할것을 견지한다.

이상의 설명은 金昭中, 「毛澤東 哲學思想(111) : 唯物辯證法中 對立統一規律(矛盾法)」,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 第 6輯, 1992년 2월, PP.152-153 ; 金昭中, 「中國特色的 社會主義建設研究」, 西江大學校 東研究所, 東亞研究, 第 22輯, 1991년 6월, PP.165-202 ; 人民日報, 1992.9.7. 第 5版 참조.

44) 「爭鳴」, NO.174, 1992년 4월호, PP.23-27 ; NO.173, 1992년 3월호, P.19; 「九十年代」, 267期, 1992년 4월호, PP.42-47; 張鎮邦, 「評鄧小平的南巡講話」, 中國大陸研究, 民國 81年 6月, 第 35卷, 第 6期, PP.5-12; 人民日報, 1992년 3월 31일자, 第 1,4版 참조.

이런 사람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했고 特區는 사회주의이지 자본주의가 아니란 것을 보여 주었다. 深圳의 상황을 놓고 볼때 公有制가 主體이고 외국상인의 투자는 단지 4분의 1을 점할뿐이고, 外資에 대해서도 稅收, 勞務등 方面에서 우리는 이득을 보고있다. 「三資」(中外合資, 中外合作, 外商獨資)기업을 더 많이 운영해도 두려울것 없다. 우리에게는 國營大中型 기업이 있고, 鄉鎮의 集體企業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政權이 우리손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이는 外資가 많아지면 資本主義가 그만큼 많아지고, 「三資」기업이 많아지면 자본주의 요소가 그만큼 많아지며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상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의 생각이다. 「三資」기업은 현행 법규와 정책에 따라 外商이 돈을 좀 벌어가기는 하나 중국이 稅金을 걷어들이고 工人이 임금을 받으며, 기술과 관리를 배우고 정보를 얻으며,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三資」기업은 중국의 정치·경제조건에 제약의 받아 사회주의 경제의 유익한 補充이 되고 있으며 결국은 사회주의에 유리한 것이다.

6) 계획이 많으나 시장조절이 많으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별이 되지 않는다. 계획경제가 사회주의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것도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인 것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착취를 소멸하고 양극분화를 없애서 최후에는 共同富裕에 이르는 것이다. 증권, 증권시장등 요소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위험한 것이냐 아니냐, 자본주의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냐, 사회주의에서도 이용할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는 시험해 보면 된다. 1,2년 실시해 보아서 좋으면 실시하고 잘못된 것이면 바로 잡거나 폐쇄하면 된다. 아무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비교해서 우세하게 되자면 반드시 인류사회가 창조해 낸 일체의 문명성과를 담대하게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하며 현 세계각국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포함)의 현대 사회화 대생산 규율을 반영한 일체의 선진적인 경영방식과 관리방식을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한다.

7) 사회주의 도로를 걷자는 것은 바로 점차 공동부유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일부 지역에 발전할 조건이 있으면 먼저 발전하고, 다른 일부지역의 발전이 더디면 먼저 발전한 지역이 낙후한 지역을 이끌어 최종적으로는 공동부유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마땅히 또한 능히 양극분화를 피해야하고 또 피할 수 있다. 해결방법은 먼저 부유하게 된 지역에 납세를 좀 더 많이 부과하여 빈곤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일이 너무 일러도 안된다. 본 세기 말 「小康水平」에 도달했을때 이 문제가 발생할텐데 아무튼 이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전국범위 내에서 沿海와 內地간의 빈부차이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8) 개혁·개방에 대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經濟特區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인 농촌개혁에서 農村家庭聯產承包 실시와 人民公社를 폐지할때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정책은 그 진행상태를 가만히 두고 보자는 것이다. 강제로 하지말고 무슨 운동도 벌리지 말고 하고싶은 사람은 하게끔 내버려 두고 그 과정을 살펴 보자는 것이다. 論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하나의 發明이다. 논쟁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시간만 허비하며 무슨일도 이룰 수 없다. 논쟁하지 말고 대담하게 시험(「試」)해보고 대담하게 돌진(「擧」)해야 한다. 농촌개혁도 도시개혁도 모두 그렇게 하자.

9) 현재 “左”右의 나쁜 영향이 존재하는데 고질적인 것은 역시 “左”경 사상이다. “左”의 요소는 우리 黨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다. 아무리 좋은것도 단번에 부숩 버릴수 있다. 右도 사회주의를 죽음으로 몰수 있지만 “左”도 역시 사회주의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 중국은 右에 대해 경계해야 하나 주로 “左”를 방지해야 한다. 국내동란은 右의 것이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마치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和平演變」의 주요위험은 경제영역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등이 바로 “左”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경직된 思想을 解放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때를 놓치지 말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하고, (「抓住時機, 發展自己」)관건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주위 몇몇 국가와 경제발전을 비교할때 우리보다 빠르는데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든지 혹은 그 발전이 너무 느리면 인민이 비교해 볼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발전할

수 있는것을 막아도 안되고 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가능한한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효과를 건우고 외향형 경제를 건설해야 걱정거리가 없게된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경제발전은 당연히 실제에 맞지않는 高速度를 유지하려고 해선 안되고 안정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廣東같은 지역은 앞으로 20년만 힘써 발전시키면 아시아의 4마리 작은 龍(「四小龍」)을 따라 잡을 수 있다. 上海를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할때 놓지 않은것이 큰 실수이다. 만약 첨가시켰더라면 현재 長江三角洲와 전체 長江流域내지 전국의 개혁·개방의 국면이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11) 개혁을 실제 시작한것은 1980년이고, 1981-83년까지 3년간의 개혁은 주로 농촌에서 진행되었으며 1984년부터 도시개혁에 치중했다. 경제발전이 비교적 빠른것은 1984년부터 88년까지이다. 이 5년간 농촌 개혁에서는 수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이로인해 강력한 도시 공업의 발전도 가져왔으며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의 상호영향과 상호촉진을 가져와 중국의 富가 巨大하게 증가되었다. 1989년에는 「治理整頓」을 실시해서 경제과열을 막았는데 (1988. 9. -1991. 11. 까지 3년간), 이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1984-1988년까지 5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은 「大躍進」과 다르며, 전체 발전의 메커니즘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발전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몇년간 가속화 했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治理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고 본다. 즉, 「收」와 「放」을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전중인 大國은 경제발전을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천천히 안전하게만 해선 안된다. 경제안정과 균형적인 발전에 주의는 해야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발전이 중요한 것이다.

12) 국제경제 측면에서 볼때 몇몇 국가는 발전과정중 모두 일찌기 高速度의 발전시기가 있었는데 日本, 南朝鮮, 동남아 몇몇 국가와 지역이 이와 같다. 현재 중국은 국내조건이 구비되어 있고 국제환경이 유리하며 게다가 사회주의 제도는 역량을 집중해서 큰일을 해낼수 있으므로 급후 현대화 건설과정에 있어서 속도를 비교적 빠르게 하고 효과가 비교적 좋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13) 경제발전을 빠르게 하자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존해야 한다. 科技는 第一의 生産力이다. 최근 10, 20년 사이에 세계과학기술의 발전이 대단히 빠르다. 지식인은 공인계급의 일부분이다. 원로과학자·중년·청년 과학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외국유학을 나간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과거 정치태도가 어떻든지 불문하고 돌아와서 일해주길 희망한다.

14) 한 손으로는 개혁·개방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각종 범죄활동을 소탕해야 한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이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다. 신중국이 성립한후 불과 3년만에 그 슬한 부패와 추악한 현상을 일소했다. 이는 국민당도 해내지 못하고 자본주의 국가도 해내지 못했다. 공산당은 개방과 더불어 들어온 일부 부패현상의 소탕을 해낼수 있다.

15) 전체 개혁·개방의 과정중 반드시 시중 「四項基本原則」건지에 주의해야 한다. 黨 12屆 6中全會에서 「資產階級自由化」반대에 20년간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는데 20년 가지는 안되겠다. 「資產階級自由化」의 범람은 그 결과가 극히 나쁜 것이다. 이에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 무산계급專政에 의존해서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하나의 기본 관점이다. 정권을 잡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흥계급은 대체로 적대계급의 역량에 비해 약하다. 그러므로 專政의 수단으로 정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건설한지 불과 몇십년이며 아직도 初級段階에 처해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와 발전에는 매우 긴 역사단계가 필요하다.

16)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의 견지, 경제발전,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은 일정한 의미에서 볼때 그 관건이 사람에게 있다. 계급주의의 「和平演變」공작은 그 목표를 우리 이후의 세대에 다 두고 있다. 왜냐하면 元老가 아직 살아 있으니 적대세력이 변화시킬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江澤民세대는 第 3代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第 4代, 第 5代가 현존하고 있다. 우리 세대가 세상을 뜬후 누가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러므로 군대교육, 專政기구교육, 공산당원교육, 인민과 청년의 교육을 잘해야만 한다. 또 「革命化·年輕化·知識化·專業化」의 표준으로 德才兼備한 계승인을 선택하여야 하고, 인민을 배양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에 의존해

야 100년간의 기본노선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진정으로 第 3대를 찾아낼려고 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두사람(胡, 趙)은 실패했다. 그들은 경제방면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산계급 자유화」 반대문제에서 실패했다. 이점은 바꿀수 없는 일이다. 현재 더욱 젊은 동지(60여세)를 선발해야 한다. 아직도 안심할수가 없다.

17) 형식주의가 많다. 회의도 많고 문장도 너무 길다. 실재를 존중하는 實事求是를 해야 한다. 실사구시는 마르크스주의의 精髓이다. 전쟁, 건설, 개혁에서 모두 이에 의존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성공은 교조주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의존했고, 실사구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18) 사회주의의 발전은 역전될수 없는 총 추세이다. 그러나 그 도로에는 굴곡이 존재한다.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대체하는 몇백년의 기간중 수많은 왕조의 복벽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정한 의미에서 모종의 잠시의 복벽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법칙성의 현상이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엄중한 굴곡이 출현했고 사회주의가 약해진것 같으나 인민은 이를 통해 단련과 교훈을 얻어 장래 사회주의를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할것이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고 마르크스주의가 사라졌거나, 필요없거나, 실패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몇백년간 발전해 왔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실현한지 불과 몇십년이다. 건국시부터 100년간 시간을 써서 中等수준의 발전된 국가로 만든다면 이는 상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19) 중국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 중국은 세계평화를 보호하는 굳건한 역량이다.

이상의 「南巡講話」의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鄧小平은 자본주의의 일체 경제건설 방법을 흡수하여 사회주의 경제 뿐만아니라 사회주의 정치도 구할려고 하고있다. 따라서 경제는 「自由化」 하되 정치는 「保守性」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 즉 「無產階級專政」을 견지하고, 反「資產階級自由化」는 20년 이상 해야하며, 또한 「和平演變」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保守性」을 알 수 있다.

둘째, 鄧은 江澤民등의 인물에 대해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이는 鄧의 개혁·개방노선이 否定되지는 않을까 즉 鄧의 역사적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江을 갈아치우는데까지 이르지는 않을것 같고 단지 경고를 보내면서 여전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안심할수 없다」는 말에서 표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여론에는 분명히 「左」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鄧은 “고질적인 것은 역시 「左」의 요소이다”, “중국은 右를 경계해야 되지만 주로 「左」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姓이 「資」氏이나 아니면 「社」氏이나의 판단은 마땅히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보아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요소도 그 姓氏(성질)가 「社」會主義的인 것이 되니까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논쟁을 삼가하자고 제기하고 있다. 논쟁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나 혹은 사회주의나 하는 본질적인 이론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하게 되어 개혁·개방노선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鄧의 反「左」에 대한 제기는 중국의 이데올로기면에서의 極左分子들을 움추려들게 만들었고 다른한편 趙紫陽시대의 개방파 인사들이 다시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北京의 한 경제좌담회에서는 모든 조치에 대해 姓이 「資」氏이나 아니면 「社」氏이나 하고 따질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가리켜 「新凡是派」라고 비평했다고 전한다. 따라서 鄧의 정치적 입장이 비록 보수성을 띠었다고는 해도 이번의 「講話」는 대륙의 중앙 및 지방의 경제개혁파들에게 「제 2차」 개혁·개방의 물결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講話」는 1992. 10. 12. 개최하기로 되어있는 黨 第 14大에서 보수세력 「左」을 억누르고 개혁·개방파를 권력분배에 더 많이 참여시키는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1978. 12. 黨 11屆 3中全會이래의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鄧의 뜻을 받은 胡

45) 「九十年代」, 香港, 267期, 1992年 4月號, P. 31 참조.

《魏邦總書記(1981.6.-1987.1.), 趙紫陽總書記(1987.1.-1989.6.), 江澤民總書記(1989.6.-)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개혁·개방의 숨결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探索」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면 이 鄧의 개혁·개방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의 주장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판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한다.

## 2. 기타 인물들의 理論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이론은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지만 鄧의 「南巡講話」이후 부쩍 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참신한 이론을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段若非 : 1984.12.7. 인민일보 평론원으로서의 그의 문장「理論與實際」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마르크스가 서거한지도 101년이 되었다. 그의 노작들은 100여년전에 쓴것이다. 어떤것은 당시의 상상이었는데 그 후에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어떤 생활은 꼭 들어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상황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레닌도 겪어보지 못했다. 그들이 접촉해 보지 못한만큼 당시의 마르크스, 레닌의 노작더러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12.8. 인민일보는 위 문장의 끝부분에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수정)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나 레닌의 노작에서 지금의 중국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것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同年 12.21. 또 인민일보에 「再談理論與實際」의 문장을 게재했는데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教條가 아니라 行動의 길잡이라고 지적하고, “마르크스는 일찌기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商品과 貨幣가 불필요하다고 상상했으나 우리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商品과 貨幣가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마르크스가 말하지 않은것은 모두 실행 할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야만 할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鄧小平이 영도하는 개혁노선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1986.4. 조자양 총리도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사회주의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고있는데,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제에 결부시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등소평의 黨 12大 개막사)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위해 중국국정에 기초하여 탐색·시험·창신을 통해서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에 진입한후 주요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상식인데 중국 최고 지도자는 오랫동안 이 상식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22년간(1957-1978)의 우회적인 길을 걸은후에 黨 第 11屆 3中全會에 이르러서야 이 상식을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倪志安 : 중국공산당 第 11屆 3中全會이래 중국사회주의의 기본모순을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중국공산당이 탐색해온 주요방면은,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결정한다는 원리에 입각해야 하며 따라서 생산관계의 변혁과 발전은 반드시 생산력 발전의 실제상황을 근거로 해야 하며 고도의 물질문명을 건설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 적용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는 다방면에서 개혁하며 끊임없이 사회주의 경제제도·정치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또 나아가 전민족의 사상문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46) 현시대사조 잡지사편, 사회주의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강좌, 연변인민출판사, 1991, PP.443-444; 張頌邦, 「鄧小平思想的兩重性」, 中國大陸研究, 民國 78年 8月, 第 32卷, 第 2期, P.26 참조.

47) 현시대사조 잡지사편, PP.444-446 참조.

48) 앞의 책, P.448 참조.

건설에 노력하며, 黨의 영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회주의 기본모순을 해결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보장이 된다고 보았다.<sup>49</sup> 즉 반드시 생산력 발전수준에 따라 정치제도도 이에 적응해서 개혁을 해야지 무턱대고 정치개혁을 단행해서는 안된다는 鄧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3) 人民日報 社論 : 1992.1.1. 사론에서 1992년에는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深化改革, 擴大開放」)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江澤民總書記 : 1991.7.1. 「중국공산당 성립 70주년 경축대회 담화」에서 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 중국국정에서 출발하여 경제체제 개혁의 진행정도와 사회적 조건에 근거해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완비(입법, 감독, 선거제도 개선)하되 3권분립을 하지 않는다. 안정·단결된 생동하는 정치국면을 발전시키되 서방의회 제도는 불허한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제와 정치협상제도를 견지하되, 공산당의 영도를 부정하거나 서방의 다당제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세계의 우수한 문화를 흡수하되 민족 허무주의나 전반적인 서양화, 사상의 다양화, 자본주의화, 「자산계급자유화」사조, 「화평연변」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발전을 촉진한다.<sup>50</sup>

1992.3.9.-11. 중공중앙 정치국 전체회의에서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당의 근본임무임과, '하나의 중심과 두개의 기본점'(「一個中心·兩個基本點」)의 기본노선은 향후 100년간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改革·開放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改革·開放에 있어 더욱 대담해야 하고, 試驗과 創新에 용감해야 하며 진일보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해야 할것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조건하에서 生産力을 발전시켜야 하며, 개혁·개방을 통해 生産力을 해방해야한다. 또한, 사회주의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를 따지지 말고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 국력 증강에 유리하며, 인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주로 보아서 유용한 것은 무엇이든 이용해야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과 시장의 경제수단을 잘 운용해야 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하며, 인류사회가 창조한 일체의 문명성과를 대담하게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하고, 현재 서방의 발달한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선진 경영방식과 관리방식을 흡수하고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개혁을 가속화할 객관적 조건(政治保證·物質基礎·體制基礎·思想基礎)을 이미 구비해 놓았다고 자신있게 선언하고 있다.<sup>51</sup>

5) 方生 : 인민일보에 발표한 「대의개방과 자본주의 이용」이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중국근대사에 의하면 중국은 오직 사회주의 길을 걸을수는 있으며 자본주의 길은 걸을수 없다는 것을 결론지어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근대사는 중국과 같이 경제가 낙후하고 특히 장기간 봉건주의 통치를 받은 국가로서는 오직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용해야지 완전히 배척해서는 안되고, 서방문화중 중국에 유용한것은 거절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흡수해야 국가가 번영하고 부강해질수 있다. 소위 자본주의의 유용한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자금 이용,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관리경험 도입, 각종 전문인재 도입, 자산계급 경제이론 중 유용한 관점·모델·방법의 흡수, 객관규율을 반영한 경제정책과 경제입법의 참고등을 말한다. 이중에는 과학기술상의 위대한 성과와 장기 발전해온 상품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등이 포함된다. 그뿐만아니라 중국내에 자본주의 경제도 적당히 발전시켜 사

49) 彭承福主編, 毛澤東思想新論(成都:電子科學大學出版社, 1991), PP.65-66. 이 부분의 필자는 倪志安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50) 江澤民, 「在慶祝中國共產黨成立七十周年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2.7.2.

51) 人民日報, 1992년 3월 12일자, 第1版 참조. 정치보충이란 정치안정·사회안정·경제발전·시장번영·생활개선; 물질기초란 「治理整頓」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한데다,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실력증강을 이루었고; 체제기초란 경제체제의 구조가 이미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장치 거대한 동력을 방출하게 될것; 思想基礎란 개혁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아 人心 깊숙이 개혁이 자리잡고 있고 인민은 개혁을 지지하는것등을 말한다.



회주의 경제의 유익한 보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으므로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앨수는 없다. 착취현상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중요한것은 이를 잘 인도해서 정책이 허락하는 궤도내에 끌어들여야 한다.

黨 11届 3中全会 이전에는 「獨立自主·自力更生」을 중요한 건국방침으로 삼아 對外開放과 대립시켜, 서방의 선진기술 도입을 서양에 대한 노예철학으로 보았고, 外資이용에 반대했으며, 국내외에 負債가 없는것을 사회주의 우월성의 표현으로 생각했고, 서방의 과학적 관리 경험에 대해 배우길 거절했으며, 서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고찰과 학습하는것도 반대했다. 또한 국제경제·기술교류 등등도 감히 전개하지 못했다. 이와같이 단지 국내의 자금·자원·기술과 시장에만 의존해서 경제건설을 하려했던 전략적인 사상은 분명히 폐쇄적인 것이었다. 3中全会에서의 개외개방과 대내 경제 활성화의 전략적인 정책결정은 중국경제를 봉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었고 유용한것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방침에 의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인식을 갖게했고 또한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했다.

사회주의 제도는 개방적인 제도이다. 사회주의 경제도 개방적인 경제이다. 과학적인 사상 체계로서의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상 수많은 思潮를 흡수하는 가운데 발전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로 개방적인 思想體系이다.

서방과의 접촉중 그 국가 인민에게서 많은 좋은 品德·정신·태도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단점을 채우고 서로 학습해서 서로 그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방 국가에게도 자신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있다. 이는 인류의 귀한 정신적 富의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로온 점은 얻어 우리문화를 풍부하게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영향」은 否定해선 안된다. 자본주의는 인류사회 발전사상 극히 중요한 역사단계이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발생·발전·멸망의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형태에 대해 맹목적으로 숭배해서도 안되고 일괄적으로 배척해도 안된다. 마땅히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용해서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촉진에 유리하게 하고 인류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며 인류문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야 한다.<sup>52)</sup>

6) 李鵬 總理 : 1992. 3. 21. - 4. 3. 제 7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 5차회의 「政府工作報告」(3월20일)에서 李鵬도 일치 단결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도로를 따라 계속 전진하고자 하면서 改革·開放은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거쳐야할 길(「必由之路」)임을 또다시 천명하고 있으며, 10여년간 중국사회 경제면모가 거대한 변화를 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改革·開放에 있음을 역설하고, 제2보(1990-2000년)의 전략 목표와 전체 현대화 실현(2050년경)도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深化改革, 擴大開放」)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53)</sup>

아무튼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고 국력증강에 유리하며 인민생활 수준향상에 유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용감하게 실천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험을 개괄하며 대외개방을 더욱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曠紅 : 인민일보에 발표한 「개혁과 생산력 해방」이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최근 개최된 中共中央政治局 전체회의(1992. 3. 9. -11.)에서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은 黨이 인민을 영도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임무라고 강조했는데 이 말은 중국현대화 건설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칙은 바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단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임무는 바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은 鄧小平同志가 수년간 반복해서 말한 일관된 사상이다. 생산력은 생산방식중 가장 혁명적인 요소이고 인류역사 발전을

52) 人民日報, 1992년 2월 23일자, 第 1, 4版, 「對外開放和利用資本主義」.

53) 人民日報, 1992년 4월 5일자, 第 1, 2版, 「政府工作報告」.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역량이며 사회진보와 후퇴를 판단하는 주요 표지이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필연적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사회주의가 새로운 생산력을 대표하고, 생산력 발전에 있어 더욱 충분한 조건과 광활한 전망을 발휘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발전해야 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방되어야 한다. 개혁도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오직 개혁해야만 생산력을 해방시킬수 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다.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나 아니냐가 우리의 이론·노선·방침·정책을 판단하는 주요한 표준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기만 하면 그 방법이 어디에서 왔든 관계없이 대담하게 시험해보고 채용해야 한다. 일체 생산력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혁명'이란 표지를 아무리 많이 붙이고 있다 해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것을 흡수하고 거울로 삼는것을 배척해선 안된다.<sup>54)</sup>

8)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 胡繩 : 레닌도 그의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성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혁명후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일체 자산계급의 제도·정책들은 사회주의와 서로 융합될수가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매우 유치하게 보고 이를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의 인류역사에서의 진보적인 작용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물려준 일체의 「재료」를 이용해야만 된다는것을 논증했다. 자본주의가 이루어낸 기술과 문화성과를 이용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어떤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한다면 그는 이미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레닌이 볼때 자본주의 문화 유산이 없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공산주의를 건설할 재료는 없다고 본것이다.

사회주의는 「空地」위에 단지 제도의 우월성에만 의존하여 건립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창조해낸 거대한 생산력을 필히 계승해야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과학·기술·사회화 대생산의 수단등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며, 사회주의에 유익한 자본주의 문화를 흡수해야만 한다. 그런후에야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비로소 진정으로 발휘되며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사회생산력과 고도의 문명을 창조해낼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원은 자산계급 전문가에게 배우는것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에는 대립관계 이외에 계승의 관계가 있으므로 무산계급은 사회주의 건설중 자산계급에게 배워야 된다. 이러한 관점을 “左”의 관점에서 본다면 극히 있을수 없는 반동적인 사고방식일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확실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개혁·개방중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sup>55)</sup>

9) 人民日報社長 高 狄 : 종전에는 「左」의 이론을 펼치던 인물이었었는데 鄧의 「南巡講話」이후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鄧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즉, 그는 인민일보의 「당의 기본노선을 집행·관철하는 자각성을 높이자」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원래 체제의 병폐중 하나는 국가의 관리가 너무 많고 통제가 너무 지나치다는데 있음을 지적하고 마땅히 거시적으로는 정확한 산업정책에 입각해서 관리·조종 기능을 발휘하되 미시적으로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급과 계급투쟁에 습관이 된 보수세력들은 改革·開放중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지 아닌지, 국가와 인민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보지않고 먼저 성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姓“資”還是姓“社”」)를 묻고서 비록 자본주의에 속하기는 하되 사회주의에 유용한것 조차도 자본주의 것이지 사회주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실행에 옮길려고 하지않아 개혁의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고“左”에 반대하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改革·開放중 주로 “左”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右도 경계해야 함을 또 강조하고 있다. 右의 관점을 지닌자들은 「四項基本原則」을 부정하고 중국을 자본주의 도로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만약 중국이 자본주의 도로를 간다면 단지 서방대국의 종속국이 될것이고 兩極分化가 출현할 것

54) 人民日報, 1992년 4월 1일자, 第 4版, 「改革與解放生產力」.

55) 人民日報, 1992년 4월 10일자, 第 5版, 「社會主義和資本主義的關係」.

이며 광대한 인민군중은 고난을 겪게 될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므로 주로 “左”를 방지하는 동시에 右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산계급자유화」사조가 범람치 못하도록 해야 할것을 역설하고 있다.<sup>56)</sup>

10) 吉方文 : 인민일보에 발표한 「개혁·개방은 姓이 ‘社’氏이지 ‘資’氏가 아님을 논한다, 라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일찌기 「三資」企業이 많으면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논쟁이 일어난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外資를 도입하고 「三資」企業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 국력 증강에 유리하며, 인민생활의 제고에 유리한 것으로서, 사회주의적인 것이지 결코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是姓“社”不是姓“資”」)고 강조했다. 또 「三資」企業은 「和平演變」의 온상이고, 鄉鎮企業은 不正의 근원이며, 農村聯產承包責任制는 사회불안정의 因素라고 하면서 改革·開放을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비판하고, 改革·開放이전 약 20여년간 “左”의 지도 사상의 영향하에 실시한 “빈궁한 사회주의”는 표면적으로는 姓이 “社”이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적 흡인력이나 응집력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사회주의가 좋다”고는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덜거리길 배고파 못살겠다고 불평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주의는 오직 죽을길 밖에는 없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改革·開放이 없으면 사회주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鄧小平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창조하는 改革·開放은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에 착안하고 빈곤을 타파하고 致富해서 「小康水乎」을 실현하려는데 착안한 것이며 사회주의의 흡인력과 응집력을 제고 시키려는데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改革·開放은 당연히 사회주의적이지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黨 11屆 3中全會이래 「四個現代化」를 실현하고 대폭적으로 생산력을 제고시키자면 필연적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생산력 발전에 맞지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개혁하고 일체 부적합한 관리방식·활동방식·사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 改革·開放은 광범하고도 심각한 하나의 「혁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거 상당히 긴 기간에 자본주의를 대할때 종종 사회주의와의 대립된 일면만을 보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학습하고 합작·이용하고 거울로 삼을 일면은 거의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주식제, 증권시장, 자본, 상품생산등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일체 一切 모두 자본주의에만 특유하게 있고 사회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점은 편면적이고 일종의 “左”경적 사고방식이다. 사회주의가 일종의 참신한 사회제도라고 할것 같으면 오직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창조한 전체 사회생산력과 우수한 문화성과를 계승하고 이용하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것을 결합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해야만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수백년간의 역사가 있으며 각국 인민이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창조하고 발전시킨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 유익한 지식과 경험, 과학적인 관리방식과 경영방식등은 인류공동의 文明成果이므로 우리가 모두 계승하고 학습해야 할 것들이다. 레닌도 10월 혁명후 얼마 안있어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자본주의 문화가 획득한 방대한 일체의 경험 교훈의 기초위에 사회주의를 건립하는것 말고 또 무슨 다른 사회주의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실현정도가 어떤가는 우리 소비엘 정권과 소비엘 관리기구가 자본주의의 최신의 진보된 것과의 결합이 좋으나 나쁘냐에 달려있다.” 또 레닌은 공인 계급의 임무는 “자본주의가 쌓아올린 일체 가장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체 문화·지식·기술을 자본주의의 도구로부터 사회주의의 도구로 바꾸는 일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문명사상의 일체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만 한다. 현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의 것을 가져가 그의 衰落后을 연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의 좋은것들을 거절해서 자신의 성장을 막을 이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자본주의의 일체 현대 사회화 생산규율을 반영하는 선진 경영방식이나 관리방식을 사회주의는 완전히 대담하게 흡수하고 거울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마

56) 人民日報, 1992년 6월 22일자, 第 5版, 「增強貫徹執行黨的基本路線的自覺性」.

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비록 어떤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먼저 창조되고 자본주의를 위해 봉사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가져다가 사회주의를 위해 쓸수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고 있다고 하여 어리석게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법률이 허가하는 합법 경영의 외국자본, 홍콩·대만자본과 개인자본등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허락하는 바이고 또 필요한 것이다. 즉,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위해 소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일체 유용한 것들을 학습하고 이용해야만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상이 더욱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것이나 사회주의 것이나 하는 추상적인 논쟁에 속박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개방의 발걸음을 떼어 놓을수가 없는 것이다. 현 세계에서 양종 사회제도는 경쟁중 서로 학습하고 서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정상적인 것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것을 개조와 이용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바꾸어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케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改革·開放을 거절하고 문을 닫고 지내거나 경직되면 그 결과는 경제는 정체되고 국력은 쇠퇴하며 인민생활은 향상되지 않게 되어 군중은 흩어지게 되고 마침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改革·開放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sup>57)</sup>

11) 吳樹青 : 「6.4」천안문사태 당시 학생들에 대한 강경 보수적인 대응으로 黨中央의 신임을 얻어 中國人民大學 부총장에서 北京大學 총장으로 발탁된 鄧의 「南巡講話」이후 갑자기 “左”의 태도를 바꾸어 鄧의 개혁·개방을 「적극」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鄧은 인민일보에 발표한 「개혁·개방의 득실·성패를 판단하는 세가지 표준」이라는 문장에서 鄧이 말한 바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左”가 改革·開放을 가로막는 잘못된 사상임을 지적하고 「세가지 유리한」원칙(「三個有利於」原則)이란 모델을 내놓고 있다. 즉, 改革·開放은 중국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는데도 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左”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左”의 집증적인 표현은 「改革·開放이 자본주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和平演變의 위험은 경제영역에서 온다」, 「외자도입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않을까?」, 「특히 特區개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지 않을까」 등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기적인 “左”의 사상적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원래의 사회주의 모델을 불변의 것으로 보아 조금만 바꾸어도 의심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런데 改革·開放하자면 원래의 사회주의 모델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의 사회주의 모델에는 많은 요소들이 생산력 발전을 속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改革·開放 중의 새로운 탐색·시험·창신은 원래의 사회주의 모델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서 그 是非得失이 판단될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오직 그 새로운 탐색·시험·창신들은 첫째,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냐 둘째,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증강에 유리하냐 셋째, 인민의 생활 수준 제고에 유리하냐를 보고 그 是非得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가지 유리한」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대담하게 도입·탐색·시험·창신해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원래의 것 중 이 「세가지 유리한」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견지·공고·제고시켜야 하고, 이 「세가지 유리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것은 개혁·제거·지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이치로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가지 유리한」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도입·흡수·소화해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세가지 유리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改革·開放정신에 불리한 부패한 것들은 단연코 부단히 막아야 한다. 따라서 吳樹青은 鄧小平이 일찌기 제기한 「세가지 유리한」(「三個有利於」)원칙을 대담하게 탐색·창신하기 위한 총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에 따라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대담하게 탐색·창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순전히 속하는 ‘착취’라든가 생산자로서의 ‘자본가 점유’등등도 「세가지 유리한」원칙에 부합하면 완전히 도입해서 채용할 수가 있음을 주장하는 담대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것들이 발전하면 중국 사회주의는 위험하지 않겠는가? 위험한 점이 있다. 그러나 鄧小平이 말한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7) 人民日報, 1992년 6월 25일자, 第 2版, 「論改革開放姓“社”不姓“資”」.

볼때 위험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우세하고, 사회주의가 국가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민소유제의 대중형기업, 향진기업이 모두 사회주의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정권이 공산당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58)</sup>

12) 人民日報社論：1992.7.4. 人民日報社論「論解放思想」에서도 제목 그대로 사상을 해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改革·開放과 局面을 타개하자면 먼저 사상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14년이래 경제·정치·과학기술·교육등 각 분야에서 대담한 개혁을 단행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 이론과 정책을 형성해왔다. 이는 또한 사상해방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혁 이전에는 소련의 고도집중과 통일적인 경제 모델을 도입했고 소유제는 공유제의 「순수성」만을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다. 문혁중에는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생산력 발전은 소홀히 했으며 상품생산과 화폐교환을 비판했다. 黨 11屆 3中全會이후에야 사상적으로 거대한 진보(해방)를 했는데 이는 즉 사회주의는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상품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가치 규율을 존중하고 시장의 기능을 발휘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상품경제가 매우 발달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자연경제와 平均主義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화 대생산과 상품경제하의 경제 운행 메커니즘에 대해 익숙하지 못했으며 주식제나 증권시장·파산·합병등 새로운 조치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左”경 사상이 존재했다. 또 이러한 사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전히 과거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원칙이나 교조주의에 머물러 있거나 사회주의에 대한 일부 비과학적인 이해 또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뛰어넘는 사상이나 정책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처럼 “左”의 사상은 주로 실재를 무시하고 교조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혁명과 건설사업이 실실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류사회의 역사에 대해 변화와 발전의 안목으로 연구했으며 구사회를 비판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땅히 개혁가이어야 하며, 사상의 응고와 행동의 보수와는 조금도 닮은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左”의 사상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제도가 일단 건립되면 마치 모든것이 완전 무결할 것으로 알고 발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비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개혁은 어떤 사회에도 필요하다는 논리요, 개혁은 반드시 사상해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중국의 國情·國力은 어떠한가, 어떤 발전 단계에 와있는가, 환경은 어떠한가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사상 해방이 필요하며 이전 상황(실제)에 기초해야 중국 실정에 맞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이다. 「思想解放」은 개혁과 건설에 유리한 사상과 경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를 대담하게 흡수하고 거울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제도는 이처럼 개방적인 체계이다. 이들의 생명력은 바로 사회진보에 유리한 것들을 흡수하고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9)</sup>

13) 人民日報：7월 5일 人民日報 한 문장에서도 공산당원은 改革·開放의 前列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60)</sup>

14) 魏泰豐：인민일보에 발표한 「개혁도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논함」이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개혁이란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생산관계의 생산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고, 또 상부구조의 경제기초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은 사회 기본모순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볼때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초월해도 생산력의 발전을 파괴하게 되고,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에 뒤져도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대약진시기 인민공사회 운동은 전자에 속하고, 장기적인 고도집중의 產品經濟體制, 政企合一, 소유권과 경영권의 合一, 大鍋飯, 鐵飯碗의

58) 人民日報, 1992년 7월 3일자, 第 5版, 「判斷改革開放得失成敗的三條標準」.

59) 人民日報, 1992년 7월 4일자, 第 1版, 「論思想解放」.

60) 人民日報, 1992년 7월 5일자, 第 1版, 「共產黨員要站在推動改革開放前列」.

분배제도 등등은 후자에 속한다. 이는 모두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左”의 착오이다. 그러므로 이런 “左”의 사상을 제거하고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인민의 부단히 증대하는 물질·문화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단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임무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생산력 발전을 가장 중요시한다. 따라서 생산력을 발전시키자면 생산력 발전과 맞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개혁해야만 된다. 개혁은 사회주의 제도의 자아실현이며 하나의 큰 사업이다. 개혁을 통해 중국은 이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역사 단계의 주요모순과 기본모순 간의 내재적인 연계를 파악해야 진정으로 사상을 해방시키고 경제발전의 주동권을 장악하게 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기초간의 맞지 않는 부분을 제때에 조정할 수 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 도로를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1)</sup>

16) 鄧穎超 :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71주년을 맞이하여 鄧穎超도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없었고, 사회주의 중국의 번영과 창성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가 변화 무쌍한 오늘날 중국은 정치안정·사회안정·人心안정과 사회주의 사업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런 국면은 쉽게 오는것이 아니니 더욱 노력하자고 하면서 전당·전국 각 민족인민은 改革·開放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해야한다. 전체 공산당원 동지는 江澤民同志를 핵심으로한 당중앙의 영도하에 각 방면에서 공산당원의 선봉대 모범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의 「一個中心, 兩個基本店」의 기본노선을 견지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분투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또 改革·開放에 대해 각 언론 매체는 많은 선전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 문장은 그녀의 유언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sup>62)</sup> 이처럼 현재 중국인민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되 중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탐색·개발하고 전국 각 민족·인민의 思想을 統一하여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改革·開放에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음을 각종자료와 실제견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 중국인민은 상하가 단결하여 과거 滿清政府에 의해 실추되었던 「中華思想」을 다시 중흥시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V. 改革·開放의 目標와 實踐

### 1. 개혁·개방의 필요성과 목표

1978.12.18. - 22. 중국 공산당 第 11屆 3中全會는 華國鋒의 「兩個凡是」(凡是毛主席作出的決策,我們都堅決維護;凡是毛主席的指示,我們都始終不渝地遵循)<sup>63)</sup>의 “左”경 방침을 비판하고, 문화대혁명 기간(1966.5.-1976.10.) 毛澤東의 지도사상이었던 「以階級鬥爭爲綱」과 「無產階級專政下繼續革命」구호사용을 전면 중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左」傾의 속박을 타파하고 「實事求是」<sup>64)</sup>원칙을 강조했으며 全黨全國의 공작 중점을 전환시켜 사회주의 4개

61) 人民日報, 1992년 7월 6일자, 第 5版, 「論改革也是解放生產力」.

62) 人民日報, 1992년 7월 1일자, 第 1版, 「慶祝黨的生日, 加快改革開放」.

63) 1971.1. 會議에서 一次 말한바 있는데 1977.2.7. 人民日報, 解放軍報, 紅旗雜誌의 社論인 〈學好文件抓住綱〉에서 정식으로 華國鋒은 「毛澤東主席이 결정한 모든 政策은 우리 모두가 단호하게 지켜야 하고, 毛澤東主席의 모든 指示는 우리 모두가 시종 여김없이 따라야 한다」는 두개의 凡是를 주장하여 鄧小平의 復權과 鄧小平路線에 반대하는 「文革路線」을 固守했다. 李谷城, 中國大陸政治術語(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2), pp. 273-274 참조.

64) 「實事求是」란 원래 중국의 古語로서 최초로 〈漢書〉의 〈河間獻王傳〉에서 보이는데, 이 의미는 학문연구시에 충분한 事實根據를 장악하는데 주의해야 하고, 그런후에 사실에서 眞實된 결론을 얻어내야 한다는 일종의 참된 學風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空虛한 階級鬥爭만을 외치고 生產力 발전에 동한히 할것이 아니라 中國의 당면한 現實과 人民의 欲求를 중시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中國建設의 眞正한 방도를 찾아내

현대화(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현대화)건설에 두는 중국역사에 획기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회의이다.

1984. 6. 鄧小平은 제2차 中日 민간대표와의 회의시 말하길 “무엇을 사회주의라고 하는가, 무엇을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가? 우리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완전히 깨우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생산력 발전을 가장 중시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단계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바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사회주의는 빈궁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빈궁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더욱이 아니다”<sup>65)</sup>라고 했다.

1985. 4. 등소평은 진일보해서 명확하게 지적했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칙은 바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기초위에 건립되는 것이다.”, “11기 3중전회 이후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를 탐색했다. 아무튼 생산력을 발전시켜서 중국의 경제를 점차 발전시키는 것이다.”<sup>66)</sup>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한후 주요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982. 9. 중국공산당 제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등소평은 사회주의 건설문제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원리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상황을 결합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1987. 10. 중국 공산당 제 13차 전국대표대회에 趙紫陽 당 총서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도로를 따라 전진하자’라는 공작보고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음으로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 할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中心을 생산력 발전 즉 經濟建設에 두고있다. 조자양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우리당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은 전국 각 민족인민을 영도하고 단결시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4항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改革·開放을 견지하고, 자력갱생과 간고창업의 정신으로 아국을 부강·민주·문명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기위해 분투하는 것”<sup>67)</sup>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노선과, 이를위해 ‘경제건설’과 ‘4항 기본원칙’ 견지, ‘改革·開放’ 견지가 제시된 것이다. ‘4항 기본원칙’ 견지(사회주의 도로의 견지, 중국 공산당 영도의 견지, 인민민주專政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思想 견지)와 ‘改革·開放’ 견지라는 두가지 기본점(‘兩個基本點’)은 서로 의존하면서 모두 ‘경제건설’이라는 하나의 중심(‘一個中心’)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4항 기본원칙’ 견지는 ‘立國之本’이고 ‘改革·開放’ 견지는 ‘경제건설’(즉 사회주의 4개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총방침(또는 총정책)으로서 ‘強國之路’인 것이다.<sup>68)</sup> 즉, 다시말해서 ‘경제건설’이라는 ‘마

---

도록 해야한다는 唯物主義 認識路線을 가리킨다. 1941. 5. 毛澤東이 <改造我們的學習>에서 철학의 각도에서 재해석을 하고 그후 이 ‘實事求是’관점을 항상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1. 6. 黨 11屆 6中全會 이후에는 鄧小平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신을 ‘實事求是派’라고 칭하고 있다. 李谷城, 앞의 책, PP. 477-478 참조.

65)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增訂本)(北京:人民出版社, 1987) PP. 52-53.

66) 鄧小平, 앞의 책, P. 103-104.

67) 蔡華宜等主編, 中國共產黨會議概要(沈陽:沈陽出版社, 1991), PP. 761-762; 한양대학교, 中蘇研究, 11권 4호(통권 제 36권)1987/8 겨울, P. 251.

68) 中國을 부유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이 갖추어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자면 四項基本原則과 개혁·개방은 어느 하나도 결여 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결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말하는 개혁·개방은 ‘資產階級 自由化’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반적인 서양화’의 개혁·개방이 아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사유화나 완전한 시장경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나 사상문화에 있어서의 다원화의 개혁·개방이 아니다. 중국이 말하는 개혁이란 사회주의 기초 위에서의 부단한 발전이고, 中國國情에 입각해서 생산관계중 생산력과 서로 맞지않는 부분을 자각적으로 조정하고, 上層建築중 경제기초와 맞지않는 부분을 조정하여 사회주의에 내재한 활력과 생기를 충분히 발휘케

차」는 4항 기본원칙 견지와 改革·開放견지라는 「두바퀴」가 있어야만 하며, 그래야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건설목표를 향해서 잘 달릴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의 「三步曲」전략이다.<sup>69)</sup>

제 1보 : 1990년의 국민총생산액(GNP)을 1980년 수준(7,100억원)의 2배 성장을 실현한다. 이 임무는 1988년 이미 실현되어(14,015억원) 인민 대부분은 「따뜻하고 배부른」(「溫飽」)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선언.

제 2보 : 본 세기말(2000년)의 GNP(28,000억원 목표)를 다시 1990년 수준의 2배로 성장시켜 인민생활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넉넉한 수준」(「小康水平」)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때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GNP)은 \$800-1000수준으로 중국측으로 볼때는 꽤 괜찮은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제 1,2보 기간 1980-2000, 20년간에 GNP를 4배 달성한다는 것이다.

제 3보 : 21C중엽(2050년)에는 50년간에 다시 2000년 수준의 GNP를 4배 성장시켜서 현재 중등발전 국가수준(1인당 GNP \$4000)에 이르게 한다. 이때는 인민생활이 「비교적 부유」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4개 현대화」도 실현된다는 것이며 이 기초위에서 계속 전진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개괄하면 溫飽-小康-中富의 3個目標을 실현한다는 것인데 溫飽段階는 빈궁 낙후를 벗어나서 비교적 건실하고 공고한 社會主義 物質技術基礎를 건립하여 농업인구가 다수를 점하는데서부터 비농업인구가 다수를 점하는 工業化의 임무를 完成하는 단계이다. 小康段階는 자연경제와 半자연 경제가 매우 큰 비중을 점하는 상태를 끝내고 전국 도시와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生産의 商品化와 社會化를 실현하여 社會主義 계획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가 되게하는 단계이다. 中等段階는 改革·開放을 통해 활력이 충만한 사회주의 經濟體制를 건립·발전시키고 점차 高度의 民主·法制를 완비하며, 효율과 활력이 넘치는 社會主義 政治體制와 敎育·科學·文化體制를 건립해서 비교적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사회 現代化와 文明化를 실현한다는 단계를 말한다.<sup>70)</sup>

이상의 「3보곡」구상은 鄧小平이 일본 수상(大平正芳) 회견시 처음 제기했던 것이며 중국측은 이전락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달성하자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경제체제·정치체제·사상문화·교육분야등에서 改革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지금까지의 폐쇄정책(「閉門自守」)을 버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문호를 開放해서 자금·선진기술·경영관리방법등을 수입하고 배워야만 한다. 이렇게 볼때,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이후 양무운동·변법유신운동·

---

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방은 대외개방으로서 사회주의의 유익한 보충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은 四項基本原則을 기초 또는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개혁·개방은 중국을 자본주의화 하게되고 서방 자본주의 체계에 통합하게 될것이며 중국인민은 극히 빈곤한 상태에 떨어지고 외국자본과 본국 착취계급의 노예가 될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四項基本原則과 결합하지 않으면 부강한 길로 들게 하지도 못할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런데 또 한편 개혁·개방은 強國之路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중국의 빈궁낙후한 변모를 바꾸고 발달된 국가와의 차이를 줄이며 인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떠나면 사회주의는 정체·낙후하게 될것이고 그 고유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없어 자본주의를 쫓아가거나 초월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자본주의를 대체하지도 못할것이어서 인민은 四項基本原則에 대해 회의와 동요를 보이게 될것이고 四項基本原則은 견지되어 갈수가 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개방과 四項基本原則 견지의 통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呂紅主編, 中國改革開放答問錄(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PP.13-15 참조.

69) 呂紅主編, 앞의 책, PP.34-37 참조.

70) 李振城編著, 中國特色的社會主義入門(天津:南開大學出版社, 1988), PP.176-177 참조.



신해혁명·신민주주의 혁명·사회주의 혁명등을 통해 계속해서 서양을 배우고자(「學習西方」) 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바는 중국전통의 합리적인 부분도 계승한 「社體實用」 즉 社會主義를 「體」로 하고 資本主義를 「用」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도 기타 어떤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발생·발전의 과정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발생하자마자 완전 무결한 제도일수는 없을것이다. 이는 하나의 점차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늘 변화하고 改革해서 더욱 새롭고 더욱 높고 더욱 완전한 단계로 향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엥겔스도 100여년전 “내가 생각하기로는 소위 ‘사회주의 사회’는 한번 성립되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타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늘 변화하고 改革되는 사회로 보아야만 한다.”<sup>71)</sup> 라고 지적했듯이 사회주의 사회는 발전·변화하는 사회이고 발전과정 중 존재하는 병·폐(「사회주의 사회의 모순」)를 늘 제거해야 발전해갈 수 있는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改革이요 開放인 것이다.

## 2. 경제체제 개혁 : 목표와 실천

### 1)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

따라서 중국은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스탈린식」경제체제 모델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경제체제 개혁 방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1) 경제건설에는 반드시 장기적인 「지속·안정·협조」적인 발전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sup>72)</sup> 과거 40년간 경제건설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조급하게 성과를 서두르면서 많은 쓴잔을 마셨다. 「急」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2) 所有制面에서 「一大二公」(크면 클수록 좋고 公有化 정도가 철저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는것) 추구와 生産手段의 全人民 所有制化를 기본으로 추진해왔던 과거의 所有制 構造에서 多様な 所有形態가 동시에 共存하는 것으로 전파시켰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여러 종류의 소유제 (전민소유제·집체소유제·개체소유제)형식과 경영방식(지명성·지도성·자주성·합작성)을 계속 발전시킨다. 공유제는 사회 생산력 발전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량의 私營經濟와 개체경제 (個體經濟 : 소기업·수공업·단거리 운수업·부품상점·음식업·서비스업·수리업등)는 公有制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들은 생산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며 취업을 도와주어 공유제인 국영 경제의 부족을 메꾸어 주는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또한 中外合資·中外合作·外商獨資 즉 「三資」기업의 존재도 다양한 소유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sup>73)</sup> 이를통해 자본·선진기술·관리경험을 들여와 경제발전을

71) 「馬克思恩格斯全集」第 37卷, P. 443. 李忠杰等, 社會主義改革史(北京: 春秋出版社, 1988), P. 2에서 재인용.

72) 持續이란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발전속도를 유지하는것을 말하고, 安定(즉「穩定」)이란 3계 기록이 없는것을 가리키며, 協調란 중요한 경제관계나 구조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균형적인것을 말한다. 중국공산당 趙紫陽 총서기가 黨 第 13屆 3中全會 (1988. 9. 26-30)의 <工作報告>에서 지적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환경을 「治理」하고, 경제질서를 「整頓」해야 한다고 말했다.

73) 소위 「三資」기업중 2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모두 1979. 7. 공포 실시된 것임.

(1) 中外合資經營企業: 외국과 株式으로 合資한 합영기업이다. 外商이 중국의 公司·企業·기타 經營組織과 平等互利的 원칙에 의거 중국정부의 비준을 얻어 중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쌍방이 설비·현금·장소사용권·공장공업(산업)권을 투자주식으로하고 주식에 따라 收益을 나눈다. 外商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다. 중국법률의 관할을 받고 납세도 하나 중국정부도 외국합영자의 투자·이윤·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가속화 시킨다. 따라서 전민소유제인 대중형 기업이 중국경제의 사회주의 성질을 주도해 가므로 이의 영향하에 여러종류의 경제성분을 발전시켜도 자본주의 제도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즉 법률·법규에 의해 경영범위·경영조건·관리·원료공급·상품판매·수입분배등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 중국사회의 공공이익이 손상받지 않도록 한다. 다양한 소유제 형식과 경영방식의 견지는 장기적인 방침인 것이다.

(3) 종래에 금지시되었던 所有와 經營의 분리가 인정됨에 따라 國有·國營方式 이외에 國有·集體經營과 國有·個體經營方式(個人에 의한 請負經營), 集體所有·農家家庭經營方式(農業生產責任制로서 집체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생산을 청부하는 農家經營)등 多樣한 經營方式을 추구하고 있다.

(4) 수평적 경제연합을 가일층 발전시킨다. 개인과 집체의 연합, 집체와 집체의 연합, 집체와 국영기업의 연합, 국영기업간의 연합등으로, 광산·공장·전선·관광사업·상업등의 연합 사업을 벌여서 지역과 부문사업의 협애성을 뛰어넘는 연합체를 건립한다.

(5) 계획경제(계획조절)와 시장경제(시장조절)을 결합시킨다.

과거 오랫동안 인식에 있어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를 적대시하고 자본주의에 속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실천에 있어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를 형성해 왔다. 이 체제의 현저한 특징은 상품경제, 가치규율, 시장조절작용을 배척하고, 자원의 배치에 있어서도 행정기구를 통해 행정지령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는데 건국 초기에는 중국의 국민경제를 신속히 회복·발전시키고, 역량을 집중해서 큰 건설항목들은 달성하는데 적극적인 작용도 했으나, 상품경제의 작용을 배척한 나머지 그후의 발전과정에서는 날로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게 됨으로서 전체 경제의 생기와 활력을 잃게했다. 黨 第 12屆 3中全會(1984.10.20.)에서 계획과 상품경제를 대립시키는 전통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公有制기초위에서의 계획적 상품경제이며,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이야말로 사회경제발전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이고, 중국 경제 현대화의 필요조건임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이처럼 이론에 있어서의 중대한 돌파는 실천에 있어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14년래 중국의 經濟體制改革은 시장 계획적 상품경제 新體制라는 이 중심을 둘러싸고 진행된 것이고 세계가 주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이론과 조치가 나오게 되었다.

국가는 일체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모두 국가계획내에 넣을 능력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생에 주요한 大·中·小 國영기업은 계획경제로, 그외(소형기업 상당수의 개체경제, 사영경제, 「三資」기업)는 계획 지도하의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좋다. 현 단계에서 경제운행의 기본 조절형식은 직접적인 지령성 계획경제, 간접적인 지도성 계획경제, 시장경제등 3종류가 있다. 이는 이제껏 시장경제를 배제하고 指令性계획을 기초로해서 행정수단 위주로 해왔던 계획체계에서 指導性계획 위주로의 전환을 뜻하며 사회주의 시장체계의 건립과 가격개혁 추진으로 합리적인 가격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계획경제 활동의 중점은 5箇年計劃을 중심으로 한 中長期 계획의 수립과 국민소득 분배계획등을 통해 巨觀적으로 經濟의 綜合的 均衡을 이룩하도록

이 기업은 건설자금 증가, 선진기술 수입, 중국기술자와 관리간부 배양에 유리하다.

(2) 中外合作經營企業: 외국과의 계약식 합영기업을 가리킨다. 外商이 자금·선진설비·기술을 제공하고, 중국합작사는 토지·장소·노동력·노동서비스를 제공하여 平等互利的 원칙하에 공동으로 각종 기업을 설립한다. 外資利用에 유리한 중요한 형식이다. 쌍방의 권리·의무·책임은 쌍방의 협정체결로 규정한다.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중국법률의 보호와 관할을 받는다. 이는 주식에 의하지 않고 합작의 규정에 의거 收益을 분배한다. 張克明主編, 中華民國共和國大辭典(北京: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 PP.135-136 참조.

록 하는데 국한되고 企業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일상적인 投入·生産·販賣에 대한 경제활동을 일정한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계획은 사회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또 시장은 사회분업 및 상품생산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 사회주의도 사회분업과 상품생산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자본주의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다. 중국은 改革·開放전의 192개 도시가 현재 460여개 도시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발전한 이유는 사회분업과 상품생산이 존재하여 상품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계획과 시장은 상호 배척하거나 서로 대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되는 것이다. 계획은 주로 전체적인 거시적 조종·총량통제·구조조정·경제배치등 방면에서 작용하고, 중요한 자원과 사회이익의 조정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며, 시장은 주로 미시경제 영역, 일상적인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자원배치등 방면에서 작용한다. 계획은 시장의 수요와 일치해야 한다. 계획과 시장은 경제조정 수단으로서, 또 자원의 배치 방법으로서 모두 상품경제 발전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나누는 표지가 아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구별은 소유제의 不同에 있고 사회주의는 公有制기초 위에서의 계획적 상품경제를 건립한 것이고, 자본주의는 私所有制 기초 위에서의 경제를 건립한 것이다. 계획의 기능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반면, 시장작용은 상품생산자와 경영자의 적극성을 끌어내어 광대한 생산자와 경영자가 시장수요에 의거 생산 경영활동을 조직케 하려는 것이다. 현재 시장기제가 잘 발휘되는 지방은 경제활력이 매우 강하고 경제발전이 빠르다. 따라서 기업은 마땅히 시장경쟁에서 생존을 구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대형 기업이든 중형 기업이든 경영이 잘안되면 다른 기업체에 넘어가든가 파산하게 되거나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도 대기업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오직 시장경쟁 중에서 경제조직을 조정할 수 있고 경제효율을 제고 시킬수가 있는 것이다.

(6) 분배제도에서 종전에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國家의 利益과 이와는 반대로 경시되어 왔던 集體(企業)와 個人(工人)의 利益이 동시에 고려되는 분배제도로 전환하여 소득과 경제효율이 밀접하게 결합된 분배제도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를 견지하고 양극분화를 막는다. 즉, 노동자가 사회에 제공한 노동의 수량과 질량에 따라 개인 소비품을 분배한다. 많이 일한자는 많이 얻고, 적게 일한자는 적게 얻으며, 일하지 않은자는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실행했던 분배상의 「平均主義」를 지양해야 노동자의 적극성을 발휘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가 먼저 부유하게 되는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集體(企業)間에 생산성과 경영효과가 서로 다를때 그 분배는 달라지게 되어 企業의 國家에 대한 「大鍋飯」현상도 제거될 수 있고, 또한 공인의 소득이 企業의 경제성과와 個人의 노동 생산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工人間의 分配上 平均主義를 克服함으로써 工人의 企業에 대한 「大鍋飯」현상도 제거될수 있게 했다. 그러나 수입에 있어 지나치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막도록하며 궁극적으로 改革·開放중 共同富有하는 길을 시종 견지하도록 한다. 양극 분화를 초래하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7) 기업활력을 증대시킨다. 도시기업은 공업생산·건설·상품유통의 주요한 담당자이며 사회 생산력 발전과 경제·기술·진보의 주도적 역량이다. 도시기업은 현재 100여만개에 8,000만의 공인이 일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의 8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과 경영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여하히 충분히 발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히 전민 소유제의 대중형 기업의 활력은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 고리가 되고있다. 현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大·中·型 기업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주요 체현자로서 13,000여개(전국 공업기업 총수의 2.7%)인데 이들이 창조하는 공업생산치는 전국 공업 생산치의 45.6%이고, 고정자산총치비중 2/3, 납세부담은 60%이상 차지한다. 대체로 원유·전력·철로·주요기계설비등의 생산기업중 대중형 기업이 90%이상을 점한다. 그러므로 大·中·型 기업발전 속도와 효과의 고저가 직접 국민경제 및 기타 기업의 생산속도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경영의 합리화와 경제실력증강, 활력증대, 경제발전 촉진, 경영 및 生産責任制를 통한 자주경영, 생산품 질량제고, 품종의 증가, 노동기율강화, 관리강화, 사상정치공작강화, 자아발전

을 피하는 것이 중국 경제 곤란을 해결하는 첩경이 되고있다. 즉 대형기업의 경영이 좋으나 나쁘나는 곧바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나 여부에 관련되고 또 개혁의 成效과 「四項基本原則」을 더욱 잘 견지할 수 있으나 없느냐하는 중대한 문제에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와 감독은 강화하되 기업내부의 구체적 사무는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업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예속관계를 타파하도록 개혁을 추진, 기업이 진정으로 自主經營·自負盈 ·自我發展·自我約束(制約)하는 '自主權'을 갖도록 하는 企業承包經營責任制를 계속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상품 생산자이자 경영자가 되게한다.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바로 국영기업의 개혁에 있다. 그러므로 특히 전민 소유제 기업경영 방식을 전환해서 기업을 시장으로 향하게 하는데에 있다. 과거 경제체제 문제를 소급해서 볼것 같으면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은 정부의 부속물이었지 자주경영하고 自負盈 하는 경제실체가 아니었다. 계획은 국가가 안배하고 원재료도 국가가 공급하며 상품은 국가가 調撥하거나 책임지고 판매하거나 했으며 이익이 나면 국가에 납입시키고 손실은 국가가 보조해 주었다. 이처럼 기업은 국가의 제한(속박)과 보호하에 권리도 없고 어떤 부담도 없었으며 또한 活力도 없었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번잡한 수속등은 또한 국영기업의 경제효율을 극히 떨어지게 했고 기업의 시장기능의 발휘를 불리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매달려 국내외 시장 변화상황을 연구할 여유가 없었고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시킬 수도 없었으며 국가의 거시적 조절기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점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기업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철칙이 해당되지 않기에 자본주의는 기업이 죽음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발전해갔던 반면 사회주의 국영기업은 적극성이 없어도 모든것이 보장되고 망할 염려도 없기에 당연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정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8) 간접관리위주의 거시적 경제 조절체제를 건전하게 확립한다. 이를위해 금융체계개혁, 통화량 통제, 재정·조세정책개혁, 경제법규체계의 확립, 기업·시장·경제부문에 대한 감독관리, 재정·경제·기술의 정돈·강화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또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지킨다.

(9) 농촌개혁을 전일보 추진하고, 중복건설을 피하며, 중앙·지방·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투자장치를 마련하고, 가격체계·유통체계개혁, 공인임금제도개혁, 사회보장제도(待業보험·의료보험·양로보험) 및 주거문제 개혁을 가속화시킨다.<sup>74)</sup> 이상과 같이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경제체제 개혁의 실천

이상과 같은 경제체제 개혁에 대해 그 실천을 볼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경제체제 개혁은 농촌 개혁부터 시작된다. 1978.12. - 1984년말까지 경제체제 개혁의 중심은 농촌이고 농촌개혁은 큰 성공을 견우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79.9. 黨 第 11屆 4中全會에서는 <中共中央關於加快農業發展若干問題的決定>에 의거 「包產到戶」를 처음 인정하고 일부 副業生產의 필요성과 궁벽한 山地 및 교통이 불편한 농가는 「包產到戶」할 수 있음을 허가했다. 「包產到戶」와 「包幹到戶」가 널리 확산되었다. 1981년 12월 全國農村工作會議에서는 농민의 구농업관리체제(人民公社)의 개혁과 生產責任制건설을 충분히 긍정하고 「家庭聯產承包責任制」(개인 농가가 생산량을 책임진다는 農業生產責任制, 즉 「包產到戶」)를 단순히 궁핍을 면하려는 임시조치로 보지않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적극적 조치로 간주했다. 또 1983년 中共中央

74) 呂 虹 主編, 中國改革開放答問錄(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PP.30-74; 丁頤彥等主編, 中國特色社會主義概論(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88), PP.265-285; 冷滌主編, 學習鄧小平同志南巡重要談話(北京: 人民出版社, 1992), PP.183-184; 人民日報, 1992. 5.11. 및 6.22자 참조.

은 <當前農村經濟改革的若干問題>의 通知에서 「家庭聯產承包責任制」를 전면 실시할것을 선언했다. 1984년말까지 전국의 1억 8천만 農戶가 「家庭聯產承包責任制」를 실시했는데 전국 農戶의 98%를 점한다. 이 農業生產責任制는 農民의 積極성을 대대적으로 고취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 억압되었던 농촌의 생산력을 신속히 해방시켰을뿐 아니라 농촌개혁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는 人口는 많고 경지면적은 적은 中國國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농촌의 생산력 수준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는 農副產品의 수매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농업세를 감면하였으며 自留地를 회복하거나 확대시키고, 家庭副業의 발전을 허가하며 農村市場을 개방하고, 農村流通體制와 產業構造에 대해 부분적인 조정과 개혁을 단행했으며 農村의 多種經營을 적극 발전시켰다. 이처럼 1979년부터 농업정책에 커다란 방향전환을 하면서 生產力의 高度集中이 아니라 오히려 生產力의 분산형태의 일종인 請負形式의 生產責任制를 전반적으로 도입하여 「一大二公」, 「政社合一」의 원칙하에 高度集中을 지향하여 전개되었던 人民公社 운동으로부터 후퇴, 生產力의 社會化·公有化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農業改革을 추진함으로써 1984년에는 人民公社가 해체 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農業經營方式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家庭聯產承包責任制」란 個別農家의 自留地를 제외한 生產隊 所有의 土地를 個別農家에 分배하여 생산케하는 請負生產制으로써 所有制의 改革이 아니라 경영방식을 바꾼 것이다.<sup>75)</sup>

또한 1991.11.25.-29. 中共黨 13屆 8中全會에서는 농업에 관한 중요한 文件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農業和農村工作的決定>을 통과 선포했는데, 80년대의 농업과 농촌공작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농촌개혁의 성공으로 11억 人口의 「溫飽」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하고, 도시개혁과 사회안정을 위해 물질적 조건과 귀한 경험을 쌓았다고 주장했으며 90년대의 주요임무를 열거했다. 위의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있다. 즉 “농업은 경제발전, 사회안정, 국가자립의 기초이다. 농촌의 안정과 전면진보가 없으면 전 사회의 안정과 전면적인 진보가 있을 수 없고 ; 농민의 小康이 없으면 전국인민의 小康이 있을 수 없으며 ; 농업의 현대화가 없으면 전체 국민경제의 현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76)</sup>

농촌경제개혁과 비교해서 도시경제개혁은 아직 시험과 탐색단계에 처해있다. 1978년 여름 四川省에서 우선 5개 國營工業企業이 企業自主權을 확대하는 시험을 개시함으로써 도시 경제체제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 1979년 7월 國務院은 연속적으로 5개의 企業 自主權을 확대하는 文件을 발표했는데 이후 각 省·市·自治區도 계속해서 企業의 自主權 擴大 시범범위를 확대했다. 1983년에 이르러 전국 각지의 工商企業은 보편적으로 自主權을 확대시켰고 또 少數企業에서는 공장장책임제(「廠長負責制」)를 시험적으로 실시했으며 1984년 5월, 國務院은 企業에게 더 많은 自主權을 부여 하였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에 개혁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한 결과 생산의 積極성을 도출할 수 있었고 공농업 발전을 촉진했다. 그리고 1984년 10월 共產黨 12屆 3中全會의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은 도시를 중심으로한 전면적인 경제체제 개혁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시키던 전통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사회주의 경제는 「公有制를 기초로한 계획적 商品經濟」라는 이론을 제시했으며,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경제 발전이 뛰어 넘을 수 없는 단계이며, 중국 경제 현대화 실현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상품경제이론의 제기는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다져 놓는 계기가 되었다. (2) 개혁의 기본임무는 中國特色을 띠고 生氣와 活力이 충만한 사회주의 經濟體制를 건립하고 社會生產力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3) 企業의 活力을 증강한다. 특히 國營大中型 企業의 活力增強은 經濟體制 改革의 중심고리이며, 全民所有制 企業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적당히 나누어 企業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상대적으로 독립한

75) 廖蓋隆 主編, 中國共產黨的光輝七十年(北京:新華出版社, 1991), PP.345-346; 產業研究院 北方地域國家總覽(서울:產業研究院, 1991), P.31 참조.

76) 人民日報, 1991년 11월 30일자 第 1版 참조.

社會主義商品의 生産者와 經營者가 되게 해야 한다. (4) 社會主義 公有制의 기초위에 價值規律을 운용해서 계획적으로 社會主義 商品經濟를 발전시킨다. (5) 합리적인 價格體系를 점차 건립하고 經濟의 지렛대 작용을 충분히 증시한다. (6)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經濟管理의 職能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政府의 행정기구와 企業을 分離시키고 政府기구를 간소화하고 權限을 下放한다. (7) 단호하게 平均主義를 극복하고, 多種形式의 經濟責任制를 건립하며 사회주의 按勞分配 原則을 관철시킨다. (8) 사회주의 全民所有制 經濟가 主導的 지위를 겸하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다종의 경제형식과 경영형식을 발전시키며 전일보 국내적·국제적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9) 사회주의 경제관리 간부를 양성한다. (10) 黨의 영도를 강화해서 개혁의 順調로운 進行을 보증한다. 이 <決定>은 경제체제 개혁과 中國特色의 社會主義 건립에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sup>77)</sup>

1987. 10. 黨 第 13大에서는 개혁을 더욱 빠르게 하고 심화 시키자(「加快和深化改革」)고 하면서 경제건설·경제체제개혁·정치체제 개혁·당의건설등의 기본방침을 제기했다.

1990. 12. 黨 第 13屆 7中全會는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10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를 통과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人民生活를 「溫飽」에서 「小康」수준으로 올리고 生活資料를 풍부히 하며 (2) 居住條件·文化生活·건강수준·사회복지시설·교육사업의 전일보 발전·과학기술 진보·경영관리 개선·경제구조 조정·주요건설 강화. (3) 公有制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계획상품경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결합한 경제체제와 운행기계의 발전 (4) 농업강화, 기초공업과 기초시설 강화, 기공공업 개조등을 제기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도로를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주장하고 있다.<sup>78)</sup>

1992. 3. 20. 李鵬 總理는 第 7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5次會議<政府工作報告>에서는 지난 1년간 改革·開放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논하고 있는데, (1) 농업방면에서, 家庭聯產承包責任制를 전일보 공고·완비하고, 농업사회화, 서비스 체계와 농산물 시장을 발전시키고, 양식 비축제도를 건립했다. (2) 공업방면에서 企業承包經營責任制를 전일보 완비했고 國營大中型 企業의 활력을 증강하는 개혁조치를 취했다. (3) 가격 개혁면에서는 25년간 움직이지 않았던 도시 거주민에 대한 양식·기름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낮추어 놓았던 일부 기초 공업산품 가격을 제고 시켰고, 일부 산품에 대해서는 계획적 兩種價格병존 혹은 그 차이를 축소시켜 가격관계에 적극적인 조치를 가했다. (4) 계획체제·금융체제·유통체제의 개혁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고, 더욱 각종 경제적 조치로 경제의 운행을 조절했다. (5) 住居制度和 社會保障제도의 개혁을 가속시켰다고 말했다.<sup>79)</sup> 또한 1991년의 공작과 3년이래의 「治理整頓」(1988. 9. -1991. 11.) 및 13년간의 改革·開放을 회고하면서 그간의 일체 성취는 위의 「一個中心, 兩個基本點」 노선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며 이 노선은 民衆에 順應한 것으로서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100년간 동요치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요 시책으로 재삼 피력했다.

(1) 경제건설이라는 중심문제를 꼭 움켜지고 놓지 않겠다. 사회주의의 근본임무는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공작은 이 중심에 복종해야 한다.

(2) 改革·開放은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다.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개혁도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하에 改革·開放을 통해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 목적은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류사회가 창조한 일체 문명의 성과를 잘 흡수하거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서방 발달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선진 기술과 일체 현대의 사회화 생산 규율을 반영하는 선진 경영방식·관리방식을 흡수하고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

77) 姜華宜等主編, 中國共產黨會議概要(沈陽:沈陽出版社, 1991), PP.703-705 참고: 廖蓋隆主編, 앞의 책, P.353 참조.

78) 廖蓋隆主編, 앞의 책, PP.354-375 참조.

79) 人民日報, 1992. 4. 5. 「政府工作報告」 참조.

의 현대화 건설에 이롭게 해야 한다.

(3) 「四項基本原則」건지는 改革·開放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보증이다.

(4) 改革·開放을 견지하면서 각종 범죄활동을 막겠다. 또 물질문명 건설을 하면서 정신 문명건설도 하겠다.

(5) 때에 맞추어 경험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것에 힘쓰는 작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형식주의·관료주의 각종착오를 막겠다.

(6) 경제구조의 조정과 효율제고, 특히 농업과 국영 大·중·소기업 방면에서 더욱 큰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 농촌 공작에서는 家庭聯產承包 위주의 責任制를 계속 안정시키고,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집체 경제의 실력을 점차 증대 시키겠다. 과학기술, 농업진흥교육의 전략을 실천 하겠다. 농산물 가격과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시켜서 농촌 상품 경제의 발전을 진일보 시키겠다. 농촌 기업(鄉鎮企業)을 발전시키고, 中·西部 地區와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 地區, 빈곤지구에 농촌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해서 농민생활을 개선 시키겠다.

(7)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질을 제고 하겠다.

(8) 광대한 工人·農民·지식분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도록 하겠다. 일부 분 지구 일부사람의 먼저 부자되는 정책(「一部分地區一部分人先富起來的政策」)을 제창하되 동시에 국가의 거시적 조절작용과 발전지역간의 각종 형식을 통해 상호이익을 지원,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토록 한다.

(9) 企業改革을 적극 추진하고 經營制度를 전환·완비한다. 企業改革은 금년 경제체제 改革의 重點이다. 모든 國營大·중·소기업은 경영기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하고 政府는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서 기업을 市場指向化하고 스스로 경영에 책임지는 사회주의의 상품생산자와 경영자가 되게 한다. 각종 형식의 承包經營責任制를 계속 완비하고, 기업의 공인 인사제도, 임금 분배,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며 평균주의를 타파한다. 주식을 발행하고 증권교역시장을 적극 추진한다.

(10) 각 방면의 개혁과 거시적 관리를 강화 완비한다. 즉 물가, 유통체제의 개혁, 자금 시장, 기술 시장, 정보 시장, 부동산 시장, 勞務 시장의 발전을 촉진한다. 指令性 계획, 指導性 계획, 市場調節의 범위를 진일보 조정하고 시장기제의 작용을 더 잘 발휘토록 한다 등등이 있다.<sup>80)</sup> 中共中央은 3월 1일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전달하는 「二號文件」을 각급 기관에 배포한데 이어 또 5월16일에는 「政治局會議」를 개최하여 더욱 진보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5월 25일에는 省 軍級에 대해 「四號文件」을 전달했다. 「四號文件」은 經濟의 市場化改革과 全方位對外開放을 강조했는데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첫째, 沿海開放을 계속 잘해서 經濟特區, 개방도시, 개방구의 건설을 완비한다. 둘째, 邊境을 개방한다. 즉 東北·西北·西南邊境地區에 우대정책과 貿易多元化를 실행한다. 셋째, 沿江을 開放한다. 즉 上海의 浦東을 中心으로 해서 전체 長江流域의 對外開放을 가져오도록한다. 넷째, 內陸省區에 部分的인 特區政策試驗을 진행한다. 이외에 外資利用을 금융, 무역, 상업, 교통, 관광 및 기타 제 3 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은행과 보험 회사도 外商에게 허가 한다는 것이다. 그 간 보호 정책을 취해 왔던 內需市場과 서비스업도 시장개방과 경쟁으로 더욱 활력이 힘차게 될것으로 보인다.<sup>81)</sup>

### 3. 정치체제 개혁 : 목표와 실천

#### 1) 정치체제 개혁의 목표

80) 앞의 人民日報.

81) 中國大陸研究, 民國 81年 7月, 第 35卷 第 7期.

PP.1-2 참조.

왜 정치체제 개혁이 필요한가?

중국은 「以階級鬥爭爲綱」의 思想指導下에 장기간 지나치게 生産關係 變革의 生産力 發展에 대한 反作用을 강조했고, 上層建築 革命的 經濟基礎 建設에 대한 反作用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점차 중국의 生産力 發展水準과 國情에 맞지 않는 生産關係와 上層建築을 形成했던 것이다. 특히 「文化大革命」 10年間은 다시 이 生産關係 및 上層建築과 중국의 生産力 狀況 및 國情間에 맞지 않는 간격을 넓혀 놓음으로서 國民經濟의 兪중한 挫折을 造成했다.

이에 鄧小平은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을 中心으로 한편으로는 「四項基本原則」堅持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現行 經濟體制·政治體制와 新時期 經濟·文化 發展水準과의 부적응성을 지적하고 이 經濟體制와 政治體制的 개혁없이는 現代化와 社會主義 事業은 끝장이라고 보았다. 즉 政治體제도 개혁하지 않으면 生産力 發展이 방해를 받을 것이고 「四個現代化」의 成功도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종래의 政治體制는 기본적으로 革命戰爭時期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權力이 과도하게 集中된 體制였으므로 이 제도는 武裝 鬪爭과 群衆運動에 맞는 것이지 社會主義 平和建設時期的 경제·정치·문화·사회생활등 방면의 발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82)</sup> 따라서 이 제도를 개혁해야만 했던 것이다.

1980. 8. 18. 鄧小平은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총 방향은 黨內民主를 발양하고 보증하기 위한 것이며 人民民主를 발양하고 보증하기 위한 것<sup>83)</sup>이라 하고, 1986. 9. 또 政治體制改革 총목표는 첫째,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둘째,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 세째, 사회주의 민주 발양과 광대한 人民의 적극성 동원임을 강조했다.<sup>84)</sup> 따라서 정치체제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1986년 이래의 鄧小平의 政治體制 改革에 대한 논술은 1987. 10. 黨 13次 全國 代表大會의 정치체제 개혁의 제기에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정치체제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 시키며 빈궁한 사회주의를 벗어나게 하는데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정치체제 개혁은 '문화 대혁명'의 재발을 막고 黨과 國家의 政治生活를 民主化시키며 국가를 안정시켜 사회주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는데에 필요한 것이며, 당과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고, 공작 효율을 높이며, 인민의 적극성을 동원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동안의 정치체제 개혁의 구체적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黨政 분리 : 1986. 6. 20. 鄧小平은 당내탐오(부패) 현상을 없앨려면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7월말에는 또 黨과 政의 분리를 주장했다. 黨이 政에 대한 간섭이 너무 지나친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 黨이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동시에 책임져서는 안되고, 黨은 단지 정책결정만을 책임지고, 정책집행은 정부기구가 맡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黨政을 분리해야 黨은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집행상에 있어서의 착오에 대한 책임도 벗어나 人民에 대한 위신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세하에서 黨의 영도제도·영도방식·영도작풍을 개선해야 黨의 영도작용을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인 黨政不分, 黨으로 政을 대신하는(以黨代政)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체제 개혁의 관건은 우선 黨政分離 즉 黨政職能分離에 있다. 黨 영도자는 憲法과 法律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또 國家政權·군중단체·각종 경제문화조직을 건립하고, 黨은 政權組織이 충분히 職能을 발휘하도록 보증해야 하고, 군중단체나 기업·사업 단위의 공작을 존중해야 한다. 黨의 주장은 법률 규정을 통해 국가의지가 되도록 하며 黨조직 활동과 黨員의 모범작용을 통해 인민군중을 이끌어 黨의 노선·방침·정책을 실현토록 한다. 그러므로 黨政이 분리해야 비로소 黨조직이 비교적 잘 감독 직능을 행사하고 효과적으로 관료주의를 방지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2) 진일보 권력 下放 : 권력의 지나친 집중현상은 행정·경제·문화조직·군중단체의 권력

82) 遲福林主編, 鄧小平政治體制改革思想研究(北京:春秋出版社, 1987), PP. 1-8.

83) 鄧小平, 鄧小平文選(香港:三聯書店, 1987), P. 332.

84)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增訂本)(北京:人民出版社, 1987), P. 144.



이 지나치게 黨委領導機關에 집중되고, 기층의 권력은 지나치게 상급 영도기관에 집중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영도기관이 너무 많은 처리할 수 없는 일에 관여하여 事務主義에 빠지고, 기층은 자주권이 결핍되어 인민 군중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 수가 없다. 이 폐단을 극복하는 길은 權力下放이다. 따라서 하급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하급기관에서 결정 집행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는 그 직책을 분명히 나누어 지방의 일은 지방이 관장토록한다. 권력하방은 반드시 주요도시와 기업 사업단위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권력하방은 수많은 제도의 개혁을 수반하므로 기층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3) 政府工作機構改革 : 정부기구가 방대하고 중첩되며 직책이 불분명하고 상호 겹치기도 한다. 이런점이 관료주의 형성의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부공작기구에 대해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을 해야 한다. 과거의 기구 간소화-팽창-재간소화-재팽창의 모순을 피해야 한다. 기구 개혁을 순리적으로 하기 위해 기구 변동중의 인원 조성을 잘해야 하고 훈련을 결합시켜야 한다. 기구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행정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行政立法을 강화해야 하고 규범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간부 인사제도 개혁 : 활력·효율·적극성의 제고는 간부인사제도와 떨어질 수 없다. 현재 인사관리 방식이 불건전하여 인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用人에 있어 法治가 결핍되어 있다. 간부 인사의 법에 의한 관리와 공개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인사 관리제도에는 실적을 중시하고, 경쟁·민주감독·공개감독의 원칙을 관철한다. 또한 국가 공무원 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간부의 퇴직제도를 건립하고, 종신제를 폐지하며, 간부의 선거, 시험, 임면, 탄핵, 승급, 순환제도등을 건전히 해야 한다. 또한 간부의 年輕化를 중시해야 한다. 또 간부의 혁명화·년경화·지식화·전업화가 간부 선발의 표준이다.

(5) 사회주의 민주 발전 : 민주가 없으면 사회주의도 없다. 중국은 수천년간의 봉건 사회의 역사였기에 민주 전통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민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봉건주의 잔재를 없애야 되고 당과 국가 제도를 개혁·완비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당과 국가 정치생활의 민주화, 경영관리의 민주화, 전체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보증해서 현대화 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공인과 농민 개인의 민주권리 즉 민주선거·민주관리·민주감독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기층과 공인·농민·지식인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人民이 주인이다. 人民은 진정으로 각종 公民의 權利와 국가 및 기업관리의 권력을 향유해야 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및 그 常委의 각종 직능을 계속 완비하고, 立法工作과 法律監督의 기능을 강화한다. 각급 人大와 군중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人民을 더 잘 대표하게 하여 인민의 감독을 더 잘 받도록 한다. 共產黨 영도하의 多黨合作과 협상제도를 완비해서 민주당파와 無黨派 애국인사의 국가 정치생활에 있어서의 작용을 발휘케 한다. 기층 민주생활을 제도화해서 공인계급과 군중이 주인이 되게 보증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해서 사회의 안정 단결을 유지케 해야 한다. 따라서 출판·결사·집회·시위등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의 申訴제도를 건립하고 공작인원의 합리적인 유동을 제도화하여 봉건 家長式 영도의 존재를 타파한다.

민족간에는 평등·단결·공동번영을 견지하도록 한다. 또 민족 구역 자치제도를 진일보 완비하고, 소수 민족의 간부를 적극 배양한다. 黨內의 가부장제 개인승배를 극복하고, 민주집중제를 강화한다.

(6) 사회협상 대화제도 건립 : 각종 不同한 사회이익과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고 협조한다. 각급 영도기관의 공작은 군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초위에서 비로소 실제와 부합하게 되고 잘못을 피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협상 대화를 제도화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下情上達, 上情下達해서 피차 이해하도록 한다. 이 제도의 기본원칙은 「從群眾中來, 到群眾中去」의 우량한 군중노선 전통을 발양한 것이다. 영도기관의 활동을 개방하고, 중대한 상황 또는 문제를 인민이 알게하고 협상 토론케 한다. 이렇게해서 공작중의 결점·착오를 군중이 비평하고 관료주의에 반대하게 하며 不正之風과 투쟁케 한다.

(7) 사회주의 法制 건설 강화 : 사회주의 민주와 사회주의 법제는 분할할 수 없다. 전 사

회의 안정 단결이 없으면 경제건설은 이룰 수 없고,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도 이룰 수 없다. 국가의 정치생활·경제생활·사회생활의 각 방면과 민주와 전정의 각 분야는 모두 法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한손에는 건설과 개혁을 다른 한손에는 法制를 움켜쥐어야 한다. 법제건설은 개혁의 전과정에 관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立法工作을 강화하고, 法の 집행을 개선하며 사법기관이 法에 의거 독립해서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공민의 법률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한다.

또한 黨 政府組織과 기타 사회조직간의 관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정권 조직 내부활동도 제도화하며 中央·지방·기층간의 관계제도화, 공작인의 배양·선발·임용·도태의 제도화, 기층 민주생활 제도화, 사회협상 대화제도를 제도화한다. 이렇게해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점차 제도화·법률화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케한다. 기존 정치체제는 혁명전쟁 년대에서 사회주의 개조시기에 걸쳐 기본적으로 확립된 것이며 대규모 군중운동이나 지령성 계획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과정중 발전해온 것이어서 현대화 건설과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세는 변했고 당의 사업도 전진하고 있는만큼 반드시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다.<sup>85)</sup>

(8) 黨의 건설 강화 : 黨도 사상·조직·작품면에서 개혁을 해서 改革·開放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해야 한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실효를 구해야 한다.

改革·開放과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당의 사상 정치 공작을 강화·개선해서 각 개 영역에 관철되도록 하고 인민의 사회주의 적극성·창조 열정·헌신정신을 고취하고 전 민족의 역량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응집되도록 해야 한다. 간부隊伍의 소질을 높여야 한다. 德才兼備·公道正派(당의 노선에 충성하고 창조적으로 黨路線을 집행하는) 간부를 重用해야 하고 空話나 일삼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이 결핍된 사람을 중용해서는 않된다. 「四項基本原則」을 견지하고, 改革·開放을 견지하되 실적을 보아야 하며 이것으로 간부의 功過是非를 평가해야 한다. 간부대오의 혁명화·년경화·지식화·전업화를 실현해야 한다. 당의 제도 건설도 강화해야 한다. 즉 당의 집체영도제도와 민주집중제를 건전하게 하되 중앙부터 시작한다. 중앙 정치국 常委는 중앙 정치국에 대해서, 중앙 정치국은 중앙 전체회의에 정기적으로 報告를 하는 공작제도를 건립하고, 지방 각급 당조직도 의사규칙, 표결제도, 생활좌담회 제도를 건립·완비한다. 당내 선거제도를 개혁·완비하고, 당장에 규정된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고, 그 구체적인 條例를 제정·보장한다. 당원의 권리를 침범함은 바로 당의 기율을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黨紀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당내의 민주적인 소통과 민주생활을 건전히 해서 당원으로 하여금 당내 사무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직접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黨의 이론과 실제의 연계, 군중과의 밀접한 연계, 비평과 자아비평의 우량한 작풍을 더욱 발양하고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강력한 역량이 되게끔 해야 한다. 현존하는 일부 영도간부의 以權謀私하고 군중의 이익을 해함으로서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문제에 중시해야 한다. 무산계급 정당의 역량과 작용은 주로 그 당원의 수량에 의하지 않고 당원의 질량에 의해 결정되며, 당 노선 집행에 대한 굳건함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한 충성에 의해 결정된다. 소수 부패 당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시키는 외에 절대 다수 당원에 대해서는 늘 교육을 실시해서 소질을 높여야 한다. 당은 공인계급의 선봉대이며 고도의 조직성과 기율성있는 대오이다. 반드시 당원의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당의 기율을 엄격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당원은 全心全意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일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생각해야 하며 당의 정책을 모범적으로 집행해야 한다.<sup>86)</sup>

이상과 같이 다방면에 걸친 정치개혁을 해야만 生産力을 발전시킬 수 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것이다. 그런데 정치체제의 개혁은 반드시 당의 영도하에 질서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鄧小平은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같은 큰 국가에서 수억인구의

85) 中國經濟年鑑, <1988>(北京:經濟管理出版社, 1988), PP. 1- 11-16 참조.

86) 中國經濟年鑑, <1988>, PP.1- 16-18 참조.

사상과 역량을 통일시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고도로 자각하고 기울있으며 희생정신이 충만한 당원으로 구성된, 인민 군중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단결 시킬수 있는 당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인민의 단결, 사회의 안정, 민주적인 발전, 국가의 통일등은 모두 당의 영도에 의존한다고 보았다.<sup>87)</sup> 이외에 정치체제 개혁은 반드시 안정단결의 조건하에서 질서있게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개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sup>88)</sup>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한 두차례의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개혁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대약진」과 같은 방법으로 民主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치체제의 개혁은 하나의 장기적인 임무이며 生産力を 발전시키는 가운데 그에 발맞추어 부단히 개혁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개혁은 급하게 해서는 안되고 심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鄧小平은 개혁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일체 유용한 것들을 학습해야 함을 지적했으나 학습시 그대로 모방해 들여오면 안되고 三權分立등을 실시해서는 中國國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sup>89)</sup>

## 2) 정치체제 개혁의 실천

정치체제 개혁의 조치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1980년 8월 鄧小平의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題下の 연설은 정치체제 개혁의 핵심인 당과 국가영도제도 개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술이다. 정치체제의 주요페단으로서 관료주의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현상, 家長制현상, 종신제 현상, 각양 각색의 특권 현상등 봉건주의 색채를 띤 페단을 지적하고 이의 제거야말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충분한 발휘를 가능케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1980.2월에는 중앙서기처를 회복하였고, 1982.9. 黨 第12大에서는 (1) 黨主席制를 黨總書記制로 바꾸고 黨主席과 副主席制를 없앴다. (2) 중앙과 省級에 顧問委員會와 紀律檢查委員會를 설치하고, 新黨章은 규정하길 黨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黨은 어떤 형식의 개인승배

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1979년 第5屆人大 2次會議에서는 革命委員會를 人民政府로 바꾸고 縣級이상의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常務委員會를 설립하기로 하고, 新憲法은 國家政權機構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했다. 즉 (1) 人民代表大會制度 강화 (2) 國家主席·副主席 회복 설립 (3) 中央軍享委員會 설립 (4) 國務院의 總理責任制 규정 (5) 중요 영도인의 重任 이상 불가등이 그것이다.

1982-84년 中央·국무원·각성·地·縣의 黨政機構의 개혁 즉 기구 간소화, 영도인의 조정, 1982년 국무원 부총리를 13명에서 2명으로 감소, 국무원 部委, 직속기구와 사무기구를 100개에서 61개로 합병, 총공작인 편제도 1/3로 감축, 1982.9. 黨 第12大에서 鄧小平은 (1) 기구개혁과 경제체제 개혁, 간부대오의 혁명화·년경화·지식화·전업화 실현 (2)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강조 (3) 경제영역 및 기타 영역내의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활동 타파 (4) 黨의 건설 강화, 黨의 작풍과 조직의 정돈에 대해 피력했다.

1982.11.26.-12.10. 五屆人大五次會議에서 <中華人民共和國憲法>이 통과되는데 신헌법은 「四項基本原則」 견지를 충지도사상으로 삼았고 경제건설을 中心으로 한다는 전략방침도 기입했으며 “一切權力은 人民에게 속한다”는 것과 공민은 법률앞에 一律 平等하다는 것을 다시 천명했다.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는 사회주의 公有制 형식임과 도시와 농촌의 個體經濟의 合法的 權益을 규정했다. 1983.10.11.-12. 黨 第12屆 2中全會는 <中共中央關於整黨的決定>을 통과시켜 1983년말부터 3년간 黨의 思想·作風·組織에 대해 전면적인 정돈을 가했

87) 鄧小平, 鄧小平文選, PP.300-301 참조.

88)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增訂本), P.156 참조.

89) 遲福林, 앞의 책, PP.15-18 참조.

다. 1987년 5월 전국의 整黨工作이 기본적으로 끝났는데 思想·作風·紀律·組織面에서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987.1.28. 中共中央은 <關於當前反對資產階級自由化若干問題的通告>를 내어보내 「자산계급 자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지도 방침·범위·중점·정책·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전후에 中國科技大學 副敎長 方勵之의 직무를 해제하고, 王若望(中國作家協會理事·上海作家協會理事)·方勵之·劉賓雁(人民日報記者·中國作家協會副主席)의 黨籍을 박탈했다. 그리고 5월이후 「자산계급 자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일단 끝났다.

1989.6.4. 천안문 사태 이후 趙紫陽 당총서기는 黨 第 13屆 4中全會(6.23.-24.)에서 動亂을 지지하고 당을 분열 시켰다는 책임을 지고 일체 직무에서 해임되었고, 정치국 위원이자 上海市委第1書記인 江澤民을 총서기로 선출했다. 1989.11.6.-9. 黨 第 13屆 5中全會에서 江澤民은 다시 鄧小平에 이어 중공중앙군사위원회회주석에 당선되고, 楊尚昆이 제 1부주석, 劉華清이 부주석, 楊白冰이 비서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부터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黨 第 3世代 領導集團이 시작 되었다.<sup>90</sup> 이번 5중전회에서 특별히 강조한 바는 각종 부패현상을 극복하고, 당과 인민군중의 혈육관계를 회복·발양시키며, 청렴한 정치(廉政)와 黨風 건설을 확고하게 강화 하겠다고 했다.

1990.12.25.-30. 中共 13屆 7중전회에서는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10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를 통과 시켰는데, 이미 앞에서 논급했듯이 경제효과를 크게 제고시켜 국민총생산액을 본세기 말에는 1980년의 4배를 달성해서 인민생활을 「小康水平」에 다다르게 하고 교육사업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며,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계획상품경제 및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결합한 경제체제와 운행기제를 초보적으로 건립시키는 외에,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 사회주의 민주 및 법제 건설을 진일보 견전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 <建議>에서는 全黨과 全人民이 長期間 행동의 안내자가 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건설 12條 원칙을 제기 했다는 점이 특색이다.<sup>91</sup>

1992.3.20. 李鵬은 第 7屆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5次會議<政府工作報告>에서 政治改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1)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와 대외개방의 확대, 현대화 건설의 발전에 따라 정부기구 개혁을 적극적이면서도 안정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각급 정부기구가 방대하고, 인원이 사무에 비해 많으며, 사무수속이 번잡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경제건설과 改革·開放에 수많은 불리한 영향이 생기고 있다. 이에대해 깊이 조사해서 政企分離·職能改革·精兵簡政·效率提高의 원칙에 따라 그 방안을 세우고 점차 실시토록 한다.

(2) 정부는 민주적이고도 과학적인 정책 결정체도와 절차를 건전히 하고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의 감독을 접수하며, 인민정협·각 민주당파·무당파 인사·인민단체의 정치협상과 민주적인 감독중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케 한다.

(3) 기층민주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기업의 민주적 관리제도와 거주민·촌민의 자치제도를 강화해서 사회주의 법제건설을 반드시 강화한다.

(4) 행정법규를 제정해서 행정·법률실시 활동을 개선하고, 그 감독기제를 완비한다.

(5) 法制선전 교육을 깊이 선전해서 국민의 법률의식을 높이며 각 공작을 法制체도에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6) 사회치안을 강화하며 매춘과 부녀·아동의 인신매매 및 마약흡연의 판매를 엄단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활동과 암흑사회 세력을 발본색원한다.

(7) 反부패투쟁을 깊이 전개하고 廉政건설을 강화한다. 즉 탐오·뇌물수수와 불법적 사업을 철저히 제거한다. 인민군중에 의지해서 각종 부패현상과 투쟁하고 인민군중·민주당파·인민단체·여론기관의 감독을 지지한다.

(8) 軍의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고 국방 현대화 건설을 강화한다.

(9)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각 민족평등·단결·호조의 원

90) 廖蓋隆, 앞의 책, PP.347-368 참조.

91) 앞의 책, P.374 참조.

칙을 견지하고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며 민족지구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소수 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전민족에 대해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적대세력의 민족분열 책동과 티베트의 독립 도모는 실패할 것이다.<sup>92)</sup>

#### 4.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통일이라고 보고있다.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은 인간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물질적 수요를 해결(인간의 물질생산의 진보와 물질생활의 개선)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은 인간의 끊임없이 높아가는 정신적 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교육·과학·문화지식의 발달과 사상·정치·이론·도덕수준의 제고)이며,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의 정신적인 동력이 되고 改革·開放정책의 순리적인 실현을 추동하며, 改革·開放중 출현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해서 사회주의가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는 정신적인 보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도 홀시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두가지 문명을 함께 움켜 쥐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상·문화·교육·과학·예술·언론·방송·박물관등을 발전시켜야 하며 애국주의·집체주의·사회주의 열정 발양과 독립·자력갱생의 방침을 견지하고 직업도덕과 사회공덕을 준수하도록 하여 형식주의·관료주의를 극복하며, 실제적인 기풍발양, 군중과의 밀접한 연계작용을 발양해서, 改革·開放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sup>93)</sup> 또한 광대한 간부군중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끈기있고 깊이있게 「四項基本原則」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영도자는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을 함께 움켜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방침을 견지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드높이며 세계 선진문명의 우수한 성과를 흡수한다. 광대한 문예공작자는 생활과 군중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서 인민군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신문과 출판·방송·영화·TV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성취를 반영해서 인민을 단결시키고 고무하며 교육하는 작용에 노력해야 한다.<sup>94)</sup>

또한 鄧小平은 말하길 중국은 右를 경계해야 하고 또 특히 “左”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左”의 사상은 주로 과거 마르크스주의의 일부 원칙이나 교조적인 이해, 혹은 과거 사회주의의 일부 非科學的이거나 완전히 왜곡된 인식에 머물러 있는것을 말하며, 또는 改革·開放前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뛰어넘는 不正確한 思想과 政策위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한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改革·開放의 정확한 정책을 잘 용납하려 하지 않으며 改革·開放을 마치 자본주의 도로를 향해 가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을 말한다. 또한 여전히 과거 「階級鬭爭爲綱」의 사상으로 「經濟建設爲中心」에 영향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려고 한다. 다른한편 右의 표현은 주로 「四項基本原則」을 회의하거나 부정하며 「資產階級自由化」를 부르짖고 심지어는 정치동란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제도와 改革·開放의 정확한 방향을 바꾸어 놓으려고 기도한다. 따라서 “左”이든 右이든 막론하고 당에 모두 거대한 해를 조성하고 사회주의를 매장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左”는 문제를 볼때 客觀實際에서 출발하지 않고 책이나 화석화된 개념에서 출발함으로써 實事求是의 원칙을 위반하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를 위반한다. “左”의 관점을 지닌 사람은 私營經濟의 발전과 外資導入을 바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자본주의 因素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연히 公有制經濟를 主體로 하되 多種經濟成分이 并存해야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은 세계 7%의 경지를 가지고 세계 1/5이상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95)</sup>

92) 人民日報, 1992. 4. 5. 「政府工作報告」 참조.

93) 姜華宜, 앞의 책, PP. 735-736 참조; 廖盖隆, 앞의 책, P. 358; 孫連成·梁初鴻, 中國特色的社會主義研究(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7), PP. 230-250 참조.

94) 人民日報, 1992. 4. 5. 「政府工作報告」 참조.

## 5. 開放政策 : 목표와 실천

대외개방은 대외무역·대외자금교류·대외기술교류·대외노무협력·관광사업·경제특구 개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基本國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개방은 생산의 세계화 추세와 치열해져가는 국제경쟁에 부응하는 정책이며 혼자 고립해서는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취한 정책이다.

그러나 대외개방은 서방 선진국에 종속되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독립자주·자력갱생의 방침을 견지하는 기초 위에서의 대외개방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개방은 독립자주·자력갱생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은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되 이를 소화해서 이용·발전시키자면 순전히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毛澤東도 일찌기 1956년 「외국에서 배우자」라는 구호를 제기한 바 있다. 즉 “우리의 방침은 일체민족, 일체국가의 장점을 모두 배워야 한다. 정치·경제·과학·기술·문학·예술의 일체 진정 좋은것은 모두 배워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반드시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배워야지 맹목적으로 배우거나 모방하거나 도입해도 안되며 그들의 단점·결점을 배워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한동안 문을닫고 지내게 된것이다. 그러던것이 鄧小平에 의해서 비로소 개방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경제특구의 개설과 연해 항구도시 및 地帶의 개방을 보면, 鄧小平은 경제특구(계획과 시장조절을 결합하되 시장조절을 위주로 함)를 기술·관리·지식·대외정책의 ‘창구’라고 했는데 그 경과를 보면, 1979.7. 第5屆人大2次會議에서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하고, 7.15. 中共中央과 國務院은 福建과 廣東 兩省에 특수정책을 실시해 많은 자주권을 주고 시험적으로 수출특구로 결정했다. 이처럼 1979년 대외개방의 기본정책을 확정한 후 몇 단계에 걸쳐서 시행했다. 즉, 제 1보는 1980년 8월, 5屆人大常委會 15次會議에서 광둥성·북건성에 처음 경제특구(深圳, 珠海, 汕頭, 廈門)를 설치하고, 〈廣東省經濟特區條例〉를 批准했다. 제 2보는 1984년 천진·상해·대련등 14개의 연해 항구도시를 개방하여 경제기술 개발구를 설립했으며,<sup>95)</sup> 제 3보는 경제 개방지구를 개척했는데 1985년 1월 長江三角洲·珠江三角洲·민남三角地畵를 개방했다.<sup>96)</sup> 1986년이래 계속해서 山東과 遼東半島를 개방

95) 人民日報, 1992. 6. 22. 高狄, 「增強貫徹執行黨的基本路線的自覺性」 참조.

96) 經濟特區의 특징은 (1) 特區를 발전시키자는 것은 주로 外國資本을 이용하자는 것이고 (2) 특구의 경제활동은 市場調節作用을 充分히 발휘해서 시장조절을 위주로 한다. (3) 특구에 투자한 外商은 출입국수속과 納稅등의 方面에서 특수한 우혜와 특수한 편리를 부여 받는다. (4) 중국정부가 특구에 상당히 많은 경제활동 자주권을 부여한다 등이다. 이처럼 經濟特區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행정구역인 반면, 經濟技術開發區는 단지 소재지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영도와 관할하에 많은 優惠政策을 실시하는 지구이다. 經濟特區는 종합성의 특구라면, 경제기술개발구는 신기술개발과 공업생산발전을 주로한다. 大連·秦皇島·上海·天津·烟台·青島·連云港·南通·寧波·溫州·廣州·福州·湛江·北海등 14個 沿海港口都市를 經濟技術開發區로 설치했다. 廖蓋隆, 앞의 책, PP. 354-355; 張克明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大辭典, P. 170 참조.

97) 長江三角洲經濟開放區는 上海·蘇州·杭州·寧波·無錫·常州·南通·紹興·嘉興·湖州등 10개의 도시와 그 주위의 군소도시마을 및 광대한 농촌이 포함되는데 후에 또 四省一市로 확대됐다. 즉 江蘇省·浙江省·安徽省·江西省과 上海市가 그것이다. 珠江三角洲開放區는 廣州·佛山·江門·深·珠海등 5개 市와 그 주위의 군소도시마을과 농촌이 포함된다. 南三角洲開放區는 廈門·泉州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네번째 經濟開放地帶- 渤海灣經濟圈을 건설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10여개 沿海도시를 주체로 하고, 北京市·遼寧省·河北省·山東省에 의지하고, 東北·華北·西北·華中의 一部地畵를 復地로 하며, 5개의 경제 기술 개발구를 「窗口」로 한 中國北方의 獨特한 特色을 띤 綜合經濟區이다. 張克明主

했고 1988년에는 최대의 海南省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sup>98)</sup> 또한 북방을 중심으로 한 발해만 경제권(경제 개방지대)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튼 이들 지역은 많은 경영 자부권을 가지고 시장경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으며 자금·기술·지식시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력 강생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경제특구·연해 개방도시·연해 경제 개방지구로 구성되는 전체 연해 개방지대에 288개의 市와 縣이 포함되어 크게 확대되었고 1억 6천만의 인구와 32만 Km<sup>2</sup>를 포괄하게 되었다.<sup>99)</sup> 또 한편 新疆自治區에도 대외개방에 대한 우대 조치를 취하기로 국무원이 결정했고<sup>100)</sup>, 河北省唐山市에 華北地方에서는 처음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려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sup>101)</sup> 아무튼 중국 개방정책의 발전양식을 보면 소->대, 점->면, 남->북, 연해->내지의 방침을 제정,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연해경제개방지구->내지'로의 발전 모습과 150여개 이상의 국가와 교류를 갖는 개방형 경제로 전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외개방과 문화교류중 들어오는 소위 자산계급의 부패한 사상문화·생활방식은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로 막고,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며 적대세력의 「和平演變」을 막도록 힘쓴다. 90년대에는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더욱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출입 체계의 합리적 조정, 외자의 효과적인 이용, 무역과 외환관리체계의 개혁, 연해지구경제발전전략의 집행, 수출 주도형 경제의 적극적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sup>102)</sup> 한편 中國大陸과 대만의 경제협력은 1987년 대만의 대륙진출이 시작되면서 본격화 되는데 대만의 대륙투자 급증 추세와 중국대륙의 대외개방정책의 심화로 대만의 대륙 투자는 1990년 한해 1,117건, 계약 금액 9억 8,400만\$로 미국을 능가하며 1990년말까지 누계로는 2,220건에 20억\$에 이른다. 이는 대만 해외 투자 총액의 21.5%를 점한다. 무역도 91년 1월-11월 사이에 홍콩을 통해 이루어진 무역액도 전년 동기 대비 41%가 늘어난 51.5억\$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대륙 경제무역 협력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앞으로 중국 남부를 포함시켜 경제협력 지역권인 「華南 經濟圈」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 대해 볼것 같으면, 중국 대륙의 개방 정책과 아국의 1988년 「7.7」선언에 의한 北方政策이 맞물려 한-중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1991년 1월과 4월에는 상호 무역대표부가 北京과 서울에 개설되어 접촉이 더욱 밀접해지다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로 인해 양국간에 본격적인 우호-협력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무역 거래량도 1986년에는 13억\$에 불과했으나 1990년 38억 2,100만\$(대만과는 27억 100만\$), 1991년에는 58억 1,200만\$(대만과는 31억 2,400만\$), 1992년 1-6월 홍콩을 경유한 간접무역을 포함 37억 9,500만\$로 작년 동기 대비 48.4%증가(대만과는 17억 8,600만\$)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서로간에 제 3위 무역대상국으로 급부상(대만은 제 10위)했고, 1992년도 한-중간의 무역거래량도 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직접투자를 보면 89년 이전 중국에 대한 투자는 14건에 1,300만\$, 90년에는 38건에 5,400만\$, 91년 112건에 8,500만\$로 총 272건에 2억 3,7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또한 증가추세 일로에 있다.<sup>104)</sup> 그리고 현재 하북성천진과 산둥성威海에는 한국 전용공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 공업단지에 섬유류, 전자제품등을 생산할 150여개 한국 독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미 200여개사가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한국 경제기획원은

編, 앞의 책, P.170 참조.

98) 「廣角鏡」, 香港, 1992.1.16. 232호, PP.66-69; 張克明主編, 앞의 책, P.170 참조.

99) 廖蓋隆, 앞의 책, P.355 참조; 丁禎彥等主編, 中國特色社會主義概論(南寧:廣西教育出版社, 1988), P.162 참조; 張克明主編, 앞의 책, P.170참조.

100) 人民日報, 1992.7.5.

101) 中華民國·中國時報, 1992.7.20.

102) 廖蓋隆, 앞의 책, P.355 참조.

103) 現代經濟社會研究院, 中國 政治·經濟의 懸案과 展望(서울: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2), PP.123-125, 162 참조.

104) 國民日報, 1992.8.25

1992. 8. 3. 천진에 1.3km<sup>2</sup>(39만 3천평)규모의 토지를 50년간 장기임차하여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키로 최종 확정했다.<sup>105)</sup> 그리고 1991년 5월말 한국의 중국 투자건수는 96건이고 투자액은 1억 4백만\$ (소련은 7건에 2천만\$, 동구는 6건에 5천만\$ )인데 대부분 제조업이다. 또 위해-인천, 천진-인천간에 정기 여객선이 개설되어 동북삼성의 조선족과의 사업연계가 활발하며 앞으로 「黃海經濟圈」이 형성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도 西海岸 경제개발 계획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기술 집약적 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또 한편 UNDP의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에 중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측도 동북아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서 중국·러시아·일본과는 물론 남북한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할것이다.<sup>106)</sup>

## 6. 개혁·개방의 효과

14년째 계속되는 改革·開放정책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저한 개선과 새로운 활력을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小康水平」에 들어서고 있으며 농민과 공인의 생산 적극성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 (1) 농촌가정 생산 책임제 (2) 공장장(기업경영자)생산 책임제 (3)공유제를 주체로한 다종의 경제성분 병존·발전 (4)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결합 (5) 일부 성실한 노동과 합법경영에 의한 먼저 부자가 되는것을 허락 (6) 노동에 따른 분배 (7) 경제연합 (8) 경제특구와 연해지구경제발전전략등이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고, 「정치체제개혁」으로는 (1) 黨·政 분리 (2) 법제의 정비 (3) 정책결정의 민주화와 과학화 (4) 당의 지식인 정책강화 (5) 공산당 영도하의 多黨合作과 政治協商制度의 정착화 (6) 「一國兩制」의 방침 (7) 독립자주 외교정책등등의 방침수립과 이행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

위와같은 정책의 추진결과 여러 어려운 점도 많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80년대에는 GNP가 년평균 9.6% 성장했고(1953 - 1978년 평균 6.1% 성장), 1991년 GNP는 1978년의 4배 증가를 기록했고, 1991년 GNP 7% 성장, 농업은 홍수에도 불구하고 3% 성장, 공업은 14.2% 성장, 전민소유제기업(공업) 8.4%성장, 전민소유제공업 중산치가 전공업 중산치에서 접하는 비율이 37.8%에서 43.1%로 증대됐고, 집체소유제공업은 18%성장, 개체공업은 24%, 「三資」공업 55.8%, 大·中·小 企業생산이 9.2% 성장했다. 1991년 무역거래총액 1,357억\$(전년도 대비 17.7% 증가, 수출 719억\$, 수입 638억\$, 전년대 동등한 흑자 81억\$, 1978년 206억\$의 6.6배 증가), 1991년 9월말 외환보유고는400억\$이다. 1991년 한국의 무역거래 총액은 1,534억 5,500만\$로 중국보다 앞서나, 수출 718억 9,800만\$, 수입 815억 5,700만\$로 무역적자가 96억 6,000만\$에 이르고 수출면에서는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다. 또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의 금년 수출 전망에서도 한국이 810억\$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870억\$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이 한국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中華民國(台灣) 中華經濟研究員도 中國兩岸의 국제 무역 경쟁에 있어 대륙은 이미 대만을 추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일본·홍콩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대륙은 큰 폭으로 성장했으나 대만은 정체하고 있으니 정부와 업계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실례를 들고 있다.<sup>107)</sup> 즉 1991년도 대륙 수출은 719억\$(15.9%성장)이고, 대만은 761\$(13.3%성장)으로 비록 앞서기는 했으나, 美國에 대한 수출면에서 대만은 229억\$로서 성장률이 1.7%이고 對美 시장 점유율은 4.7%로서 성장률이 2.2%에 불과하나, 대륙은 188억\$로 뒤지기는 하나 성장율은 24.7%, 對美 시장 점유율은 3.9%이지만 성장율은 무려 25.8%라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日本에 대한 수출면에서는 대만이 95억\$로 성장율은 11.8%이고, 對日本 시장 점유율은 4%로서 11.1%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대륙은 119억\$로 이미

105) 大田日報, 1992. 8. 4.

106) 現代經濟社會研究院, 앞의 책, PP.146-167 참조.

107) 中華民國, 中國時報, 1992. 7. 20.



앞서있고 성장율도 18.9%이며, 對日本 시장 점유율도 6%로서 17.6%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순수히 홍콩에 대한 수출도 볼것 같으면, 대만은 42억\$에 18.6%의 성장률을 보이고, 시장 점유율은 4.2%로서 -2.3%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대륙은 198억\$로 22.8%의 성장율을 보이고, 對홍콩시장 점유율도 24.3%를 차지하며 성장율은 0.8%에 머무르고 있다. 美國·日本·홍콩 전체를 놓고 볼때 대륙의 성장속도가 이미 대만의 성장 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만의 중앙경제연구원의 경고가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대륙의 1978년-1989년 수출 비율의 변화는 농업산품 27.6%→15.2%, 경공업 산품 46.9%→52.9%, 중공업 산품 25.5%→31.9%로의 변화, 1991년 관광수입 28.4억\$(28.3% 증가), 관광방문객 3,336만명(21.5%증가). 외자이용에 있어서 1991년 신규협정 178억\$(전년도 대비 47.6%증가), 1991년말까지 등록된 中外合資·中外合作·外商獨資의 「三資」기업 총수 37,215개, 등록자금 460억\$(이중 外商獨資 262억\$), 1991년 새로이 증가된 外商獨資企業은 12,000여개, 外商直接投資協識金額 120억\$, 실제 투자는 43.7억\$이며 수많은 大型合作品目에 서명했다. 1991년 전국 도시주민 1인당 연간 평균 수입 1,570원(실질성장 7.7%, 1978년 383원의 4배성장), 농촌 주민 1인당 평균수입 710원(실질성장 2%, 1978년 133.6원의 5.3배 성장), 저축은 1991년 29.5% 증가했으며 저축 총액은 9,110억원으로 1978년 210.6억원의 42배 증가, 인민의 주거 조건도 어느정도 개선되고, 사회복지사업·보험사업도 발전하고 있다.<sup>108</sup> 이처럼 중국 대륙은 비약적인 발전에 고무되어 1990.12.30. 黨 第 13屆 7中全會에서 통과된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八五”計劃的建議>에서 정한 2000년까지 10년동안 매년 국민 총생산액의 성장율 6%로 10%로 대폭 증가 시키기로 했다고 國務院 發言人 袁木이 7월 16일 발표한바 있다.<sup>109</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특기할만한 사항은 개체경제와 사영경제의 눈부신 발전이다.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전민소유제(국영기업)와 집체소유제등 公有制 경제에 필요하고도 유익한 「보충」이 되고있다. 1978-1990년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발달로 인해 2,300만명의 종업원이 증가, 취업의 문이 그만큼 더 넓어졌고, 인민생활이 편리, 「鐵飯碗」(쇠 밥그릇: 종신 고용제)의 타파, 활발한 시장의 유통형성, 사회생산력의 발전, 재정수입의 증대, 서비스의 개선, 선진 기술도입, 경영관리방식 개선, 상품경제 관념의 전파등 상품경제 발전에 유익한 작용을 가져왔다.

1990년 개체경제업체가 1,300만개, 사영경제기업이 20만개에 이르고 개체경제업체의 등록자금이 400억원,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에 이르며, 한편 사영경제업체의 등록자금은 95억 원, 연간 매출액이 173억 원이고, 한업체의 평균 종업원은 15명이다.<sup>110</sup>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업체도 이미 수십개나 된다.

## VI. 改革·開放에 있어서의 問題點

108) 人民日報, 1992.2.29.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關於1991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的統計公報」 참조.

109) 中國時報, 1992.7.17 ; 人民日報, 1991.1.29 참조.

110) 人民日報, 1992.6.1. 第 5版, 「不可忽視的第三種力量」 참조.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1980년대 발전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 되었다. 개체경제는 단독 또는 소수인으로 구성된 업체로서 「家庭式」경영 단위이며, 그 종류는 소상업, 음식업, 수공업, 서비스업, 수리업, 양식업, 종식업(농부산물), 교통운수업, 건축업, 문화오락, 과학기술 개발, 정보자료, 미술실내 장식, 광고설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사회상품판매 총액의 18.9%, 전국공업 총생산액의 5.39%를 점한다. 사영경제는 「社會性」을 띤 단독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종업원이 십수명에서 수백명에 이르고, 상품생산, 상업, 서비스업, 과학기술 영역등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모두 사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빠르게해서 경제건설을 한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면 실시 할수록 장차 「和平演變」의 근심과 「保守派」(“左”)의 저항이 상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개혁·개방해서 서방식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資產階級自由化」를 주장하는 右翼세력들 사이에서 어떻게 “左”와 右를 극복해 나가느냐하는 어려움이 있다. 鄧小平을 위시한 「改革派」는 右에 대해서는 「四項基本原則」의 견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면 특히 “左”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을 잘해야만 인민생활이 개선되고, 그래야만 「사회주의 우월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공정권이 「和平演變」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서 반박하고 있다. 즉, 「改革派」는 경제건설을 우선적인 임무(「以經濟建設爲中心」)로 보아 이 「中心」을 떠나면 국가에 損이 있고 인민에게 害가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保守派」는 黨의 思想建設을 우선(「以黨的思想建設爲中心」)으로 보고 이를통해 黨의 政治地位를 강화해 나가야 「和平演變」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黨內에는 「두개의 중심론」(「兩個中心論」)이 존재하며 투쟁을 벌리고 있다.

「保守派」는 시종 「개혁파」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조치들-농민에게 分田, 外資도입을 통한 개발, 經濟特區 건설, 기업의 株式制, 증권시장의 설립, 「破産法」제정 및 실시등등이 모두 자본주의 도로를 걸으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파」가 주장하는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와 같은것은 아니다」,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와 같은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로서 여하히 「보수파」를 설득하느냐가 주요한 문제이다. 「개혁파」는 담대하게 시장경제요소 혹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경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파」는 그렇게 하다가는 중국의 경제를 완전한 시장경제의 궤도에 끌어 올려놓아 사회주의 성질을 바꾸어 놓고 자본주의 체제로 향하게 할것이며 西方大國의 종속국이 되게하고 말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個體經濟와 私營經濟의 발전도 私有化로 서서히 향해가는 한 주요한 요소로 보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된 교조주의적 사상으로부터의 「解放」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개혁파」는 보고있다.<sup>111)</sup>

둘째, 國營企業의 「三鐵」,<sup>112)</sup> 「大鍋飯」(대과반:큰 숯밥)먹기현상이 극복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보고있다. 즉, 중국의 國營大中型企業의 상당히 많은 직원 가정에서는 夫婦 두사람중 한사람은 非公有制 經濟部門인 자본주의 업종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다른 한사람은 公有制部門에 남아서 일함으로써 능력이 없어도 큰 과오가 없는한 全家族이 사회주의의 일체의 福利 즉, 거주·정년퇴직·보험 및 각종 福利혜택을 무조건 받게하는 「大鍋飯」현상을 어떻게 하든 打破코자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打破조치가 수많은 도시 근로자에게 불만과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sup>113)</sup>

셋째, 각종기관에 「大鍋飯」큰숯밥 먹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필요없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사람을 위해 직위를 만들거나 기관을 만드는 현상이 黨·政뿐만 아니라 각종 工人團體·군중단체에 많다. 일단 政治體制改革이 진행되면 자연히 이들의 기득이익에 영향을 주게되고, 따라서 적지않은 간부들은 개혁·개방의 심화이후 그들의 기득이익 상실을 걱정한다. 따라서 최고 영도자들이 정치체제 개혁을 계속 강조해도 그 조치가 잘 눈에 띠지 않는다.<sup>114)</sup>

111) 吳安家, 「中共加強宣傳『鄧小平路線』之背景·內函與阻力」, 中國大陸研究, 民國 81年 4月, 第 35卷 第 4期, PP.12-13.; 「爭鳴」, NO.172, 1992年 2月號, PP.6-12 참조.

112) 三鐵은 (1) 鐵飯碗: 「최밥그릇」으로 능력여부를 떠나서 犯法하지 않는한 정년퇴직때까지 직장의 평생고용 확보를 뜻하고, (2) 鐵交椅: 「최의자」로 간부의 계속적인 승진확보 (3) 鐵工資: 「최봉급」으로 고정임금 확보를 뜻한다. 즉, 직장인은 평생 큰 과오가 없는한 이상 세가지가 기업에 의해 보장되고 기업은 또 국가에 의해 보장됨으로써 간부와 직공들은 두더지처럼 「大鍋飯」(큰숯밥)을 함께 파먹기만 하고 일은 하지않는 나태함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缺損을 발생케한다는 것이다.

113) 吳安家, P.13.

114) 吳安家, P.14.

네째, 黨·政 간부들의 特權을 여하히 배제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1989.7.27-28. 中央政治局全體會議에서는 「6.4.天安門 事態 이후 黨·政 자체의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 했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중국이 봉착한 문제점이기도 한 것이다. (1) 유통영역(상업, 외국 무역, 물자공급등)에 지나치게 많은 公司들을 정리할것 (2) 고급간부 子弟들의 상업행위 극력엄금. 고급간부의 배우자 또는 子女의 배우자는 유통영역에서 즉각 경영활동을 금지하고 그 직책·겸직 등에서 퇴출할것 (3) 영도자는 그 직권을 이용해서 친지의 상업활동에 어떤 편의제공하는 행위를 엄금할것 (4) 간부에게 주어지던 식품의 「특별공급」을 취소 (5) 택시 수입 금지와 고급간부의 국산차 이용 (6) 공급으로 손님접대와 예물 증정하는 행위 엄금 (7) 탐오, 뇌물수수, 부기등 각종범죄의 엄격한 조사와 조치등이다.」<sup>115)</sup>

이러한 조치들이 바로 중국의 오늘날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부들의 形式主義, 官僚主義 극복을 위해 鄧小平은 실질적인 일을해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空談하지 말며 實效를 거둘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sup>116)</sup>

여섯째, 개혁·개방과 더불어 확산되고 있는 극단적인 個人主義, 拜金主義, 無政府主義, 외 국승배사상 및 각종 불량한 기풍에 반대하는 정신문명 건설강화와 당의 사상건설도 중요한 문제이라고 보고있다.

일곱째, 「治理整頓」(1988.9.-1991.11.)기간중 극복해야 했던 각종 문제점을 앞으로도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고있다. 즉, 통화팽창을 억제, 財政收支 균형, 國營大·中·小企業의 경영방식 개선등을 포함한 產業構造의 不合理性 개선, 적정선의 경제성장을 유지, 주요 농산품의 중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을 결합한 원칙에 부합하는 경제·행정·법률수단을 운용하는 거시적 조종체계의 건립, 또 「치리정돈」기간이든 아니든 지속·안정·균형적인 경제 발전의 견지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up>117)</sup>

여덟째, 社會心理面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義」와 「利」의 문제가 있다.

옛부터 中國에는 「君子는 義를 重視하고, 小人은 利를 重視한다」는 말이 있어왔는데 이것이 자연 「重義輕利」의 전통을 형성해왔다. 이런 전통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78년 개혁·개방과 더불어 社會心理面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즉 그 이전 과거에는 「重義輕利」, 또는 「舍利取義」를 인민이 배워야만 할 德目으로 삼았었으나 이제는 「重義」, 「重利」를 다같이 배워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어떤때는 「重利輕義」 또는 「見利忘義」의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농촌이든 도시이든 「利」에 눈이 벌개지는 「紅眼病」을 앓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80年代 이후에 형성된 실리적인 모델과 과거의 이념적인 모델앞에서 중국인민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다수는 입으로는 여전히 「義」를 찬양하고 있으나 행동면에서는 「利」를 추구하는 心理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으로 한편 「義」를 존중함으로써 인민을 멍치게 하는 「웅집력」을 잃지 말아야 할것이고 또한편으로는 「利」도 존중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추동력」을 끌어내도록 해야 할텐데 그러면 이 兩者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가야 하느냐도 개혁·개방에서 봉착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利」의 추구가 바로 「義」가 되게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法制를 통해 각종 개인적인 「利」를 올바르게 보장해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시대에서 이를 「義」의 웅집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것으로 본다.<sup>118)</sup>

이상 간단히 개혁·개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 VII. 결론

115) 姜華宜主編, PP. 827-829.

116) 吳安家, P. 12; 姜華宜主編, PP. 825-826. 「全國宣傳部長會議」(1989.7.17.-21.) 참조.

117) 姜華宜主編, PP. 795-798. 「黨 13屆 3中全會」(1988.9.26.-30.) 참조.

118) 李勇鋒, 變革中的文化心態(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88), PP. 103-120 참조.

1992. 9. 16. <世界銀行>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도는 세계경제와 무역성장이 완만하거나 후퇴한데 비해 동아시아와 중국의 경제발전은 강력한바 있고, 특히 中國의 개혁은 가장 오래 지속되면서도 또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 것이 보도되었다.

1978년 이후「鄧小平路線」으로 일컬어지는「中國特色的 社會主義」建設을 위해 시작한 改革·開放政策을 둘러싸고 그간 많은 內部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인민의 지지와 옹호속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는 돌이킬수 없는 방향을 잡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는 중국역사에 기록될만한 경제발전의 黃金期요 개혁·개방의 黃金期라고 볼수있으며 毛澤東時代와 완전히 획을 긋는 새로운 章을 연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大轉換, 大變動, 商品生産의 大發展을 가져왔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하나의 큰「試驗」이며 人類文明史에 있어 새로운, 탄력적이면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公有制와 計劃經濟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私所有制와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해 가고있는 소련·동구의 변혁을 보고 中國은 그들이 실패한 주요원인은 바로 인민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衣食住 문제 해결을 위한「經濟建設」의 실패에 있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改革·開放에 대한 결심을 더욱 심화시켰고, 경제건설을 잘해야만 비로소 사회주의 中國에 전도가 있다고 확고히 믿게 되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생산력을 해방하여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주의가 창조해낸 유용한 것들은 적극 계승하고 또 創新하여「中國特色的 社會主義」를 튼튼히 건설할것을 주장하면서 이를위한 理論과 實踐開發에 힘을 쏟고있다.

그러나 이 理論들의 論旨는「하나의 중심과 두개의 기본방침」(「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992. 10. 12. 개막된 黨 14次 全國代表大會에서도「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되, 동시에「개혁·개방」과「4항기본원칙」의 견지라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단호히 추진할 인재들의 선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 알수있기 때문이다. 즉 1992. 9. 23. 人民日報 보도에 의하면, 黨 14大는 鄧小平의「中國特色的 社會主義」建設理論을 지도로 하여 黨 11屆 3中全會 이래 14년간의 實踐經驗을 성실하게 개괄하고 금후의 전략을 확정하며, 全黨員과 全國各民族人民을 동원, 진일보 思想을 해방하고 최근의 有利한 時期를 장악, 改革·開放과 現代化의 발걸음을 빠르게 할것이며, 장차「中國特色的 社會主義」건설사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또 새로운 中央領導機關에 德才兼備하고 年富力強한 中靑年幹部를 대거 진출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서 알수있는 바이다. 바로 이와같은 論旨는 黨 14大가 鄧小平 생애의 마지막 大會가 될 가능성이 큰만큼 鄧은 그가 친히 선발한 江澤民的 영도지위를 공고히하여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할수 있도록「개혁파」의 인사배치에 노력할 것이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튼 鄧이 주도한 개혁·개방은 장단기에 걸쳐“左”右의 파도를 헤치면서 동시에「放」과「收」를 번갈아 사용하는 정책상의 기복을 통하면서도 대체로 全黨과 全國人民의 思想統一과 行動統一 下에 中國經濟發展에 지대한 도움을 줄것이고 人民生活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한 國力의 신장은 소련·동구몰락후 그들과는 달리 세계 사회주의 건설운동에 있어 어떤 새로운「모델」을 제시하게도 될 것같고, 세계의 세력판도 변화에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1992. 10. 16.)

韓國國際政治學會 湖南支會 學術會議

## 北韓社會의 變化와 그 問題

崔 泳 瑄  
(전남대학교)

韓國國際政治學會  
1992년 10월 23일—24일 (금. 토)



# 북한 사회의 변화와 그 문제

전남대학교 최영관

## 목 차

1. 서 론
2. 북한 체제변화에 따른 몇가지 인식
  - 1). 체제변화에 대한 인식
  - 2). 북한 체제의 일반적 특성
  - 3). 북한체제 위기 요인들
    - (1). 주체사상이 갖는 요인
    - (2). 정치권력 구조가 갖는 요인
    - (3). 국제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주는 요인
    - (4). 경제문제에서 오는 요인
    - (5). 사회 문제가 안고있는 요인
3. 북한 체제변화 전망
  - 1).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
    - (1). 소련형 변화
    - (2). 동구형 변화요인
    - (3). 중국형 변화요인
  - 2). 북한 체제변화 가능성
    - (1). 주체사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 (2). 정치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 (a). 북한권력 구조의 현황
      - (b). 권력구조의 변화 가능성
    - (3).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의 문제
      - (a). 북한의 경제 현황
      - (b). 경제체제 변화 가능성
4. 결 론

## 1. 序 論

2천년대를 맞이하는 오늘의 세계적 시대 상황은 국제적으로 두 가지면에서 큰 변혁을 보이고있다. 그 하나는 구 소련을 중심으로하는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냉전체제 극복을 통한 신세계질서의 등장이라고 할수있다. 결국 이 두가지의 변화는 모두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서 나타난 국제질서의 변혁인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은 그 동안 몇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이룩되었는데, 첫째 수십년간 유지 해온 사회주의 체제를 일시에 전적으로 버리고 자본주의 진영에 흡수되거나 자본주의를 완전히 수용한 경우이다. 동독과 구 소련과 루마니아 등이 여기에 속한 사례이다. 둘째는 사회주의체제를 버리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새로운 노선을 찾고자 사회주의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구조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주로 경제분야에서의 변혁으로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혹은 시장사회주의의 시도를 경주한 경우로 동구의 헝거리, 폴란드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째는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동승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체 체제유지를 위한 부분적 경제개혁을 통한 체제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인 바, 중국과 북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국가체제로서 적실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없이 전체주의적 체제 강화 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존속 유지되기는 어렵 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볼때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 즉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의 체제변화 가능성과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되는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2차대전 후에 나타난 사회주의 체제 수용 국가 이지만 사회주의 수용 과정에서나 국가설립 과정에서 그 배경이 서로 다르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가 그 사회의 지도적 집단이나 토착적 인민의 지지에 토대하여 反帝國主義 민족해방 운동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 국가 건설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戰後 수립된 蘇軍政廳에 의한 일종의 사회주의적 패권과정에서 거의 인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빚어진 소비에트화 었다는데 그 성격의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곧 북한의 사회주의가 그 시작 부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수없는 특이한 성격과 상황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더우기 북한체제는 '50년대 중반이후 중.소 이념분쟁이 심화 되면서 '주체'라는 통치이념을 창안 독자적 이면서도 폐쇄적인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강화 해 왔고 '85년 부터 본격화된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변혁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을 완전히 변혁 시켜 놓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회주의 체제가 변했고 아직 남은 사



회주의 체제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 할것임이 틀림없다.북한 체제역시 예외는 아닐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체제변화를 전망해보고 이에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 하는데 있다.체제변화 분석 방법에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른 접근이 있을수 있다.그러나 여기서는 이미 체제변화를 이룩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통성을 토대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변화 전망과 그 저해 요인들을 찾아 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몇가지 인식

### 1). 체제변화에 대한 이해

북한체제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인식함에 있어서는 그 인식의 기본적 준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사회 또는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 이론을 들수있다.기능주의 이론은 體制內 變化(change within the system) 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갈등 이론은 體制的變化(change of the system)를 강조한다.다시말하면 기능주의는 체제의 각 부분이 전체 체제에 기능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가 갑자기 변화 할 수 없으며 변화 할때는 점진적 진화 방법으로 변화 한다고 본다.이에 반해 갈등이론은 사회의 각 집단이 지배와 억압의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갈등집단의 감정적 폭발과 조직화의 능력에 따라 변화가 매우 격렬하게 혁명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파슨즈(Talcott Parsons)는 체제의 변화와 체제내의 변화를 명확히 구분 하는것이 특정 사회체제 분석에서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 코저(Lewis A. Coser)에 의하면 체제변화는 체제내의 하위 체제 변화가 누적됨으로서 발생하며, 즉 특정 체제가 갈등의 자체 조절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기존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대두 된다는 것이다.<sup>1)</sup>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점진적인 체제내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혁명적 변화를 초래 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즉 체제내 변화가 잠간이고 곧 체제의 변화로 연결 된 경우인 바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폐쇄적 속성에서 온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체제 변화에 대한 개념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치구조의 변화,경제구조의 변화,그리고 사회통제 수단의 변화로 크게 대별하여 설명된다.그러나 사회주의 체

---

1)Lewis A. Coser," Social conflict and the theory of social change," in Amitai Etzioni and Eva Etzioni-Halevy(eds.),op.cit., pp.114-122.

제변화 패턴에는 공식적인 정치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하나 더 첨가되어 분석 되어  
 져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치구조의 변화란, 1인독  
 재자의 지배로부터 집단지도체제(과두정치)로의 변화, 여기서 다시 政治的 多元化  
 (political pluralism)構造로 변화 하는것을 뜻하며,경제적 구조의 변화에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및 관리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로, 여기서 다시 시장사회주의  
 (market socialism)경제체제로 변화 하는 것이며, 사회통제 수단의 변화로서는 정치테  
 러의 높은 의존도에서 낮은 의존도로 변화 하면서 물질적 자극 방식(이윤 자극 방식)  
 을 배합하는 채찍(강제력)과 사탕무(이윤동기, 생활수준향상 등)를 병용하는 경우들로  
 설명된다.<sup>2)</sup> 특히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 과정이 다양하듯 각각  
 서로다른 독특한 다양성을 지니면서 변화를 하였지만 분명한것은 理想郷 추구의 정치  
 이념(紅) 과 현실문제 해결 指向 이념(專)의 대립 갈등 속에서 실용적 이념으로의 變  
 化移行이 일반적인 것으로 설명된다.그러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반듯이 이러  
 한 數順을 밟으며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舊 蘇聯을 중심으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난날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내 변화 속에서 혁명적 변화로 체제변화를 하였던 가 하  
 ㄱ 중국,북한 ,쿠바, 등은 오히려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非政治的 분야는 변화를 추구  
 하면서도 정치적 분야는 오히려 방어적 이고 폐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북한  
 은 정치발전(정치적 통제나 1인집권의 완화)이나 경제발전(시장경제의 채택)등을 ‘수  
 정주의’로 공격 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자기 방어장치(defensive mechanism)를 강화 하  
 고 있다. 이른바 1989년 이후부터 강조된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그것  
 이라 할 수 있다

## 2).북한 체제의 일반적 특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체제 형성과정의 토착적 인민의 지지와 의지에 의해 이룩  
 된것이 아니고 外勢에 의하여 소비에트화 되었기 때문에 중국,쿠바와는 사뭇 다른 특  
 성을 갖게되었다.이러한 특성들의 일반성을 요약하면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것  
 이다.

첫째,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생성과정에서 인민적 지지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한 全體主義의이고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북한 사회주의는 체제는 경쟁의 핵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戰  
 時統制的 성격을 鑄造로 하는 대외적 대결성이 전면에 부각 되었다.

2)김갑철외, 북한학 개론(서울:문우사,1990), p.451.

셋째,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도 가장 前衛的인 위치를 차지하여야 할 국제 관계적 위치 때문에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 체제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넷째,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혁명과 재편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당면성으로 인하여 강압적 경찰체제로 지향할 수 밖에 없었다.<sup>3)</sup>

결국 이러한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근원적 특수성이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등諸 體制 全分野에 철저히 적용 되므로서 북한사회를 오늘날과 같은 動員體制的 전체주의 사회로 폐쇄화 하였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근원적 특수성 토대위에 '50년대 중반 부터 표방된 주체사상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함께 이념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金日成主義 확립과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神政體制를 구축 하였다고 본다.

정치 체제 형성에서 지배적 이념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의해 사회변화가 대체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배이념은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중요한 정책 변화에 앞서 반드시 이념체계의 변화가 선행하여 인민대중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중국이 1979년 이후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개혁을 추진할때 專.紅의 노선 논쟁에서 專 중심의 이념 수정 선택이나, 소련의 스탈린에 의한 一國社會主義 이념노선의 선택에서 오는 체제 변화나, 고르바초프가 제창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이념은 새로운 단계로의 체제 변화를 위해 선행되었던 이념 변화로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 3). 북한체제 위기 요인들

북한체제가 주체 이념에 의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여도 오늘날의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은 여러면에서 변화를 촉발케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것은 舊 蘇聯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붕괴에서 오는 영향뿐만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에 직면한 현실적 위기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서 나타난 북한체제 변화 위기 요인들을 지적해보면,

#### (1). 주체사상이 갖는 요인

첫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主體思想의 문제이다. 북한체제는 현행 사회주의 헌법 제1

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 전망 (서울:1992), p.2.

장 제 4조에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제 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천명하므로써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상의 “지도적 지침”으로 주체사상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 북한사회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改造 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黨 과 國家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준거 틀 이 되고 있으며 북한 인민대중의 행동과 사고 방식에 이르기까지 全一的인 규정력을 행사 하고 있다. 그 단적인 근거로서 주체사상의 체계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남조선혁명 과 조국통일, 세계혁명,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을 포함하여 북한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핵심적 영역을 모두 포괄 해내는 “全一的 思想體制”로 구성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동원 이데올로기로서, 金日成 1人體制의 합리 논리로서, 그리고 대남 혁명노선의 논리로서 그간 작용된 주체이념은 북한체제에 긍정적 효과 만큼이나 이제는 변화 위기 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정치권력 구조가 갖는 요인

둘째 政治 權力構造의 문제이다. 우선 권력구조 형성의 경직적 독점성을 논의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권력구조는 주체사상의 혁명 전통성에 따른 일종의 세습적 지배체제를 구축 하고 있다. 이러한 族閥體制의 권력구조는 그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한계성, 즉 일반 인민대중과의 단결성을 심화시킬 가능성 때문에 권력의 변동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를 유지해 주는 주요 세력들인 官僚集團과 軍高級 幹部와 일반 인민대중간의 부이지 않는 불평등적 알룩이 변화 위기 요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변화 하는 것이다.

## (3). 국제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주는 요인

셋째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변화 위기의 문제이다. 세계 냉전구조의 산물인 북한 체제는 탈냉전의 신세계질서의 국제관계에서는 더이상 협력의 기반을 상실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붕괴해버린 사회주의 체제로 부터 이제는 지원군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혈맹관계에서 상호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소련의 붕괴는 50년대 이후 굳게 유지해온 朝·蘇間의 동맹관계가 폐기되었고, 동구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변화는 맹방관계를 상실한 채 북한의 고립화를 재촉하였으며 그리고 韓·中 국교수립과 중공의 부분적 시장경제제로의 변화는 북한체제 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 (4). 경제 문제에서 오는 요인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북한 현실로 볼때 북한체제 변화위기의 가장 심각한 요인이 바로 이 경제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自力更生의 기치아래 자립경제를 주도하든 主體經濟는 오래전에 그 한계성이 노출되었고 이를 극복 하고자 하는 노력이 '85년 『습營法』이나 '89년이후 시도된 『경제특구』설치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낙후성은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수준 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경제적 실패는 사회주의 체제, 특히 戰時動員的 지배체제의 장기적 지속성에서 기인된 현상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과 사회주의의 보편성이 이중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수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경제의 위기가 가장 큰 체제변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화폐 개혁의 실패에서 오는 인민 동요 보도는 실증적 사례가 된다.

#### (5). 사회 문제가 안고있는 요인

다섯째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갈등과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것으로 보도 되고있다. 직접적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이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사회구조에서 온다고 본다. 북한사회는 비록 평등이 강조 되고 외부적으로는 상당한 평등지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북한사회도 여전히 新階級的 특권지배층이 형성 되었으며 이들에 의한 新貴族的 지배권력의 향유가 자행되고있고 산업의 성장에따른 사회분화, 도시화등은 비공식적 정보 유통체계를 발달케하여 겉차 사회적 획일성이나 대등성은 약화되고 그 결과적인 성격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상과 같은 변화 위기 요인들은 결국 북한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화의 정치체제로 귀결될수 밖에 없는 자기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사회를 인식함에 있어도 북한체제 역시 체제 변화 진행 과정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 3. 북한체제 변화 전망

#### 1).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변화의 요인들을 찾아 유형화 하는데는 몇가지 요인별로 나누어 설명 될 수 있다. 즉 개혁의 주체를 중심으로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

터의 개혁' 또는 변화의 속도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체제 변화의 주체나, 방법에 의한 구체적 변화분석이 아닌 소련, 동구, 그리고 동구와는 구별되는 변화를 이루워 가고 있는 중국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피므로써 이들의 변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構造化하고 類形化 하여 북한 체제 분석의 틀로 삼으려한다.

#### (1). 소련 변화

소련에서 체제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 이었다고 할수다. 이것이 강하게 제기된 이유는 소련에서 경제가 실패하였기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하락, 생필수품을 중심으로하는 소비재의 절대부족, 제조업기술의 낙후성, 등 경제실패는 소련경제 구조의 본질인 중앙집중적 관리체계(계획경제)에서 오는 내부구조의 경직성, 기술혁신의 동기부재 등에 의한 것이었고 여기에 過多한 국방비 지출 역시 경제실패의 일조가 되었다. 특히 경제실패와 관련된 萬惡의 근원 가운데 중요한 요인이 관료적 경직성과 관료의 부정부패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제도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었을때, 그 제도적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움직이는 인적 요소의 변화가 함께 수반 되지 않을수 없었고 이를 위한 대안 정책이 新思考政策 으로 나타났다. 개혁에 대한 주요 저항체는 노멘클라투라(Nomanklatura)라는 인적 요소이었다.

결국 현실적인 경제적 실패와 부정관료 척결을 성취하고 '보다 나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안논리를 '레닌주의로의 복귀로 '강조하면서 개혁을 위한 일차적 처방은 행정-명령체계의 관료주의적 행태 극복으로 발전 하여갔고 이는 소련정치 체계의 근본질서 전반에 확산 되어 갔던 것이다. 개혁의 기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업 경영에 대한 자율화 였다. 즉, 자기금융과 자율경영의 토대위에서 기존의 타성적인 중앙통제적 경영기법으로 부터 수요에 걸맞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생산케 하는 경영의 자율화 정책이다. 둘째, 임금체계의 개혁이었다. 일반근로자들의 균등임금제에 의한 저생산 누적을 극복 하고 "압력으로 부터 지렛대 및 인센티브로!"라는 기치아래 임금격차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임금 상승 의 유기적 상호관계의 유지가 임금체계 개혁의 주요 골자이다. 셋째, 상품가격 개혁을 들 수있다. 기존의 가격체계는 官定價格이 주종이었다. 이러한 가격체계는 재화,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불가능 하게하였으며 따라서 과학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유발이없고 또 식품유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서 오는 병폐를 극복 하므로써 생산자는 생산자데로 높은 인센티브에 의해생필품에 대한 생산증대와 품질 향상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룩하려 한 것이었다. 넷째, 과

학, 기술혁신 이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가 부처 또는 局間 과학.기술센터  
 즉, 문제해결 중심의 위원회 설립이다. 다섯째, 주요개혁 내용은 정치체제 개혁이다.  
 즉, 당-정 권력분배의 적정화, 공개와 대중참여의 제도화, 소비에트 의장과 지역당 제1  
 서기직 겸임, 소련식 대통령제 신설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페레스트로이  
 카의 핵심적 경제개혁의 진행과정을 주요과제별 시기별 중심으로 대별하면 (가)사회  
 경제적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경제관리 메카니즘의 개선(1985-1987년), (나)경제관리  
 메카니즘의 발본적 개혁을 위한 민주화(1987-1989년), (다)생산관리체계의 발본적 개혁  
 을 위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시기(1989-)로 나눌수 있다. 역시 개혁 중심세력은 공산  
 당 지도부에 속하는 개혁 지향적인 지배 엘리트들이었다. 이들은 고르바초프를 중심으  
 로 정채되고 노령화된 브레즈네프 시기의 보수적 세대들을 퇴진 시키며 개혁을 주도하  
 였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수파, 중도파, 급진개혁파, 등으로 나뉘어졌  
 던 지도부가 엘친의 등장으로 점차 급진개혁파가 권력의 핵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위  
 로부터 시도된 개혁의 방향은 초기 관료주의적 비민주성의 제거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  
 는 범위내에서 점차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에로의 강조로 오히려 체제는 강  
 화 되는듯 하였다.

<sup>5)</sup> 이러한 개혁 과정은 변화의 폭이 초기에는 사회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서  
 점차 확대되어 전면적인 사회주의 질서의 부정으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구질서의 결정  
 적 부정은 보수반동적 쿠데타의 극복 이후였으며 그러다가 극단적인 구질서의 해체가  
 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다. 민족 분리를 표방하는 각 공화국의 독립선언은 구  
 질서를 표방하는 소비에트연방(USSR)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 I S)의 구성으로 이어  
 지면서 소련 체제변화는 급속도로 가속화 되었다. 결국 소련의 체제변화는 경제적 침체  
 가 당지도부의 위기의식을 낳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진적 세력이 모순해결의 대안  
 으로 등장하면서 그 변혁의 폭을 전면적인 체제 부정으로 확대시켜 나아간 형국이었  
 다.

## (2). 동구 변화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은 그 양상과 발생시기가 상이하여 차별성이 있지만 대  
 체로 일반적인 유사성을 찾을수있다. 혁명 이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반슬라브적 전통과 서구적 요소가 상당히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사회다. 이러한 동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으 | 안전지대로 혹은 위성권으로 편입 된것은 스탈린의 철  
 처한 계획적 지도와 동구인민의 '반파시즘 부르조아 민주주의 옹호'투쟁의 언장 선상

4) 안원택, 소련, 그 열정과 좌절 (서울:인간사랑, 1989), pp, 219-224.

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북한사회와의 변화와 그 전망, 전개서, p. 9.

에서 지지되었던 사회주의 혁명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혁명의 성격과 사회구조 및 인민의 계급의식 수준이 소련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후 스탈린은 東歐諸國에 대하여 소련의 통치모델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들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소련의 대외정책에 완전히 추종하도록 하였다. (유고는 좀 다른 형편이었다.) 따라서 동구 나라들의 변혁 요구는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 운동 및 탈소,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그 운동의 주체 역시 재야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 대중이었으며 개혁 방법 또한 인민 봉기였다. 이러한 변혁요구는 체제성립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에도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그럴때 마다 소련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으로 진압되곤 하였다. 56년 폴란드와 헝거리의 인민 봉기와 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중 봉기였다.<sup>6)</sup> '80년대 들어 본격화 된 동구개혁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는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내정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88년 소련-유고간 상호 협력 합의서에 이를 재확인 한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동년 7월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후 발표된 합의 문서에서도 동맹국들이 국내정책에 관한 각국이 자주적 결정권을 가진다고 선언 하였다. 이러한 동구의 전통적 환경과 그간 지속 되어온 一岩的인 사회주의적 국제주의가 완화되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독자노선을 인정 하므로써 동구의 변화는 가속화 되었다. 80년 이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중요 변혁 내용을 간추려 보면, ※. 유고— 유고슬라비아는 1948년 소련에 의해 코민포툼에서 축출된 이후 외로운 독자적 노선의 사회주의 국가를 경영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성공한다. 그러나 복잡한 민족으로 구성된 유고연방은 민족분리주의와 함께 체제개편 요구에 따라 90년 1월 개최된 유고 공산당 대회에서 당개혁의 입장으로 연방당이 해체 분열되면서 체제변화를 이룩한다. ※. 헝거리— 84년 카다르(Jonas Kadar)당수가 강행한 개혁경제정책은 시장적 가격제의 도입, 국영대기업의 분산운영, 중소기업의 국가적 후원 강화, 노동능력 임금제 실시, 기업지배인들의 운영권 책임강화, 그리고 서방기업들의 헝거리 진출, 허가등 대담한 개방경제를 통한 자유화였는데 이러한 서구적 경제영향이 카다르 퇴진 이후 재야세력들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헝거리 민주포럼, 자유민주동맹등의 조직이 나났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시장경제의 도입을 축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주장하면서 체제변화를 이룩한다. ※. 폴란드— '80년 이래의 전국적 파업을 계기로 창설된 자주관리노조인 '솔리다리티'가 중심이 되어 중앙집권적 경제메카니즘을 부분적인 시장메카니즘으로의 전환과 정치적으로도 일당 정

6). Wolfgang Leonhard, Eurocommunism: Challenge for East and West, (New York: Rinehart & Winston, 1979), pp. 106-110.



치독점의 극복을 위한 언립내각을 구성하는등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두 파로 나누워져 급진적인 변혁을 주장하는 바웬샤가 대중적 인기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므로 체제변혁을 이룩하였다. ※. 체코—'68년 8월 두브체크의 '인도적 사회주의' 개혁 정책이 말살되고 새롭게 등장한 '후사크체제'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은 상당히 이룩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권옹호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반체제집단이 나타나 77년 『현장77』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반체제운동이 현체제에 저항 해오다가 헬싱키위원회, 사회주의 재생크림등의 재야세력과 학생평의회 대표간에 형성된 『시민 포럼』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다시 『폭력을 반대 하는 사람들』의 단체로 분리되어 총선에서 이 두 단체가 다수의석을 확보 하면서 체제변화를 가져온다. ※. 루마니아—1989년 동구유럽국 중에서 가장 전체주의적 스탈린주의 체제였던 루마니아는 동년말 티미소아라시 에서 반정부자유화 인민대중폭동 일어났다. 이때 시위대에 대하여 군대가 발포하여 2천 여명이 사살되므로서 인민들의 대정부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마침 이에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다시 정부 친위세력인 보안군이 발사하므로서 정부군은 오히려 발사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측에 가담하게된다. 이후 정부군과 보안군 사이에 유혈내전이 일어났고 정부군은 체포한 차우세스쿠를 처형한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는 너무 빠른 변혁이 일어나서 인민들이 그들을 대표할만한 조직을 갖지못하여, 결국 이런 사태이후 형성된 개혁 공산주의자와군부세력 그리고 지식인들이 연합한 구국전선 평의회에 권력을 이양하므로서 체제변혁이 이룩된다. ※. 불가리아—9년 12월부터 90년 까지 정치적인주화를 요구하는 대중 폭동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지프코프가 퇴진 되었다. 90년 5월 총선에서 불가리아사회당이 다수득표를 얻지만 8월의회 간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연합 세력인 자유민주동맹에 패배 하므로서 체제변혁을 이룩한다. ※. 동독 —89년 11월 동독공산당의 저치국원 전원이 사임 하므로서 당 서기장으로 임명된 크렌츠중심의 과도정부가 수립된다. 동년 11월9일 베르린장벽이 제거되고12월 동독 공산당이 정식 종식되었으며, 90년3월 서독 주도하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그결과 서독 콜 수상이 이끄는 신정부가 탄생하였다. 결국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변혁은 광범한 경제적, 정치적 욕구분출이 구집권세력의 교체를 가져왔으며 그 변혁의 폭과 속도에있어서도 근본적이고 급진적이였다. 전통적인 반소감정, 부르조아민주주의 전통의경험, 시장 사회주의 체험등은 동구발전방향을 자본주의적 질서로의 복귀로 이끄는 특수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동서유럽의 통합적 경향과 민족부리문제는 그 복귀를 가속화시켰다. 통합된 유럽구상은 동구국가들이 서구자본주의적 질서에 하루빨리 부응 하기위하여 노력하도록 만드는 계기가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분단문제와 결합되어서는 자본주의 국가로의 흡수(동독), 민족무제를 거치면서는 내전의 발발로 (유고)구체화되어 나타났다. 7)

### (3). 중국 변화

중국 사회주의는 어떤 성격의 변혁인가? 중국사회주의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등장은 경제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경제의 낙후성 극복에 그 원천이 있다. 이러한 낙후성을 '극좌적'모험주의로 해결하려던 문화대혁명의 실패는 국가경제를 무정부적 상태로 몰아넣고 마침내 국가경제 부문간의 불균형을 확대시키고 인민의 물자와 문화생활을 방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78년 등장한 등소평체제는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의 기치아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사회주의민주주의의 강화 및 사회주의 법제의 강화가 시작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전개를 보면, 첫째 중국사회주의 혁명은 '56년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이 완결되면서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집단 소유와 국유제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 "계급으로서의 지주계급, 부농계급은 이미 소멸되었고 계급으로서 자본도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투쟁은 더 이상 주요 모순이 될수없다고 인식했다. 둘째 사회주의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제도와 이상을 뒷받침 해주는 물질 토대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중국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 되어있기 때문에 주국에서의 최대 과제는 사회주의의 물질 토대를 마련하는 경제발전 이라는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 우선의 이론으로 세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원론적 해석을 재강조한다. 즉,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는 생산관계의 변화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올수도 있다." 는 모택동과 좌파의 주장은 비마르크스적 견해라고 비판하고 "생산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생산력"이라고 단정하고 생산력의 발전만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가능 하다는 것이다. 넷째 따라서 생산력을 저해하는 이데올로기, 제도, 정책은 개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괄적인 경제구조의 개혁과 정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 개혁파들은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든가 "實事求是"를 내세우는 기치아래 毛-마르크시즘에 대한 고정적 관념으로 부터의 사상해방을 추구하여왔다.

'87년11월7일자 『인민일보』는 러시아 70주년 기념 사설에서 "10월 혁명은 마르크시즘의 기본원리와 당시의 세계적 상황과 러시아 사회의 구체적 실체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레닌주의도 제국주의의 불균등 발전이란 새로운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고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 마르크시즘의 보편적 원리와 러시아의 구체적 현실 조건의 결합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의 마르크시스트들도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구체적 실체를 결합"하므로서 마르크시즘을 발전시키고 중국적 사회

7).안정수외, 『소련·동구·중국·북한』(서울:문우사,1991), pp.100-120). 김달중편, 『동구·소련관계와 개혁정치』(서울:법문사,1988), pp121-159. 참조.

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치면서 여타의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 조건아래서 실현한 공업화와 생산의 상품화, 사회화, 현대화를 실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유제의 형태와 시장의 조절작용을 이용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만의 특유한 것이아니고 더우기 이를 자본주의의 부활이라고 경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토대위에서 등소평체제는 모택동시대에 나타난 여러가지 大災難(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개혁을 시도 하였던바 그것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강화및 사회주의 법제의 강화로 나타났다. 즉, 첫째로 대담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 둘째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경제체제개혁 단행으로 개인의 이윤추구행위 허용과 가격및시장기능의 부분적 수용으로 상품경제를 발전시킨다. 셋째 당과 국가기구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강조하면서 당의 一元化 嶺導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론의 부분적 수정으로 당과 국가 , 당과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 한다. 넷째 등소평정권은 사상해방을 강조하면서 문화 혁명시대에 강조되었던 모택동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므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강조한다는것으로 구체화 된다.<sup>8)</sup> 중국의 개혁은 그 속도와 범위에서 여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유형을 달리하고있다. 즉 중국개혁의 특징은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의 철저한 고수이다. 경제개혁을 하되 계획경제법칙의 바탕위에서 운영 되어야하며 ‘시장경제’는 계획경제 의 보조적 하위순위임을 고수한다. 계획경제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상품경제에로의 발전이며 상품경제가 결코 사회주의경제를 추월 할수 없다는것이다.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통일성의 문제는 중국경제에서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으로 나타나는데 지령성 계획을 지향하고 지도성 계획경제의 도입을 시도한것이다. 이에따라 지방 또는 도시의 권한이양을 통한 기업경영의 자주권확대 , 세계개혁 , 금융개혁, 등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체제의 개혁 , 개방도시와 경제특구확대, 기술과 외자도입촉진등을 실시하였다.<sup>9)</sup> 정치분야에서의 개혁은 경제개혁의 효률을 위해 국가통제력의 적절한 조정, 즉 당 .정분리를 통한 국가관리 조직의 재정비와 권력해방을 시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위해

8). 서진영,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민족지성: 서울; 1988), pp. 100-102.

9). 광태운, 『중소 경제개방의 결정적요인과 구조적 변화』,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중소연구, 제10권, 1986년 봄호, pp. 200-220.

법률화와 제도화를 추구해가고있다. <sup>10)</sup>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혁은 專 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개혁의 유형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경제특구를 설정하며 대내적 수준에서 시장경제구조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하위 형태를 취하므로써 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질서를 고수 하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내용들을 분석한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들을 유형화 할 수있다. 첫째 변혁의 요인은 정치권력구조의 문제(정치적 비민주주성과 전체주의성)와 경제적 저발전(계획경제에서오는 특수성), 둘째 변혁 주도세력은 지배층 내부 집단과 민중봉기에의한 변혁, 셋째 변혁범위는 근본적인 체제 변혁과 政經分離에 의한 점진적 체제내의 개혁으로 이해된다. 체제발전 전망은 대체로 자본주의체제에로의 변화와 사회주의 체제 토대위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할것으로 전망된다.

## 2). 북한 체제변화 가능성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을 찾기위해서 북한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각분야에서 여러가지 변화 징후들을 찾아 이미변화 하고있는 사회주의 체제 변화유형에 비교 분석하므로써 북한 체제변화 가능성을 예측 하려한다.

### (1). 주체사상의 변화 가능에 대한 문제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나타났다는 주체사상의 현실적 한계성 여부문제이다. 주체사상은 근본적으로 김일성 체제 공고화를 위해 체계화된 논리이지만 대체로 '80년대 초반 까지는 주로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여왔다. '50년대 중반 이후 중. 소 이념분쟁으로 인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이 어렵게 되자 '自力更生'원칙아래 경제건설을 주도하였으며 이럴때 주체사상은 전인민의 노력동원을 유도 하기위한 이념적 토대로서 천리마운동 ,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소조운동 , 속도전등을 발전시켜 북한사회 뿐만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세계 까지도 지배하는 이념적 지주로 작용 되어왔다. 이러던것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소련을 중심하는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받게되자 사상단속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10).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중소연구』, 제11권, 제3호 1987년 가을호, pp.280-284.; 소련방 국가기업법, 자료 참조.

주체사상은 경제건설을 위한 전인민의 노력동원을 위한 이념에서 오히려 최근에는 체제강화를 위한 정치적 논리체계로 변용되어 더욱 강하게 교육 되어지고 있다. 김일성은 '8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오늘 공화국정부 앞에 나선 당면한 투쟁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려면 아직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합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사상과 기술, 문화로 일색화하는 심각한 거창한 사회적 변화과정이며 그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sup>11)</sup> 더 나아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적 이론체계를 주체사상에 도입 발전시켜 인민에게 강조하였던바, ‘우리 당 안에는 주체사상 밖의 다른 사상이 있을 수 없으며 있을 필요가 없다.’ ‘참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자주시대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요구와 각계각층 군중의 요구, 민족의 자주적 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우월한 사회주의로 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한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 집단의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에대한 충실성과 집단주의적 생명관속에서 패배주의와 형식주의를 경계해야한다<sup>12)</sup>. 이상과 같은 사상적강조는 기존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발전노선의 기본틀을 견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80년대말 사회주의권 제국의 체제변화완성과 남한의 북방정책 성과로 부터 밀려오는 외적압력을 타개하고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민주주의”라는 사상교육을 '89년 이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의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논리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정일 담화는 주체사상체계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다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 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것이라 할수있는데, 즉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그 관리도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되어야합니다.”<sup>13)</sup> “우리당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투쟁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사상리론과 정책은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선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4)</sup> 등등 — 이렇게볼

1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과정』, (서울:1991), pp.12—14.

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 “사회주의 완전한승리를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 문 참조.

1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

때 80년대 주체사상의 중심 강조점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개념이었다. 즉, 북한 사회의 통합을 목적으로 발전된 개념인 이것은 수령-당-인민대중은 결코 분리될수 없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라는 것이었다. 특히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라고 하는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임을 뜻한다. 대중이 여기서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사회정치적 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 사상, 생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연결을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수 있다는것이다.<sup>14)</sup> 그런데 '91년 김정일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문 체계의 중요강조점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는 상당히 다르게 주장된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수령중심의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를 강조한 주장이라면 김정일 담화는 인민대중중심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권 개혁과 남한의 북방정책의 확대에서오는 환경적 변화에 대해 자체 체제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주체사상을 재강조 하면서도 인민대중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여타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체제수호정책을 더 강화 전개 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 역시 사회주의권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당 관료주의와 경제적 문제, 인민대중의 정치적 참여확대, 당 의 배타적인 권력독점의 문제,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히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변화모색을 강구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 (2). 정치권력구조의 변화가능에 대한 문제

### (a). 북한권력 구조의 현황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과 국가기구로 대별된다. 당은 1949년 6월 남로당과의 합당으로 출범한 조선로동당이 김일성을 중심하는 항일무장투쟁 세력, 김두봉을 중심하는 언안파 세력, 허가이를 중심하는 소련파 세력, 박헌영을 중심하는 토착적공산 세력등이 함께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운영되다가 50년대말 당내 노선투쟁과 권력투쟁 과정에서 반김일성 세력을 반중파 사대주의 세력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김일성 중심의 一人指導體制로 변한다. 즉, 1956년 제3차당대회에서 당지도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다 조 불패이다.”; 1991년 5월 27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김정일 담화문 참조.

14). 김일성이가 시정연설속에서 피력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 대한 사상적 설명은 『로동신문』(1986년12월31일자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연설문을 참조.

선민민의 혁명전통을 가미하였고 다시 '61년제4차당대회에서는 당지도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한단계 더 김일성화하고 마침내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당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다가 주체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에따른 당기구개편을 단행 종전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제를 폐지하고 비서제를 도입 총비서직과 또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 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함께 김일성이 장악하므로써 조선노동당의 권력구조가 집단지도체제에서 완전히 김일성 유일 지도체제로 확립된다.뿐만아니라 김일성 이후의 권력승계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 '73년 김정일을 노동당 비서국의 조직및선전.선동 담당비서로 등용하기 시작했다.<sup>15)</sup> 따라서 오늘의 당기구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정치국과 그산하에 상무위원회, 그리고 비서국으로 구별된다. 국가기구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직후는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주권 및 행정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그러다가 1954년 제1차 헌법개정에 의해 기존의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와 그 집행기관인이며 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분리하였고 다시 '62년 제 5차 개헌을 통해 최고회의에서 선거하였던 내각구성권을 삭제하므로써 최고인민회의 기능이 약화되어었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새롭게 채택되면서 국가주석제가 채택되고 그산하에 중앙인민위원회 을 두어 최고 주권 지도기관으로서 정부원을 관할하고,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와 사법기구로써 중앙 재판소 와 중앙검찰소등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최고인민회의의 지위가 약화된 반면 국가수반이자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주석과 국가주권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주석이 수위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난 내각은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인 정부원으로 바뀌어 실질적으로 주석을 정점으로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체계의 확충과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 특수성을 확립하려는 정치적 제도화의 과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이렇게 구축된 북한권력 구조는 오늘날에 와서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있다. 첫째, 당관료가 당, 행정기구, 및 주권기관간에 겹직제도와 김일성의 종신 권력독점의 형태를 취하고있다. 다시말해 당의 핵심인물이 행정부서의 장은 물론 의결기관의 간부직까지 겸하고있어 국가의사 결정이 당위주로 결정된다. 김일성은 노동당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 서기국 총비서,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행정기구에서는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수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있다. 둘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하부조직이 軍을 포함한 각기업소, 농장, 행정및사법기관등의 예하조직에 파견되어 국가의 각기관에 당의 명령기능이 전체를 장악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15) 서영진편, 현대중국과북한40년, (1989 ;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pp.250-257.

16) 서진영편, 전개서, pp.269-271.

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인 지난 '90년에는 -3.7% 실질경제성장율을 나타내는 등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치고있다.<sup>18)</sup> 둘째, 북한경제 구조의 문제로서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경제체제 구조와 메카니즘은 경제운영의 방법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데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경제체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공동소유제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계획생산체제를근간으로한 체제였으며 이런 사회주의경제 일반원칙과 함께 북한의 독특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자력강생의 경제론리에 따라 폐쇄경제를 지속 시켜 오고있다. 그 결과 1989년 북한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8.6%나 감소하였고 그 무역액은 47.9억불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무역적자는 1989년에는 67.8억불로 1988년에 비해 5.8억불이 증가하므로서 무역 적자폭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있다.<sup>19)</sup> 그리고 수출상품 구조면에서 보면 농산물이나 광산물등 일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주로 기계설비나 원자재등이어서 당분간 북한의 무역개선의 문제나 외채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셋째, 북한은 스탈린적 경제건설방식인 중공업우선정책을 채택하므로서 현실적으로 경공업중심의 생필수품과 농산물 부족현상이 큰 문제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이 당면하고있는 경제위기의 문제점들은 기술개발이나 국제경쟁력의 확보와같은 비교우위적 경제건설과 같은 문제가라기 보다 식량이나 생필수품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경제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부문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태국으로부터 50만톤의 쌀을 '년에 도입 한 바 있고 향후 2-3년내에 1백만톤의 쌀을 도입 하기로 합의 한바 있다. 또한 산업의 원동력인 원유공급에 있어도 종래는 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국제가격의 30%, 혹은 50%정도의 가격으로 도입하던 원유를 1991년과 1992년부터는 국제가격으로 경화 결제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것으로 판단 되고있다. 넷째, 과학기술 수준과 기계설비의 노후성의 문제가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을 뿐아니라기계설비의 노후성 때문에 생산성이 감소 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소비재 생필수품 생산의 저하는 북한주민의 삶의 양적 질적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있다.

18). 정상훈외, 『북한경제의전개과정』, (서울;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40-246.

19). 이태욱, 북한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67.



수령, 당, 대중의 지배와 복종관계를 규정하는 공식 이데올로기로써 주체사상이 작용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 (b). 권력 구조의 변화 가능성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는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이를 유지하고있는 정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의 근본적 변화없이 기대할수없다. 왜냐하면 권력구조의 정착제가 주체사상 논리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없는 김일성 유일영도 체제는 존재할수없다. 그러므로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새로운 해석의 변화없는 북한권력체제는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수없다. 그러나 주변의 정세의 변화와 북한권력 형성인자가 새로운 세력, 예컨대 혁명1세대의 지도층이 사라지고 새로운 전문.기술관료로 전면 교체되고 동시에 인민들의 민주화 의식과 자유화 의지를 통한 다원적요소들이 어느정도 형성해 갈때 점진적 혹은 급진적 구조변화를 전망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자체권력구조의 지속적인 유지위해 적응적 차원의 전술적변화는 지속될것이다. 사실인즉, 북한은 1990년이후 김정일의 세습체제 구축확대작업과 移讓完遂를 위해 새로운 전문.기술관료가 黨.政務院.軍 등 국가 기구에 참여되어 이념관료인 혁명일세대와 많이 교체되므로서 효율 지향적 체제로의 이행도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본다.

### (3). 경제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의 문제

북한의 체제변화 요인에 가장 가능요소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본다. 그것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이 경제적요인에 가장 크게 좌우 되었던 사실로 유추될수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오늘의 경제현황이 어떠하며 경제 변화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찾아 본다.

#### (a) 북한의 경제현황

오늘의 북한의 경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후 가장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현황을 몇가지측면에서 분석하면 첫째, 경제성장 지표상으로 볼때 북한은 '50년대 전후복구 경제과정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60년대의 제1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에도 연평균 12.8 %의 성장을 이룩하는등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1차 6개년 경제계획 기간(1971년-1976)과 제2차 7개년기간(1978-1984)부터서는 그 성장속도가 서서히 둔화되다가 제3

17).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pp. 299-303.

( 표 1 ) 남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kwh) 및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의 연평균증가률(%).

연도	소비량(Kwh)			생산량증가률(%)		소비량증가률(%)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65	237	1,196		4.1	6.4	12.1	6.6
1985	1,241	2,118		9.3	2.7	5.0	2.9

(자료: Word Bank, Word Development Report 1987.p.219 재인용)

결국 북한의 경제는 제도적으로 생산동기유발이 없이 전체인민의 노력동원만을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강조하는 구조이고, 이 노력동원을 위해 끊임없이 사상사업을 통한 노력동원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60년대 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80년대 속도전운동' 등은 모두 노력동원을 선동하고 이에따른 증산 및 계획량 목표달성운동을 전개하는 작업들이다. 20

(b). 경제체제 변화 가능성

북한당국은 최근에와서 그들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위기가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에 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정권도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50년대와 60년대에 있었지만 역시 사회주의 경제원칙에 대한 집착과 정치권력구조의 폐쇄성 때문에 크게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과정에서 60년대부터 기업에 독립체산제를 적용하거나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기업노동자들의 물질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분조관리제를 적용하여 농민이 농토와 농기구에 대한 분조별 책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농민 소유 30평 내외의 텃밭에서의 생산물은 농민시장에 자유롭게 매매토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해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 해야하며 상품경제의 전면폐지, 농민시장의 궁극적폐지를 선

20). 북한연구, (1991년 겨울호, 제2권 제4호 통권6호), "북한의 공장내 노동단체활동과 노동동원", pp.149-156.

언하면서 공산주의 단계로 진입을 추진해왔다.그러다가 개혁적인 경제변화를 가져온것은 70년대중반에서 시작 80년대 중반이후이다<sup>21)</sup>. 즉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서방과의 무역이 강화되면서 84년 ‘합영법’ 채택을 통해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이 유치되고 60년대에 채택된 독립채산제가 예술공연 단체에까지 확대 적용되는등 상당한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자체 한계로 큰성과를 거두지못하였고 80년대 말 동구및 소련의 급격한 체제변화가 북한체제존속에 위협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오히려 체제유지강화를 위해 사상강화작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은 주춤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장없이 는 북한체제자체가 동구의 재판이 될수있다는 위기의식으로 90년부터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기도하고있다.그첫째변화작업이 ,북한의 對美.日 관계개선이다. 즉 북한은 일본과의수교가 그들의 외교교립을 극복하고 경제,기술교류를 추진하는데있어 중요한 파트너가되며, 대일관계개선에서 얻어지는 약80억불정도로 예상되는 청구권자금을 활용할수있다는 판단을 하고는것으로 본다.따라서 6차에 걸친 조-일 국교수교회담이 이룩되었으며 청구권과 관련된 실무협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있다. 한편 대미관계에서도 90년에 들어서면서 개선접촉이 활발하게이루어져 지금까지 북경에서 진행되던 접촉을 92년1월에는 뉴욕에서 북한의 노동국제담당비서인 김용순과 미국의 아놀드 캔터 국무성 정무차관 간의 회담이 열리는등 관계개선에 주력하고있다. 둘째는 북한의 對南韓 관계개선의 변화태도이다.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물론 이것이 대남 혁명전략의 수정이라는것은 분명 아니라고해도 실제적으로 남북상호간에 화해 불가침 및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합의되었다는 사실에서 변화가능을 기대한다.남북관계는 지난 2월19일 합의서발효이후 지난달 제8차고위급회담까지 양정부간에 협력을위한 상호접촉이있어왔고 민간차원에서 1989년의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방북 1992년 김우중대우그룹의상호경제협력협약,김달현 정무원부총리의 남한방문 등 민간 , 정부차원의 접촉이있었고 특히 북한이 두만강지역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으로 이지역을 중국의 경제특구와 같은 개발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북한이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노력으로볼수있다.또한 지난해 12월 함북의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것을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채택하고 나진, 선봉지역과 자유무역항이 될 청진지역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투자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특혜와 편의가 보장된다는등 변화를 보이고있다.<sup>22)</sup> 이와같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변화나 정치체제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가능한가 하는것은 미지수이며 또한 이러한 경

21). 언하청, 「최근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북한경제의 전개과정』(경남대학교국동문제연구소, 1990), pp. 255-260.

22). 내외통신 , 1991년12월 31일자 참조.

제변화의 성과 역시 어느정도일것인가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더우기 최근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있는 간첩조직활약등은 남북관계개선에 악재로 남는다.

#### 4. 결 론

지금까지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몇가지 가능성을 조망해보았다.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동구사회주의 변화요인과 어떻게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 때문에 북한사회의 변화는 어떠할것인가를 결론으로 정리 하고자한다. 먼저 그문제점은 첫째,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문제이다. 전체주의체제 일수록 公式的인 정치이데올로기가있어 이것이 모든 체제를 강화 시키고 動員化시키는 체적과 사탕이 되고있다는 역사적 교훈처럼 북한변화에서도 이 주체사상이 문제이다.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唯一的體制로 구축 강화 될 수 있었던것도 주체사상이므로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나 수정 내지 부정은 곧 김일성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體制 危期가 있을때마다 주체사상의 비민주성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주체사상에 의한 정치교육이 강조되어왔다.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 창조적 적용으로 새롭게 창안 되었다는 주체주의야 말로 북한체제의 민주화에 가장큰 걸림돌 이다. 둘째, 정치권력구조의 성격인데 首領의 唯一領導體制성격으로서 이러한 권력구조는 김일성 생존시는 물론 후계자인 김정일 승계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북한의 수령론에 예시한대로 북한주민의 수령에대한 충성과효성은 육체적 생명보다더 중요한 것으로 강요받고 그렇게 길들여 왔으므로 본질적으로 이러한 충성과효성심을 극복할만한 요인이 없는한 변화되기어렵다. 또한 수령의 개념이 특정한 개인적 인간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집체적 의견을 수렴한 腦首로서의 역할로 정의하고있어 이를 강화 수행하기 위해 계속적인 혁명적 균중노선을 강조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정부는 후계자의 안정적 승계와 경제적위기 극복 그리고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적환경의 압력등에 대처하기위해 어느때보다 혁명적 균중노선을 강조하고있으며 이런 점에서 김정일을 중심으로하는 혁명2세대들은 對日修交나 對美關係改善등으로 국내 경제발전을 유도하려하면서 이들의 효과를 위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영웅파라배우기운동’, ‘90년대 속도창조운동’, ‘증산-절약 모범작업반 운동’, 등 각종 대중운동을 더욱강화 전개하고있는 실정이다. 셋째, 경제적문제인데, 앞서살폈듯이 북한은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상당히 대담한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원칙을 실용적이고 효율중심으로 개편할것으로 본다. 그것은 소련이나 중국의 개혁에서 초기에 적용했던 물질적동기 부여정책의 확대, 중앙집권적 경제건설방식에서 분권화의 확대, 도급정책이나 실질적인 독립채산제 등을 내용으로 할것이다. 이것이 어느정도 유도되면 시범적으로 일부분의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에 대한 임대방식의 채택과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혹은 상점과같은 서비

스업 부문에까지도 개인적 소유권과 재산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카니즘의 형태로 전환할 수도있다고 본다.

이상의 몇가지문제들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면 밑으로부터의 인민봉기나 공정쿠데타와같은 대변혁이없는 한 단기적으로는 소련을 중심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식 실용주의 노선의 체제전환을 꾀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혁명적 균중노선을 더욱 강조하면서 생산의발전을 도모할것이다.적어도 지나친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사태나, 동구식 붕괴는 회피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개혁을 주도할것이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체제강화를 도모할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 전망으로는 오늘의 세계질서가 脫理愈化속에 대립갈등보다는 상호의존과 민족이익 추구라는 실리추구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어지므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만을 고집하는 정책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격고있는 공통된 고민을 해결 할 수 없을것이다.사실 아직 북한은 인민대중이 절박하게 개혁을 요구할만큼 불만이 크지않은 상태이기때문에 정치경제 체제를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체제로 운영되고있지만 경제수준이 양적-외연적 발전단계에서 질적-내포적 발전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개혁과 정치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해 본다.

